
202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4. 4



기획재정부

- 「2024년도 기획재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2024.4.)
-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044-215-2530)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702호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27
II. 일반 현황 및 시행계획의 개요	43
1. 기획재정부 일반 현황	4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47
III. 세부 추진계획	53
1. [전략목표 I]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53
2. [전략목표 II]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119
3. [전략목표 III]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157
4. [전략목표 IV] 재정인프라 혁신	212
5. [전략목표 V]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261
IV. 환류 등 관련계획	304
1. 이행상황 점검	304
2. 평가결과 환류 체계	306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307
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321

1. 그간의 정책성과

1 경제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경기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경제활력 제고)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민생·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을 확충을 위한 체질개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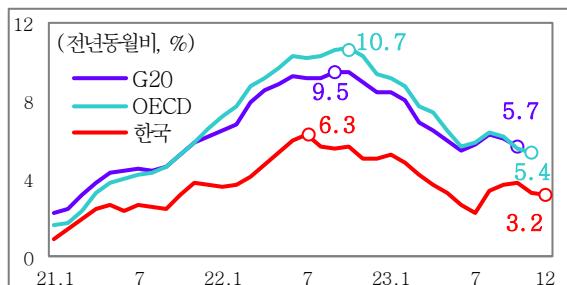
- (정책대응) 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경제 상황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 조치를 적기에 마련*

*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물가안정대책(2.15), 내수활성화 대책(3.29), 경제정책방향('23.7.4, '24.1.4), 추석 민생대책(8.31) 등 발표

- (주요성과) 글로벌 교역 위축·반도체 업황 침체 등 유례없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물가·경기 등 상대적으로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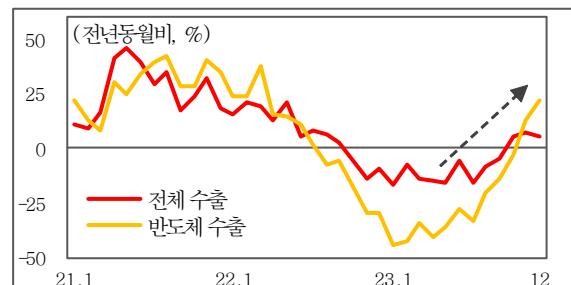
* '23년 성장률(%): (한국) 1.4 (선진국) 1.6 (독일) △0.3 (네덜란드) 0.2

주요국 물가상승률 추이



* 출처 : 통계청, OECD

전체·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 출처 : 관세청

- (물가의 안정적 관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관세면제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최근 OECD 평균을 하회하는 3% 내외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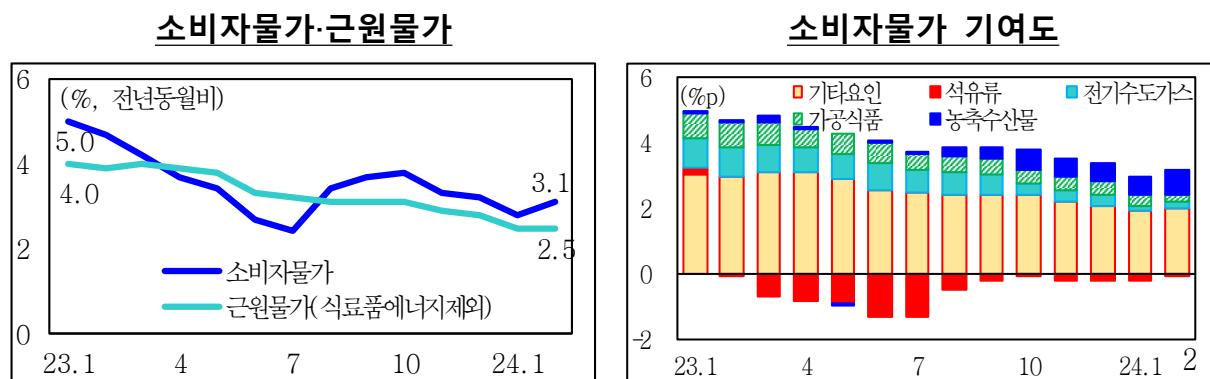
* OECD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22.7)10.3 ('22.12)9.4 ('23.7)6.1 ('23.12)6.0 ('24.1)5.7

* 한국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22.7)6.3 ('22.12)5.0 ('23.7)2.4 ('23.12)3.2 ('24.1)2.8

-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여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 중반으로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

* '24.2월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 (한국)2.5 (미국)3.9 (영국^{1월})5.1 (OECD^{1월})6.6

- 다만, 최근 농산물·석유류 영향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하락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24.2월 3.1%)



-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정부 관리노력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년 연속 하락

* 가계신용 증감률(%), 전년말비): ('03)1.6 ('20)8.1 ('21)7.7 ('22)0.2 ('23)1.0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9)95.0 ('20)103.0 ('21)105.4 ('22)104.5 ('23)100.8^e

-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규제 우회 정비 및 Stress DSR 도입 등 관리 노력 강화

- (외환·금융시장 안정)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 시장안정 노력 통해 외환시장 안정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이벤트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유·협업하였으며 서울외환시장협의회** 참석 통해 시장참가자들과도 소통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

** 민간중심 자율협의기구로 기재부, 한은, 은행·증권사·증개회사 등으로 구성

- 주요 외환 수요주체인 국민연금과 350억불 규모의 외환스왑 한도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으로서는 시장 밖 안정적인 달러 조달 창구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환 초과수요 요인을 완화
 - ※ 외국 금융기관, 국내은행에서도 한도합의 여부 및 규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직접적인 수급 안정화뿐만 아니라 과도한 시장기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보유
 - 일시적 수급 불균형 등으로 외화자금시장 내 달러 유동성 부족시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선제적 시장안정 실시
- (양호한 외채 건전성) 그간의 정부 만기구조 장기화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 외채 규모는 단기외채 중심으로 크게 감소
-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관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 단기외채가 8년 만에 감소 전환한데 힘입어 총외채 규모가 '16년(△139억불) 이후 7년 만에 감소 전환
 - * 외채증감(억불) : ('15)△270 ('16)△139 ('19)296 ('20)799 ('21)801 ('22)345 ('23)△16

↳ <단기외채>	△103	5	99	246	51	14	△303
----------	------	---	----	-----	----	----	------
 - 단기외채 감소에 따른 만기구조 장기화에 힘입어 외채 건전성 지표도 뚜렷한 개선세 지속
 - 외채 만기구조 장기화로 단기/총외채 비중은 통계집계('94) 이후 최저치, 단기외채/보유액도 '18년(3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 단기외채/보유액(% 기말) : ('18) 31.1 ('19) 33.1 ('20) 36.1 ('21) 35.7 ('22) 39.3 ('23) 32.4
- (보유액 안정적 관리) 올해 외환보유액(4,170.8억불, '23.11월말 기준)은 GDP의 25% 수준으로 안정적 수준 유지
-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보유액이 감소했으나, 세계 9위 수준*을 유지 중이며, 주요국 대비 감소율**도 크지 않음
 - * 보유액 순위('23.9말, 억불): ①中(31,151), ②日(12,372) ③스위스(8,184) ④인도(5,877) ⑤러시아(5,690) ⑥대만(5,640) ⑦사우디(4,393) ⑧홍콩(4,157) ⑨韓(4,141) ⑩브라질(3,403)
 - ** '23.9월말 기준 주요국 보유액 증감율(%): (한)△11 (일)△12 (스)△26 (홍콩)△16 (싱)△19

【 민간중심 경제 기반 마련 】

① (범부처 협의체 가동) 민간주도 경제성장, 복합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운영

* (20.4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22.5월) 경제관계장관회의 → (23.6월) 비상경제장관회의

-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통해 긴급 경제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

* '23년 총 30회 개최 /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조치 계획(3.2),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28),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9.18) 등 108개 안건 상정.

- (수출·투자 활성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출전략회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 운영 및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가동

* '23.6월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23.10월에는 13개월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

- (플랫폼 시장 육성) 혁신과 규제를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및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지원

* (구성) 기재부 1차관(주재), 과기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차관(급)

②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기반 마련, 첨단 산업 및 소재·부품 장비(이하 '소부장') 생태계 육성, 중소 벤처 활성화, 신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혁신 등 추진

- (미래 성장기반 마련)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마련(23.2월)하고 그에 따라 후속대책¹ 및 법령 제·개정² 추진

1」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전략 등
2」 (제정) UAM법, 양자기술법, 스마트농업법 등 (개정) 뇌연구촉진법, 스마트제조혁신법 등

- (첨단·소부장 생태계 육성) 첨단 생태계 조성을 위해 7개 첨단 특화단지,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3.7월)하고 세제¹·금융²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2」 '23년 12.9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

- (중소·벤처 활성화) 중소·벤처 분야 정책자금 지원확대¹⁾, 규제완화²⁾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소·벤처 분야 혁신성장 도모
 - 1) 중소기업에 총 80조원 규모(23.1월), 벤처스타트업에 1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23.4월)
 - 2)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개별펀드의 40→50%, 해외투자 총자산의 20%→30% 등
 - (신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지원,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R&D·규제·세제 등 분야별 혁신방안 마련
 - 경제·외교·안보적 가치가 높아 R&D·인프라·인력 등 집중투자가 필요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육성방안 마련(22.10.28)
 - 단기간 급증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R&D 예산 구조개혁¹⁾ 및 AI·바이오·양자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R&D 집중 투자²⁾
 - 1) ('23년) 29.3조원 → ('24년) 26.5조원(△9.5%)
 - 2) ('23년) 0.5조원 → ('24년) 1.8조원(+260%)
 -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 '23.12.13, 비상경제장관회의
- AI 등 新산업 성장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¹⁾, 산업현장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 발표²⁾
 - 1) '23.11.15 비상경제장관회의 2) '23.7.21 비상경제장관회의
 - 임무중심 R&D 혁신체계¹⁾ 수립, 규제·인력양성 등 제도 개선²⁾, 세제지원 확대³⁾ 등 정책수단별 혁신방안 마련
 - 1) 임무지향형 R&D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임무기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총사업비 : 500→1,000억원, 국비 : 300→500억원) 등
 - 2) 규제 개선 전과정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되도록 인력현황 분석체계 등 개선
 - 3)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6→8%, 대기업)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탄소중립 분야, 미래유망 기술,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 등 27개 신규 기술 추가)

- (서비스 혁신)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대책 및 추진과제 발표
 - 유망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23.6월, 서비스산업발전 TF)
 - 5대 선도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발표('23.7월, 비상경제장관회의)
- * ①물류·유통, ②금융, ③안전, ④행정, ⑤교육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산후조리 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23.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 그밖에 보건의료·관광·콘텐츠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
- *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23.3.24, 비상경제장관회의)
 (관광) 내수 활성화 대책('23.3.29, 비상경제민생회의),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23.9.4, 비상경제장관회의)
 (콘텐츠)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조치('23.3.2, 비상경제장관회의), 영상콘텐츠 투자 세액공제확대 ('23.7.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23.9.4, 비상경제장관회의)
 (기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23.8.9, 비상경제장관회의), 에듀테크 진흥방안('23.9.18,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 (지역산업 육성)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소통강화·과제발굴 및 기회발전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 등 신규 특구제도 마련·도입
 -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¹⁾ 등 개최하여 지역 소통을 강화하고,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발표²⁾
- 1) 경제부총리·행안부장관 공동주재로 신속 재정집행·물가안정·안전·에너지절약 방안 등 논의('23.1월)
 2)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등 57개 과제 발표('23.10월)
- 지방정부 주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설('23.10월)
- * (규제) 지자체가 필요한 규제특례 신청시 지방시대委 심의후 특례 부여(법안 마련중)
 (세제) 양도세·상속세·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특구 이전기업 지원
 (재정) 특구 내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지원비율 가산 등
-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여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전면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 신설('23.5월) 및 후보지 4곳* 선정('23.12월)
- *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 부산(차세대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③ (기업환경 개선)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규제 개선, 경제 형별규정 개선, 기업-정부 소통 활성화 등 추진

- (규제개선)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범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규제혁신을 지속 → 수출·투자 현장애로의 전방위 해소 추진
 - TF 출범('22.7월) 이후 10차례 TF 개최를 통해 환경·입지·신산업 규제 등 각 분야 250건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중단·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에 주력하여 15.8조원 민간투자 뒷받침
- * (사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배터리 교환 인프라 구축 등 관련 민간투자 4,100억원 집행 지원
-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테마별* 집중 규제개선 실시, 규제 샌드박스 220건 창출
- * ①순환경 활성화 방안, ②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③철도분야 규제 개선 방안, ④외환제도 개편 방향, ⑤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⑥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⑦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⑧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경제 형별규정)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규정 정비를 위해 「경제 형별규정 개선 TF」 신설('22.7)
 - 경제 형별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1~3차 과제로 186개의 경제 형별규정 개선
- (업계 소통) 기업활동 관련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추진을 위한 경제단체, 기업인 등 지속적인 소통 추진
 - ※ 부총리주재 기업인 간담회('23.6.19, 6.20, 6.26) 및 AI전문가 간담회('23.8.8), 플랫폼·에너지업계 간담회('23.8.29, 9.29), 경제단체 간담회(6대 경제단체+소공연, '23.11.1~29) 등 개최
 - 주요 업종¹·분야²별 경제단체·기업·전문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출·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개선 추진

1」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의료기술, 디스플레이, 기계·로봇 등

2」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모빌리티, 수소·동력 활성화 등 신재생에너지, AI 등 스마트물류 전환

【 경제체질 개선 】

- 경제체질 개선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 (노동개혁) 상생임금委, 경사노委 등 노·사 전문가 의견수렴 기반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 대응 지원, 이중구조 개선
 - 노사관계 안정*,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및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23.10월), 근로시간제 개편방향 발표('23.11월)
 - * 역대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5.10~의년 11.30일): (朴) 120만일 (文) 132만일 (尹) 56만일
 -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 종합대책 마련('23.12월), 상생협약 체결 확산 및 지원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 통해 발표('23.3월)
- (교육개혁) 3대 우선 추진과제(대학개혁,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선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 협의·조정
 - 조직·학사운영 등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및 대학 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부처협의 추진
 -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별 대책 마련
- *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 (연금개혁)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23.10월), 재정계산위·다충노후소득TF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논의
 -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등을 선별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23.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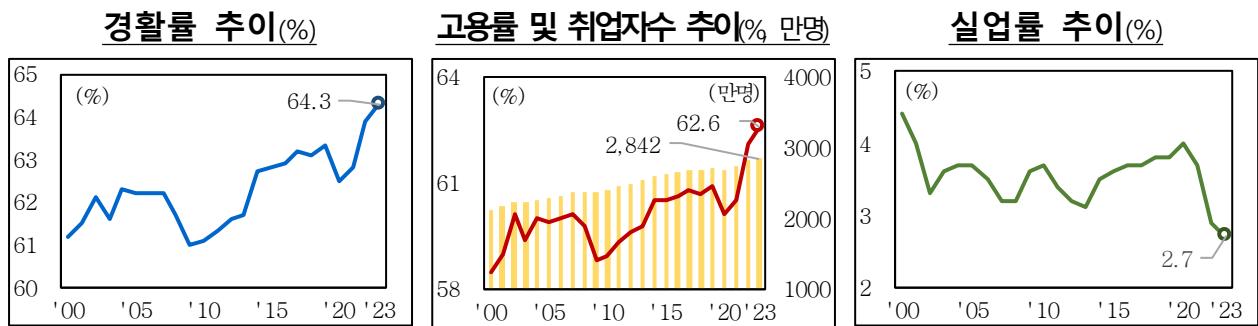
< 연금개혁 관련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

-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23.10)하고, 국민연금 운용성과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기금운용본부 역량·책임성 제고¹ 및 거버넌스 개선² 추진
 - 1」 기금운용 수익률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기능 강화, 성과급체계 개편 등
 - 2」 대표성 중심의 기금운용委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등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
 - (사적연금) 연금수령액 분리과세 기준 상향(연 1,200만원 → 1,500만원)

□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를 통한 역대 최고 수준 고용실적 지속 경신

- 매월 고용동향 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고용상황 진단 → 일자리 TF를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 발굴 및 범부처 정책 협조 유도
 - 고용동향 외에도 임금, 비정규직 규모·특성·근로여건 등 고용시장 관련 전반적인 지표에 대해 분석·진단
 - * 임금동향,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임금근로일자리동향 등
 - 범부처 「일자리 TF」 구성,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맞춤형 일자리지원 방안 마련
- '쉬었음' 청년 증가, 높은 미충원 인원 등 당면한 고용 문제에 대응한 청년 및 업종·지역별 빈일자리 대책 마련
 - *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23.11.15일), 「제1~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23.3.7,10月)

- 고용분석에 기반한 정책 마련·개선으로 '22년 달성했던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지표 실적 지속 경신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① **(기초생보)** 기준 중위소득 인상(+6.09%)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기준 중위 소득 30→32%)에 따라 생계급여액 13.2%(+21.3만원, 4인가구) 인상

② **(노인)** 사회서비스·민간형 중심 노인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23년 88.3→'24년 103.0만명 / 기초연금: '23년 32.3→'24년 33.4만원

③ **(장애인)** 장애인 연금 인상(40.3→41.4만원), 고용장려금 인원(61.1→63.3만명) 확대 등을 통해 소득보장 강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구축

- '24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고, 필수의료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혁신전략** 발표

* 권역내 의료 협력체계 구축, 고난도·중증의료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충

** 국립대 병원 우수인력 확충, 공공정책수가 도입, 국립대 병원 역할 확대

-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정책 과제를 적극 마련하고, 2030자문단, 청년보좌역 등 청년소통 통로를 통해 청년과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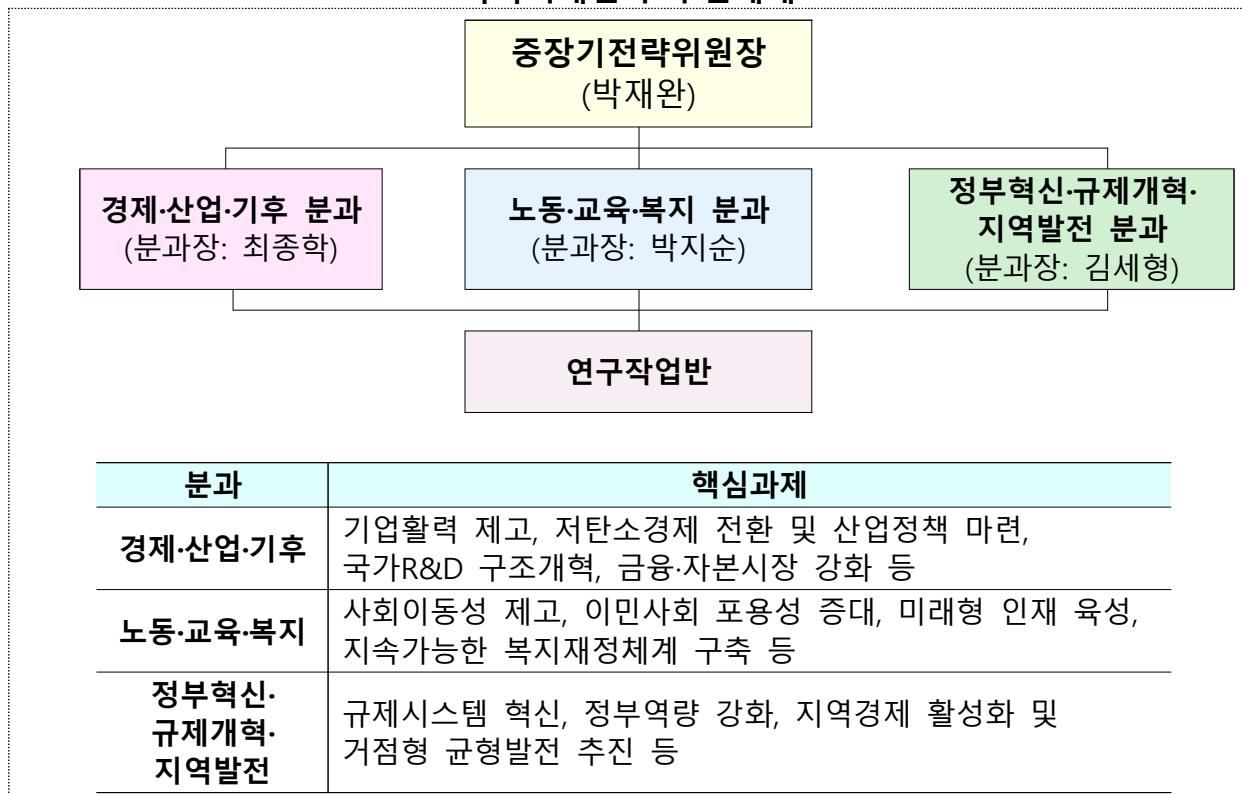
* 쉬었음 청년 증가의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마련

**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및 운영개선

【 중장기 미래 대비 】

- (미래사회변화 대응)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
- (중장기전략 수립 추진)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23.7~'25.7) 및 작업반 운영을 통해 국가미래전략 수립 추진
 - * 박재완 위원장, 경제·산업·기후, 노동·교육·복지,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등 3개 분과 산·학·연 민간전문가 19명으로 구성

<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 >



- 위원회 외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운영을 통해 중장기전략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아이디어 발굴 참여 촉진

* ①미래전략 컨퍼런스, ②미래전략포럼, ③미래이슈브리프, ④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등

- (ESG 확산)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22.12월)를 마련
 - *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확대, ESG 투자활성화,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 부문별 대책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등 발표('23.5월)
 - * 정부위원(ESG 정책 관련 부처, 8인), 민간위원(업계대표·전문가, 12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2차례 회의 개최
- (인구구조변화 대응)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발굴 및 인구 구조 대응방안 마련 등 관계부처 협업 하에 당면한 인구위기 대응
 -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23.6월)하여 분과회의 1회('23.10월), 작업반 회의 총 11회 개최하여 체감도 높은 대책* 수립·추진
 - *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발표('23.7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23.12월)
 - '23년 글로컬대학 10개교 지정('23.11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23.12월)
- (탄소중립 기반 구축)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달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정책수단 발굴·추진
 - *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 '30년까지 '18년 대비 배출량을 △40% 감축(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탄소중립 정책 수립) 2030 NDC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및 이행수단을 담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마련('23.4)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시장기능을 통해 탄소감축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23.9)
 - * 이월제한 기준 완화, 시장참여자 확대, 상품 다양화 등('23.9.20, 배출권할당위)
- (기후대응기금) '22.1월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효율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공공기관 혁신】

- 공공기관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효율성 제고
 -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①기능, ②조직·인력, ③예산, ④자산, ⑤복리후생의 5대 분야 혁신계획* 수립 및 효율화 추진
 - * 각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기관별 혁신계획 마련('22년말)
-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 최초로 14개 재무위험기관* 선정 → 재무상황 관리·개선을 위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분기별 실적점검·경영평가 반영 등 집중관리
 - * (사업수익성 악화기관 9개)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LH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개) 석유·가스·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철도공사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자율·책임 역량 강화
 - 기재부 직접 관리감독 기관(공기업, 준정부)을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43개)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대
 - *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 : (정원) 50→300명, (수입액) 30→200억원, (자산) 10→30억원
 -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 확대*
 -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수: ('21년) 35개 → ('22년) 55개
-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활성화 뒷받침
 - 부동산·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주차장 등 시설 및 심장제세 동기 등 장비 등을 민간에 신규 개방·공유

2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 (경제활력 제고) 투자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 도모

- K-칩스법 도입(국가전략기술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및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 기본공제율 상향(+7~9%p), 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 추가

** 일반 및 신성장 원천기술 기본공제율 상향(+2~6%p),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6~7%p)

*** 기본공제율 2~5%p 상향+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 추가공제(10/15%)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年 500→700만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기업상속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120억원), 연부연납 기간 확대(5→15년) 등

□ (민생경제 회복)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300~1,800만원 → 600~2,000만원)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 완화*

* (소득기준) +1,000만원(총급여 7→8천만원, 종합소득 6→7천만원), (한도액) +250만원(연간 750만원 → 1,000만원)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지출 부담 완화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

** '24년 지출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도입, '23년 전통시장·문화비 공제율 확대(10%p)

□ (미래대비)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여 결혼·출산·양육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강화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공제

** 공제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 확대(15 →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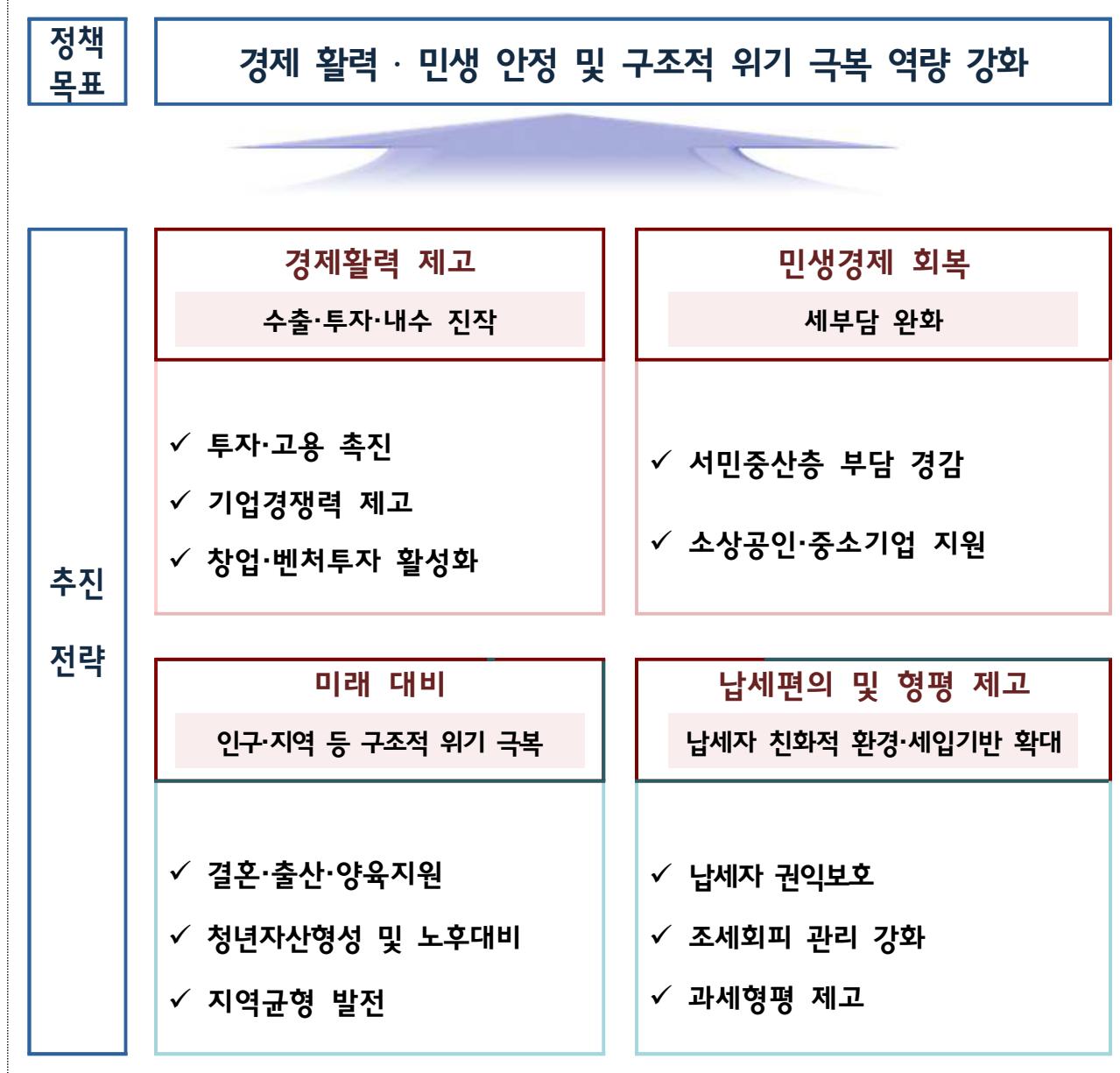
-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기회 발전특구'에 대한 단계별 세제 지원 신설*

* (이전)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운영)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한시 감면 (투자) '기회발전특구펀드'(자산 일부를 특구 입주 기업 등에 투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납세자 수용성 확보 및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 (권익보호) 소액사건 범위 확대, (편의 제고)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참고 : '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3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 ('22년 2차 추경)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총력 대응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채무부담 경감 및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 ①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②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 ('23년 예산) 건전재정 기조 전환 下 핵심부문 집중 투자

- ❶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그간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5.1%, '18~'22년 8.7%)
- ❷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필수소요 충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24조원, 통상의 2배 수준)
- ❸ 국정과제의 확실한 이행(부모급여, 병 봉급 인상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편성

□ ('24년 예산) 건전재정 기조 견지 下 약자복지, 경제활력 등 중점투자

- ❶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❷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효과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삭감('23. △24조원, '24. △23조원, 통상의 2배)
- ❸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율 8.8%(총지출 증가율 3배 이상), 저출산 대응**, 산업·SOC·농림*** 분야 예산 대폭 확대

* 생계급여 '24년 +21.3만원(지난 5년 누적보다 큰 수준), 노인 일자리 100만명 돌파 등

** 저출산 예산 대폭 확대(14.0→17.6조원): 부모급여 도입, 육아휴직 급여기간 연장(12→18개월) 등

*** 산업 +7.7%, SOC +5.8%, 농림 +4.3% 증가로 경제활력 분야 집중 지원

4 재정 인프라 혁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재정여건을 분석,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총량목표와 재정운용 전략 제시

① 대통령 주재 하에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개최(6.28), 건전재정기조 견지에 대한 의지 재확인

② 건전재정기조 확립과 재정의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중기 재정운용계획('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3.9월)

- 전년 대비 '23~'27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축소하여 관리재정 수지 점진적 개선, '27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이내 관리

* 총지출 증가율(%), 본예산): ('23) 5.1 ('24) 2.8 ('25) 4.2 ('26) 3.9 ('27) 3.6

-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새정부 재정준칙안 마련(비상경제장관회의, '22.9월)

-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 (법안 발의) 9.20일, 박대출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재위 회부) 9.21일 (기재위 상정) 12.1일 (소위 심사) 12.5일

- 재설계된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신평사도 긍정적으로 평가*

* OECD('22.9) : 최근 재정준칙 재설계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환영할만한 조치 ...
관리수지를 활용하고 법률에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강화

** 피치('22.9) :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

【재정운용 관리 강화】

- 경기보완적 기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노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을 병행

-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상반기 신속집행 및 연말 이월·불용 최소화, 민생안정 정책 보강·보완의 역할을 적극 수행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2.6)의 후속·보완 과제로서 민자 추진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 발굴 → 제안 → 민자 적격성조사 → 제3자 제안공고 → 협약금융약정 → 공사 → 운영
 - 민간사업 참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면제·비대상 사업은 엄격히 관리하여 재정 누수 방지
-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부담금 정비방안*도 마련하여 국민·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 *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23.5월)

【국고운용 효율화】

- (적극적 국고 운용) 국가자산의 적극적인 운용·개발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
 - ① 안정적 국고자금 공급을 통해 주요사업 집행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고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조달·운영
 - ②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 확대된 국고채 발행량을 차질없이 소화하는 한편,
 -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및 30년 국채선물 신규 상장 준비 등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 노력도 강화
 - ③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참여개발 활성화 등 국유지 개발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 유휴 국유지 개발추진 및 지자체 협업으로 「청사+생활SOC」를 구축하는 복합개발사업 지속 추진

** 민간참여개발 대상 국유재산개발주체 범위 확대 등 국유재산법령 개정 추진 및 국유지 장기대부형 민간개발 시범사업 검토 등

- ④ 적극적인 배당 협의를 통해 역대 최대 배당수입을 확보*하고, 물납증권의 원활한 매각 추진**을 통해 국고 수입 증대 마련

* '09년 이후 최대 일반회계 배당수입 확보(16,794억원)하여, 재정수요 뒷받침

**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21.4월)」 후속조치로서 적극적 매각을 통해 매각수입 568억원 달성

- ⑤ 전략적 조달정책·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등 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 및 신산업 등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계약제도 개선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복권의 공익기여)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긍정적 인식 제고로 복권사업의 성장을 도모하였고, 복권기금의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기여

- ① 복권기금의 적정 운영으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사업 강화* 와 사회현안 및 사업수요에 신속 대응**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예산(억원): ('21) 22,259, ('22) 25,755, ('23) 26,499, ('24) 26,816(연평균 6.4%↑)

** 청년·대학생 소액대출 확대(1,000→3,000억), 저소득층 난방 지원(3.1만가구→3.4만가구) 등

- ② 복권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공익활동 및 불법행위 차단 노력**을 통해 복권의 공익적 가치 확산

* 복권수익금(억원): ('19) 19,927, ('20) 22,109, ('21) 24,416, ('22) 26,430, ('23) 27,735

** 불법행위 감시활동: 23년 불법도박사이트 방심위 신고 3,012건, 해외복권 유통 수사의뢰 12건

5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국가신인도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① (국가신인도 관리) 신평사 연례협의* 및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견조한 편더멘털을 적극 설명하여, 높은 대외신인도 유지

* '23년 연례협의 : (Fitch)'23.2.23~24, '23.9.12~14, (Moody's)'23.4.3~5, (S&P)'23.8.28~31

** 뉴욕 라운드테이블(2.13), 글로벌 투자자 면담(4.10~11), 일본 라운드테이블(6.30)

- 美 신용등급 강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도 전전재정 기조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으로 우리 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AA)

* (피치)美 신용등급 AAA→AA+ 강등('23.8.1), (무디스)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23.11.10)

** 주요국 신용등급(S&P) : (AA+)미국 (AA)한국, 프랑스, 영국 (A+)일본, 중국 (BBB)이태리

- 한국경제설명회(IR), 글로벌 금융기관 CEO 면담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해외투자자들과의 소통·홍보 강화

②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외환거래 편의·접근성 제고, 새로운 거래유형 반영 등 위해 외환제도·감독체계 개편 지속

- “외환제도 개편 방향('23.2.10일)” 발표 및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민·기업 등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
-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 운영 및 적극적 유권해석 등을 통해 혁신적인 외환서비스 개발·상용화를 지원

③ (다자경제협력 강화) G7, G20, ASEAN+3 등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입장 반영, 주요국과 협력관계 강화 및 韓 위상강화에 기여

- 한-일 관계복원을 기반으로 15년만에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선진국과 핵심의제 협력 계기 마련 및 우리의견 적극 제언
- 개도국 지원, 지속가능성장 등 이슈에서 韓의 성장경험 공유 및 자유무역 중요성 강조, 글로벌 공급망 협력(RISE) 참여의사 제안

- G7 회원국·초청국과 적극적 양자면담을 통해 G20 핵심의제 협력강화 및 향후 G7과의 지속적인 공조의사 전달
- G20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세계경제 현안 관련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G20 성과창출 및 韓 위상강화에 적극 기여
- G20 국제금융체계 WG에서 주요국간 이견을 조율하며 성과도출*, GCF 2차 재원보충 참여촉구 등 국제사회 기후대응 역량강화 기여
 - * 韓은 국제금융체계 워킹그룹(IFWG) 공동의장국(韓-佛)으로서 MDB 재원강화 로드맵, MDB 개혁보고서 등 관련 주요국간 이견을 조율하며, 성과도출에 크게 기여
- 유사입장국(佛·日 등)과 적극적 소통*을 기반으로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
 - * 日·佛과 장관·실무급 협의를 통해 'GCF 재원보충 참여 촉구' 제안 지지발언 요청 등
- ASEAN+3 재무장·차관회의, 실무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호혜적·실용적 금융협력 강화
- 신속금융 프로그램* 신설, 재원구조 연구** 등 기존 CMIM의 작동 효율성 및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 주도에 참여
 - * 팬데믹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23.12월 차관회의시 합의)
 - ** CMIM의 현재 스왑 약정 방식 재원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자(Paid In Capital) 방식 재원구조로의 개편 등을 연구하여 CMIM 자금지원 확실성 제고
- AMRO*의 역내 거시경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규 부소장을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 완료
 -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 ASEAN+3 미래과제 세부의제 중 핀테크 WG 주도국*을 맡아 관련 웨비나**, WG 회의 등 개최
 - * '21년 우리나라 의장국 수임시, ASEAN+3의 미래과제로 4개 워킹그룹 승인('21.3월)
 - ** ① 오픈뱅킹 기술지원, ②핀테크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③초국가적 디지털 금융위기 대응

【국익중심의 맞춤형 경협통상 추진】

- (대외경제 협력)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급증하는 대외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대외경제정책을 기획·총괄

① (대외경제정책 총괄·조정)

-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대외정책을 적기에 조정·추진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② (해외진출 기업지원)

- (해외수주 활성화) 핵심 프로젝트에 '원팀 코리아' 구성·파견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금융 등 인프라 수주 총력 지원
 - 해외 인프라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하면서 해외건설 근로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제도적 지원 노력도 지속

* 수은 특별계정,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활용 등

**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및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23년 세법시행령 개정)

- (주요국 경협 고도화) UAE, 사우디, 카타르 등과의 정상회담* 계기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UAE('23.1), 사우디·카타르('23.10) 순방

③ (경제협력 다변화) 미국, 중국 및 인태국가 등과 핵심 분야 및 중요 통상 이슈, 규범설정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 공고화 추진

- 美 정상순방·한미일 정상회담 등 통해 첨단산업·공급망·금융 등 전방위 경제협력 강화하고 IRA·반도체법 등 주요현안 교섭 성과 도출
-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문화협력 활성화,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망, 투자자/지재권 보호 등 분야 경제협력 기반 강화

- 신북방 및 아세안·인도 고위급 경협 채널(한-러 경제공동위, 한-우즈벡·한-베 부총리회의) 통해 인프라·산업단지 등 주요 분야 협력 고도화
 - * (러시아) 연해주 산단 등 9개다리(9-bridge) 행동계획 2.0 진전 가속화
(베트남) '22년 수교 30주년 계기 호치민 메트로 건설, 한-베 산업단지 등 중점 논의
 - IPEF, DEPA, WTO 등 다자·지역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新통상이슈 논의 주도 및 경협 다변화에 기여
- ④ (對개도국 지식공유) KSP·EIPP 등 개도국 G2G 정책자문을 통해 수주기회 선점, 경협강화 등 맞춤형 경협 확대
- 민간 사업 제안, 다년도 자문(KSP Plus) 등 단계별로 기획에서 자문까지 민간 참여를 유도해 성과 제고(KSP 고도화 전략, '21)
 - 해외수주·진출 협력분야 선정, EIPP를 통해 3년 이상 밀착 자문
 - * 신수도(인니), 전기차(헝가리), 스마트시티(케냐) 등 6개국에 정책자문 및 자문관 파견 사업 수행, 유럽지역 성과공유세미나 개최(헝가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①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

- ① 국제개발협력위원회(2·4·6·10월) 개최 계기,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략 수립 적극 참여
- '24년 ODA 규모는 6.3조원으로 전년 대비 39.5% 증가
 - 세계 10위권 ODA 국가 도약*을 위한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개발협력 외연 확대 등 핵심 정책과제 포함
- *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22.6)」: 임기내 세계 10위권 ODA 국가 도약

<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주요 내용 >

- ① (재원배분) '24년 ODA 예산은 6.3조원 (전년 4.8조원 대비 +39.5%)
- ② (비전)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 ③ (주요내용) 4대 전략목표 12대 중점과제 제시

전략목표	중점과제
①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①인도적 지원 확대, ②위기대응 및 회복지원, ③취약국·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②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①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②개발협력 재원 다각화, ③개발협력 프로그램 다변화
③ 자구총의 공존과 상호 번영	①기후변화 대응 선도, ②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③경제사회 발전기반 조성
④ 파트너십 고도화	①국제사회 협력 증진, ②민관파트너십 강화, ③개발협력 외연 확대

- ② 제3차 OECD DAC 동료검토^{*}(peer-review) 과정에서 한국 ODA 자체 평가 보고서 마련 및 DAC 실사단 방한 대응 등 적극 참여

* (내용) OECD DAC 회원국의 ODA 정책·집행에 대한 5~6년 단위 주기적 평가
 (일정) 자체평가보고서 제출(~9월) → DAC 한국 방문(10월) → DAC 측 평가보고서 제작(~'24.4월)

- ③ 우크라이나 재건 패키지를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발판 마련에 기여

- 기존에 발표한 2.5억불에 더해 23억불 지원 패키지를 추가로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지원

- ④ 국제금융기구 주요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국제사회 내 한국 역할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인력 진출 등 협력 강화

- (ADB 연차총회) '04년(제주도) 이후 19년만에 제56차 ADB 연차총회를 인천에서 개최하여 아태지역 회복·연대 도모(5.2~5일)
 - (KOAFEC 장관급회의) '18년 이후 5년 만에 재개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아프리카 38개국 대표단 참여)를 부산에서 개최(9.12~15일)

②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① '23년 승인·집행 규모 역대 1위 달성 및 '24년 예산 대폭 증액

- '23년 승인액은 3.8조원(29.3억불), 집행액은 13,952억원으로 역대 1위, '24년 예산은 2조원으로 '23년 1.5조원 대비 대폭 확대

- ② 우리기업 참여 EDCF 사업 발굴·승인·수주 성공사례 창출

- (발굴·승인) '다카 메트로 4호선' 사업발굴·선점,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7.25억불)',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1.3억불)' 등 대형사업 승인
- (시행약정) '22년 승인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4.6억불)' 시행약정 체결을 완료하여 신속·원활한 추진 도모
- (수주) 비구속성 사업인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및 도로 확장사업(총사업비 4.3억불, EDCF 2억불)' 우리기업 수주를 확정

③ 기존 수원국과의 협력기반 강화 및 신규협력국 발굴

- (수원국 협력 강화) 12개국*과 정책협의를 개최하여 중기후보사업 협의 및 확정, 5개국과 기본약정(F/A) 확대·갱신 추진**
 *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니, 가나, 이집트, 우즈벡, 볼리비아, 타지키스탄, 모로코 / ** 방글라데시(완료), 필리핀(완료), 베트남, 라오스, 볼리비아
- (신규협력국 발굴) 2개국*과 공여협정(A/G) 신규 체결, 4개국**과 F/A 신규 체결 추진, 아프리카 38개국과 양자면담 진행 등
 *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 ** 코트디부아르(완료), 인도, 우크라이나, 르완다

④ 대내외 협력·소통 강화를 통한 사업추진기반 확대

- (MDB) 사업발굴이 어려운 인도·중남미에서 MDB 전문성을 활용해 승인실적 확대, MDB의 혁신적 금융지원수단 출범논의 주도 등
- (공여국 협력) 英·美·日 등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 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한국 위상 제고 및 공적개발원조 외연 확장
- (간담회) 국가별·분야별·주제별 간담회를 총 10회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완료, 제도개선 등 정책반영 추진('24.1월 예정)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① GCF가 핵심적인 기후 국제기구로 발전하도록 지원

- (GCF 2차 재원보충) 3억불 추가 공여 선언을 통해 성공적인 재원 보충에 기여하고 기후취약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이행
- (이사회 대응) 이사진으로서 3차례 이사회 및 전략·비공식 이사회 등에 적극 참여해 전략계획('24~'27년) 등 기금의 주요 정책·목표 마련에 기여
- (사무국 협력) 제3대·제4대 사무총장 면담(3, 8월)을 통해 사무국의 리더십 전환기에 협력·지원을 강화하고 사무국 설립 10주년을 기념

② 국내 기업·기관의 기후사업 발굴 및 진출 지원

- (국내기관 지원) 분기별 기후사업 진출지원 TF 운영 등을 통해 국내 기후협력 수요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소
- (GCF 신규인증) GCF 이사회의 주요국 아웃리치 등을 통해 국내 세 번째 GCF 인증기구로서 SK증권의 이사회 최종 승인을 지원
- (기후협력 증진) 연례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워크숍·현장방문을 진행하여 국내 기후기술 소개 및 개도국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글로벌 기후 리더십 제고

- (기후재원 협상) 주요 위원직(AF이사 등) 수임을 통해 핵심 의제 (파리협정 2.1c, 신규목표 수립)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
- (손실과 피해 기금 협상) 기금의 세부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2차 준비위)으로서 재원출처, 기금위치 등 쟁점에 건설적 의견 개진
-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기후예산, 탄소세 등 각국 재무부 소관의 기후대응 정책사례 분석 등 논의에 적극 참여 및 우리 정책 홍보

④ KSP · EIPP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지원 강화

- 경제협력 필요성 높은 국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 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현지 여건 개선

- * (KSP) 우즈벡 '지역난방 효율화' 자문 실시 → 난방공사 및 관련 기업 수주 지원
- ** (EIPP) 전기차·배터리(헝가리), 태양광·반도체(우즈벡), 신수도(인니), 스마트시티 (캐나다)의 분야 기업 현지 진출 기회 모색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 추진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경기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① (경제활력 제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 예상
→ 소비·투자 등 민간활력 제고 + 금융·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참고] 주요 기관의 '24년 한국 경제 전망

	IMF<1월>	OECD<2월>	한은<2월>	정부<1월>	IB 7개 평균 <2월>	JP 모건	BOA
성장률(%)	2.3	2.2	2.1	2.2	2.1	2.2	2.3
물가(%)	2.6	2.7	2.6	2.6	2.5	2.4	2.3

- ① 조속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총력 지원 +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 유류세 인하 연장(~'24.4), 소상공인 전기료 인하(月20만원),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21.3만원) 등

- ② 수출 중심 경제회복의 온기를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비·투자(설비·건설) 등 내수 보강 집중 추진

* 친환경 3종 패키지(노후차·전기차·고효율기기), SOC 등 상반기 65% 이상 신속집행 등

- ③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 시장 안정세가
비우량물까지 안착되도록 대책 신속집행 등 적극 대응

- ② (물가의 안정적 관리) 조속한 2%대 물가 진입을 위해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하며 수입·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대응 강화

- ①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과일류 할당관세 품목(24→29종)
및 물량을 확대(31만톤→무제한)하여 작황 부진 등 공급충격 완충

- 주요 식품원료와 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지속

* 옥수수(210만톤), 대두(120만톤), 설탕(10만톤), 변성전분(19만톤), LPG(수입전량, 상반기) 등

- ② (생산) 농축수산물 비축·방출 등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통해 원가부담 경감 지원 병행

* 소상공인 및 양식수산업자 전기요금 지원,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4,500억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26년),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10%) 면제(~'25년) 등

③ (유통·소비)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1,500억원) 투입 등을 통해 납품단가 지원 및 정부 할인지원 지속

-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24.4월)하고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연장방안 검토

③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글로벌 불확실성 상존, 가계부채·부동산PF 등 거시경제·금융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필요

① 거시·금융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비상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FOMC 등 국내외 이벤트 신속 대응

②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을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총량 관리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Stress DSR 단계별 도입 및 조기 안착, 커버드본드 발행 기반 조성 등

③ 부동산 PF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질서있는 연착륙에 총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금조달구조 등 근본적 개선방안 검토

* 유동성지원 등 시장안정조치, 금융회사별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

④ 대외 불안요인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분석·대응

- 다양한 레벨의 관계기관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금융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리스크 발생시 대응방안 논의
-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국제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변동성 발생시 적기 시장안정조치 실시

⑤ 외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견조한 수준의 대외건전성 유지

- 외환시장 급변동에 적기 대응하고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유지 노력 지속

【민간중심 경제 기반 마련】

① (범부처 협의체) 복합 경제위기 극복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범정부 위기대응체제로서 범부처 협의체 운영

- (경제관계장관회의)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경제 관련 정책을 한 자리에서 논의함으로써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도모
 -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어야 하는 정책을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하여 협의 도출
- (수출·투자 활성화) 범부처 수출·투자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투자 역량을 강화
- (플랫폼 시장 육성)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문제 해소 및 플랫폼 시장 육성을 위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② (산업경쟁력 강화) 첨단산업·소부장 육성 및 중소·벤처 활성화를 통한 역동경제 구현, 신산업 분야 육성, 서비스산업 혁신 등 지속 추진

- (첨단산업·소부장 육성)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조성, 세제·금융 등 활용 첨단산업 기업 투자 지원, 글로벌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추진
- (중소·벤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기반 확보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도 지속 계획

- 전략적 민간투자 지원, 모태펀드 투자집행 제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 (신산업 육성) 민간 주도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한 R&D 체계 개선, 사용 후 배터리 제도 등 대책 마련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3.9.22 시행)을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및 제도 개선
 - *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방안 마련, 글로벌 R&D 투자 확대,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 R&D전적·혁신적 R&D에 대한 예타 면제 추진 등 등
 - 이차전지 TF* 운영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안 마련, 업계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 지속 발굴 등 추진
 - * (팀장) 기재부 차관보 / (구성) 산업·환경·국토부 등 국장급 공무원(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
 - 데이터 활용, 산업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채널 마련
 - (서비스 혁신)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 서비스 육성 방안 마련
 - 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청년친화·생활편의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전략 마련
 -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특구·산단 조성, 제도개선 등을 통한 권역별 거점 집중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환경 개선 등 추진
 - 신규 특구¹ 및 15개 신규 국가산단²이 본격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부처별 운영중인 특구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1」 기회발전특구(산업부), 글로벌 혁신 특구(중기부), 도심융합특구(국토부) 등
 2」 미래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23.3.15)

- 시도경제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중앙-지방 양방향 소통강화
→ 지역 투자프로젝트 등 사업추진 애로 발굴·해결

③ (기업환경 개선) 건의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출·투자 등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환경 및 규제 개선

- (규제 개선) 업종·분야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과 아울러, 소통 강화를 통한 기업 체감도 제고

- (핵심규제 혁파) 경제·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혁신

* ('23년 경제정책방향) 7대 테마별 핵심규제(❶바이오헬스, ❷모빌리티, ❸에너지, ❹관광, ❺금융, ❻미디어·콘텐츠, ❺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추진 예정

- (현장밀착형 애로 해소) 경제단체·기업·전문가 현장방문 등 현장과의 상시 소통 강화를 통해 지속적 규제 발굴·개선

- (민간 소통) 경제단체,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주요 업계 등과 간담회, 현장방문 등 긴밀히 소통하여 기업환경 개선 추진

【 경제체질 및 사회이동성 개선 】

□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가속화

- (노동개혁)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강화
 -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 노사 법치주의를 꾸준히 확립하며, 경사노委 중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발표
- (교육개혁) 유보통합 모델 확정 추진, 초등·중등·고등학교 전국 확산 추진, 글로컬대학 지원 강화 등 교육개혁 과제 본격 추진

- (연금개혁)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차질없이 추진
-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개인·가계의 역동성 강화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
- 능력·노력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 자산 형성·활용도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
- 첨단산업육성 및 규제개혁,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을 통해 역동경제 구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훈련체계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청년지원 강화
-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공공부조 인상,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근로역량 및 유인 등을 제고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추진
- 청년 대상 취업지원, 자산형성, 주거·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내실화

【 중장기 미래 대비 】

- (미래사회변화 대응) 미래 도전 요인에 대응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과제 마련
 - (중장기전략 마련)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심으로 경제·산업·기후, 노동·교육·복지,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국가미래전략 수립
 - (ESG 확산) 美·日 등 공시기준, 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국내 기준 및 기업지원 방안 마련
- (인구구조변화 대응) 저출산 원인 분석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산 대응 및 관련 구조개혁 병행
 - 기존 저출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가정 양립 여건 강화, 혼인·첫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저출산 대응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등
 - 저출산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전략 마련
- (탄소중립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정책 수립·추진,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기후대응기금 운영 내실화 등 탄소중립 실현방안 구체화
 - (탄소중립 정책 수립)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23.4월) 상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발굴·추진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배출권의 가격기능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 배출권 유상할당 및 BM할당 비율 확대, NDC 목표를 감안한 총량설정방식 설정 등
 - (기금운영 내실화)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금을 개편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집행관리 노력 지속

【 공공기관 혁신 】

-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추가 혁신과제도 발굴

* ①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②공공기관 자율성·책임성 확보, ③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 ① (생산성·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대

- 혁신계획 추진실적을 주기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직무급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기관 수용성 제고 노력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산 유도

- ② (자율·책임 경영 확립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경영공시·평가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

- 지정해제 검토 등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하고, 경영공시·평가 제도개선 통해 책임성 강화
- 또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내실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경제활성화 뒷받침

-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데이터·시설·장비·특허 개방 등 세부과제별 가시적 성과창출로 국민 체감도 확대

- 공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제품·기술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도모

2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포용적인 조세제도 마련 추진

- 민간중심 경제구조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경제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강화·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과세 제도 선진화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관세제도 개선 추진
 - (성장동력 확충) 첨단산업 육성 위해 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 개편 추진
-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 방지, 포용·상생·공정 기반 강화를 위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과세 형평성을 제고
 - (소득 재분배)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기반을 지속 확대
 - (과세형평 제고) 세부담 적정성 제고, 공평과세 실현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제, 부동산세제 등 재산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 경제활력 제고·환경변화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
 - (세입기반 확충)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경제 디지털화·국제거래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제조세 제도 선진화 추진
 - (조세제도 합리화) 주류 제조·유통·소매 전주기 규제 개선 등 소비세제 합리화 검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환경 조성

3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건전재정기조 확립】

- 재정적자, 늘어난 국가채무의 지속적 관리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 →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
 -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효과성 전면 재점검을 통한 지출 규모 안정적 관리, 협업과제 발굴을 통한 재정운용 혁신 병행
 - 신규사업의 부처간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조사업 지속 정비 등 추진
 -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위해 기금운영비(기본경비)는 지출효율화 기조 下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지출 대비 비중 지속 관리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
 -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빈틈없는 고용안전망 구축
 - 생애 전주기별 교육혁신을 지원하여 맞춤형 미래 인재양성
 - 산업·노동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문화격차 해소 추진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자방안 마련
 - 수출기업 다변화 촉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생 기반 조성

- 광역교통 인프라 등 핵심 SOC 구축에 대한 정부 투자를 지속하고 및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초격차·대체불가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

【국민의 복지,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효율적 재정투자】

- 두터운 약자 복지 및 저출산 대응 강화, 의료개혁 4대과제 뒷받침,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등
- 의료공백 보완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적극 추진
- ICT 기반 재난 예방 인프라 및 소방 훈련 투자 확대

【공공·안전 및 국가적 협력 투자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ODA 투자 효과성 및 국방예산 효율화
- 성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 추진 및 ODA 규모 확대 이후 질적 내실화 등으로 투자 효과성 제고
-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는 군 복무환경 조성 지속 및 스마트 국방혁신 등으로 국방 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4 재정 인프라 혁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 (중장기 재정전략) 장기재정전망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혁신 추진

- ① 5년 단위의 '중기재정전략('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 건전성 분석·대응을 통한 중장기적 재정총량 관리
 -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채무비율 관리 강화
- ② 정부지출 효율화를 위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 재원관리 기반 조성 및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③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제도 혁신 지속 추진
 - 재정 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중장기 재정전략의 제도적 기반 조성

*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채무비율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 이내

【재정운용 관리 강화】

- 경기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민자 사업도 신속추진·집행관리·신규사업 발굴 통해 경제활력 제고
 -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을 감안하여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R&D 협력제도 개편과 함께 협력 면제사업의 관리 강화
 - 보조사업 연장평가, 부담금 평가 등 사업 평가체계를 운용하여 환류과정을 통한 재정성과 제고에 기여

【국고운용 효율화】

- (국고 운용 효율화)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①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차질없이 조달하고, 국채 수요저변 확대와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 지속
 - ②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의 자산가치를 제고하고, 공익적 개발·활용을 통해 국민 편의 및 경제 활력 증진
 - ③ 조달·계약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공공조달 내실화 및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복권의 공익가치 실현) 복권의 건전 레저 산업 정착, 복권사업 운영의 안정화·효율화를 통한 복권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복권기금 사업의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공익가치 실현
 - ① 효율적인 복권기금 운용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적시·적정 집행되도록 체계적인 관리 추진
 - ② 안정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복권발행·판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복권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복권사업의 발전 도모
 - ③ 복권의 사행성 인식완화를 위해 건전 복권문화를 확산시키고 불법행위 차단을 통해 복권의 공정성 확보

5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국가신인도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① (국가 대외신인도 관리) 한국의 건실한 경제 편더멘털, 정책 효율성·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지속

- 신평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 해외투자자와 소통 강화
- 美 환율보고서 등 외환이슈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對美협의 등을 통해 대외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②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규율체계 선진화
- 펀테크 기반 혁신 외환서비스 도입·활성화, 안정적 운영 및 경쟁 촉진을 통해 對국민 외환서비스 質 제고 노력 지속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기관 및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 및 부담완화 노력 지속

③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 G7·G20 등 글로벌 현안에 적극 공조하는 한편, ASEAN+3 등 역내 금융 안정성 노력도 강화

- (G7) 이태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여(24.5) 계기, G7과 글로벌 핵심이슈 관련 협력 강화 및 국제질서 수립 논의에 적극 참여
- (G20) 세계경제 리스크와 불평등 대응 등 주요 현안에 공조하는 한편,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 성과 창출에 기여
- (ASEAN+3) 의장국으로서 신규 금융협력 과제(신속금융프로그램 및 재원구조 개편), AMRO 역량 강화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 주도

【국익중심의 경제외교 후속조치 및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변화 대응】

- (경제외교 후속조치) 정상순방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고, 향후 순방 관련 경협사업을 집중 발굴
 - 글로벌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부처 별 경제외교 후속조치 추진 과정 상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을 적극 지원
 - 경제외교 후속조치 사업 별 이행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이행과정 점검 및 관리 추진
- (통상환경 변화 대응역량 제고) 공급망 리더십·교섭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기회요인 극대화 도모
 - (리더십) 전략자산 보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 위상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
 - (교섭력) 공급망 교란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 교섭채널,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역량 결집 추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①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위상 제고

- ODA 종합시행계획 등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국조실·외교부 협업 하에 'ODA 혁신 로드맵*' 마련
 - * 기업, 언론, 국회, 감사원 등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ODA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MDB 신탁기금 기여 확대 계기, 연구용역을 통해 신탁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우리나라 글로벌 위상을 고려하여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 新 시장개척 등 지원도 강화

②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대형 랜드마크형 사업 비중 확대, 우리나라 기술 우위 분야에 대한 협조융자 체결 등 우리 기업 해외 수주 지원
- EDCF 절차 개편 통한 소요기간 단축, 외화표시차관 확대 및 수원국 과제 정보 제공 등으로 진출 기업의 불확실성 축소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기관의 기후사업 발굴 및 진출을 지원
- GCF가 핵심적인 기후 국제기구로 발전하도록 지원
 - GCF 2차 재원보충('24~'27년)에 3억불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GCF 이사이자 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GCF 발전에 기여

④ KSP·EIPP를 통해 인프라·신기술 등 유망 사업 분야의 해외 수주 등 지원 → 핵심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제고

- 실증·시범사업, 타당성조사 등 심화된 정책·기술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강화
- 신공항,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등 대형 인프라 사업 타당성조사,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1. 기획재정부 일반 현황

1 조 직

- ① (본부) 1차관보, 2관리관, 3실, 1대변인, 1감사관, 1비서관, 3정책보좌관, 11국, 19관, 112과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예산실**(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세제실**(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관세정책관), **경제정책국**(민생경제정책관), **정책조정국**(정책조정기획관), **경제구조개혁국**, **미래전략국**, **국고국**(국유재산심의관), **재정정책국**(재정건전성심의관), **재정관리국**(재정성과심의관), **공공정책국**(공공혁신심의관), **국제금융국**(국제금융심의관),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 ② (소속기관 ; 1) 복권위원회사무처(1처장, 3과)

- ③ (외청 ; 4)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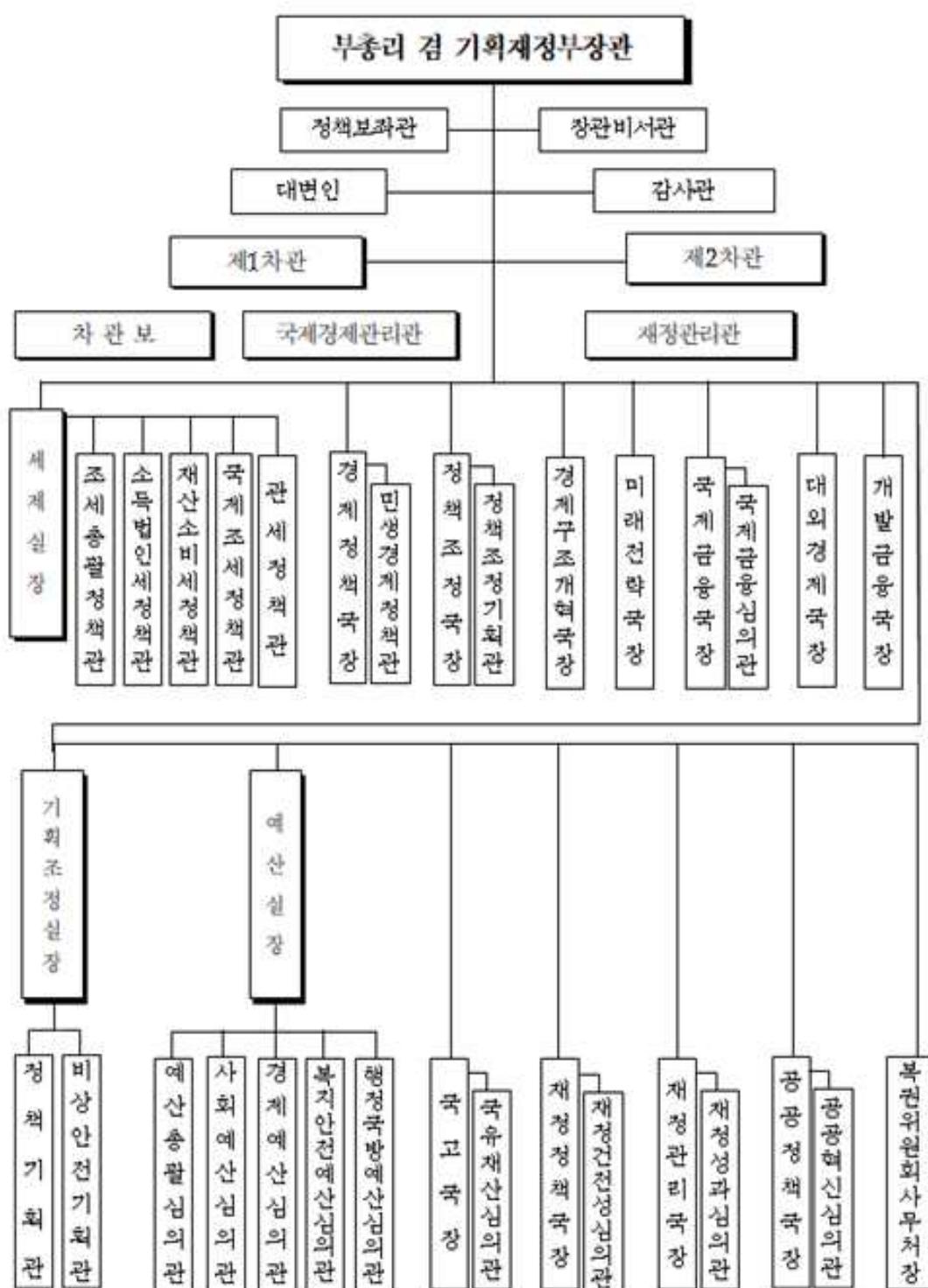
2 인원

(단위: 명)

구 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
본 부	3	1,083	8	1,094
복권위원회사무처	-	26	-	26
합 계	3	1,109	8	1,120

※ '24년 3월 현재 운영정원 기준

【 기획재정부 조직도 】



3 재정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343,369 -	407,195 18.6	473,646 16.3	487,272 2.8	526,942 8.1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921,205 -	5,770,648 17.3	4,949,195 △14.3	4,767,117 △3.7	3,760,032 △21.1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1,241 -	1,270 2.3	1,359 10	1,453 6.9	1,553 6.9
○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319 -	353 10.8	381 7.9	392 2.9	400 2
○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341,809 -	405,572 18.7	471,910 16.3	485,436 2.9	524,999 8.1
□ 예산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51,699 -	51,993 0.6	70,463 35.5	70,235 △3.2	70,114 △1.7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70,370 -	322,355 19.2	456,647 37.8	408,103 △10.6	435,302 6.7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51,699 -	51,993 0.6	70,463 35.4	70,235 △3.2	70,114 △1.7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68,530 -	320,317 19.3	456,647 42.6	408,103 △10.6	435,302 6.7
【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840 -	2,039 10.8	2,039 -	2,039 -	2,039 -
□ 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91,670 -	355,202 21.8	473,650 33.3	487,281 28.8	526,952 8.1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650,835 -	5,448,292 17.1	4,490,517 △17.6	4,356,983 △3	3,322,701 △23.7

구 분	'23	'24	'25	'26	'27
【복권기금】					
○ (총)지출	50,082	51,795	53,424	55,838	58,235
(전년대비증가율, %)	-	17.1	3.1	4.5	4.3
○ 총계	79,098	83,580	85,399	89,107	93,312
(전년대비증가율, %)	-	5.7	2.1	4.3	4.7
【공공자금관리기금】					
○ (총)지출	192,942	249,560	289,913	296,470	329,256
(전년대비증가율, %)	-	29.3	16.7	2.6	11
○ 총계	2,992,804	3,226,667	2,839,865	2,588,898	2,064,447
(전년대비증가율, %)	-	△12	△8.8	△20.2	
【대외경제협력기금】					
○ (총)지출	15,585	20,931	22,337	24,120	25,915
(전년대비증가율, %)	-	34.3	3.7	8	7.4
○ 총계	16,211	22,087	24,215	28,928	28,314
(전년대비증가율, %)	-	36.2	9.6	19.5	△2.1
【기후대응기금】					
○ (총)지출	22,817	22,629	24,715	26,103	28,041
(전년대비증가율, %)	-	△0.8	9.2	5.6	7.4
○ 총계	22,992	23,918	25,870	27,386	29,452
(전년대비증가율, %)	-	4.0	8.1	5.9	7.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총)지출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총계	7,701	8,133	8,039	8,308	8,598
(전년대비증가율, %)	-	5.6	△1.2	3.3	3.5
【외국환평형기금】					
○ (총)지출	-	-	-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총계	1,506,200	2,051,201	1,419,077	1,514,963	988,405
(전년대비증가율, %)	-	36.2	△30.8	6.9	△34.8
【국유재산관리기금】					
○ (총)지출	10,244	10,288	12,798	14,515	15,391
(전년대비증가율, %)	-	0.4	24.4	13.4	6
○ 총계	25,829	32,705	34,569	37,715	40,993
(전년대비증가율, %)	-	26.6	5.7	9.1	8.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 특성

- ① **(목표)** 선제적 정책대응을 통해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역동적인 한국경제」를 구현
-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정책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
- ② **(추진전략)** ①경제반등·성장잠재력 제고, ②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③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④재정 인프라 혁신, ⑤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등 추진
- 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민생 어려움 지속 우려
⇒ 회복의 온기가 민생全분야로 빠르고 고르게 확산되도록 총력
*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 ②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포용적인 조세제도 마련 추진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
- ③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25년 예산 건전재정기조 확립
*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공공부문 솔선수범 등 강력한 재정운용 혁신 추진
- ④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재정전망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혁신 추진
* 경기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민간투자 활성화, 예타 내실화 등
- ⑤ 한국의 건실한 경제 편더멘털과 위기대응력 등을 국제신평사 및 해외투자자와 적극 공유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 핀테크 기반 혁신적 외환서비스 도입·활성화, 안정적 운영 및 경쟁 촉진 등
- ③ **(추진방법)** 경제·재정 전반의 국정현안을 총괄·조정하면서 기획재정부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를 착실히 추진
- 경제정책의 총괄·조정과 정책의 집행점검 및 평가를 강화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점검·평가관리 강화

2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임
무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 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수립, 국제금융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비
전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역동적인 한국경제

전략목표

I.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성과목표

- ① 경기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강화
- ② 민간중심 경제 기반 마련
- ③ 경제체질 개선
- ④ 공공기관 혁신
- ⑤ 중장기 미래대비

II.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 ①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 ② 세제의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③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III.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 ① 건전재정 기조 확립
- ②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 ③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④ 국민의 복지,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효율적 재정투자
- ⑤ 공공-안전 및 국가적 협력 투자 강화

IV. 재정 인프라 혁신

-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 ② 재정운용 관리강화
- ③ 국고운용 효율화
- ④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V.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 ① 국가 신인도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 ② 국익중심의 경제외교 후속조치 및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변화 대응
- ③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4	20	20	66 13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1. 경기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① 경제 활력 제고		국정 19
② 물가의 안정적 관리		국정 19, 민생
③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국정 19
④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		국정 19
2. 민간중심 경제 기반 마련		
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가동		국정 19, 업무 1-1-③, 연두 5
②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국정 3, 18, 21, 22, 23, 24, 25, 26, 28, 31, 32, 74, 75, 77, 78, 79, 117 연두 10, 16, 17, 18, 19, 민생
③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		국정 16, 업무 3-2-④
3. 경제체질 개선		
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국정 42, 49, 51
②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국정 50, 52
③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청년지원 강화		국정 45, 47, 53, 66, 67
4. 공공기관 혁신		
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국정 15
②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 확립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국정 15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국정 15
5. 중장기 미래대비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업무 4(「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국정 17, 18, 86 업무 3-2-④, 4-2-⑤
② 인구구조변화 대응		국정 50 업무 3-3-①, 4-2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국정 86, 87, 88, 89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I.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1.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운영 ② 경제활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③ 금융세제 합리화 및 자산형성 지원 ④ 수출입 활성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세제도 선진화 ⑤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탄력관세 적극 운용	국정 18	
	국정 18	
	국정 18, 36, 민생	
	자체 발굴	
	자체 발굴	
2. 세제의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보완 ② 재산세제 과세 합리화 ③ 부가가치세제의 합리화	국정 8, 43, 민생	
	국정 8, 18	
	국정 43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①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②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③ 역외탈세 대응능력 강화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④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대응 ⑤ 국제조세협력 강화 ⑥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소비세제 개편	자체 발굴	
	국정 19	
III.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1. 건전재정 기조 확립		
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②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	
	-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국정 50, 51, 52, 53, 54, 55, 90)
	②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등 (국정 81, 82, 83, 84, 85, 90)
	③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 (국정 58, 61, 62, 86, 87, 88, 89)
3.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① 수출 우상향·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등 민간활력 견인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국정 20) 중소기업 정책 재설계(국정 31), 민생
	② SOC 및 농어촌 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국정 39) 농산촌 지원 강화(국정 70)
	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국정 74) 디지털 혁신 가속화(국정 78) 등
4. 국민의 복지,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효율적 재정투자		
	① 두터운 약자복지 및 저출산 대응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 29)
	② 의료개혁 4대과제 적극 뒷받침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 66)
	③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정 65)
5. 공공·안전 및 국가적 협력 투자 강화		
	①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 63, 64, 69)
	② ODA 투자 효과성 제고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③ 국방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등 (국정 103, 104, 107, 108)
IV. 재정인프라 혁신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① 중·장기적 재정총량 관리	
	②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③ 재정지속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국정 5
2. 재정운용 관리강화		
	① 재정집행 관리강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국정19-2, 국정5-2
	②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내실화	국정5-6
	③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부담금 관리	국정5-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3. 국고운용 효율화		
	① 효율적 자금관리 및 국채시장 선진화	국정 19, '24년 경제정책방향 1-[1]-①, 1-[2]-①~③
	②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	국정 5, '24년 경제정책방향 1-[2]-①·2-[5]-① 및 4-[2]-③
	③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	국정 29, '24년 경제정책방향 1-[1]-① 및 2-[5]-①
4.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① 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및 홍보강화	국정 48, 66
	② 복권사업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국정 48, 66
V.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1. 국가 신인도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① 한국 경제 홍보 및 대외 신인도 관리	국정과제 19
	②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국정과제 36
	③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	국정과제 96
2. 국익중심의 경제외교 후속조치 및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변화 대응		
	① 경제외교 후속조치 통한 국내경제 역동성 제고기여	국정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민생
	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역량 제고	국정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③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및 FTA 활용 촉진	
3.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①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	국정 99, '24년 경제정책방향 1-3-③
	②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정 99, '24년 경제정책방향 1-3-③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국정 61, 국정 99 '24년 경제정책방향 1-3-③
	④ KSP, EIIPP를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 강화	국정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전략목표 1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기본 방향

-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민생 어려움 지속 우려
⇒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분야로 빠르고 고르게 확산되도록 총력
- 조속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및 소비·투자를 비롯한 내수 활성화에 중점
-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국민·기업의 역동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경제체질 개선 주력
- ◇ 주요 경제정책 총괄·조정 등을 위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운영
- ◇ 벤처·창업 활성화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혁신
- ◇ 규제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민간중심 경제 기반 마련
- ◇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이동성 개선 및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기반 지속 강화
- ◇ 규제완화·첨단산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사회 이동성 개선
- ◇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자율·책임 경영 확립,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질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인구구조·기후 변화 등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5	5	16	3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1. 경기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		실질 GDP 성장률(%)
	① 경제 활력 제고	실질 GDP 성장률(%)
	② 물가의 안정적 관리	소비자물가 상승률(%)
	③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 부동산PF 관련 개선방안 마련
2. 민간중심 경제 기반 마련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개최횟수
	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가동	관계부처 합동안건 수
		현장방문 후속조치 관련 대책 수
	②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중기 익스프레스 건의사항 해소건수 유망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율(%)
		경제계 간담회 등 소통횟수(회)
	③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협회·기업·전문가 등 현장방문 횟수(회)
3. 경제체질 및 사회이동성 개선		15세 이상 고용률
		사회이동성 부문별 대책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① 3대 구조개혁 및 사회이동성 개선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방안 마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대책 발표
		일자리 대책 마련
	②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저소득층 자립지원 방안 마련
		의료개혁 4대과제 추진
	③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청년지원 강화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과제 마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공공기관 혁신		•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률
	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 직무급 도입기관 수
	②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 확립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23년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 경영공시 개편에 따른 알리오 연간 접속자 수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 건수 • 기술마켓 구매 실적 • 수요기반 공공데이터 개방률
5. 중장기 미래대비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중장기전략 수립 위한 의견 수렴 노력 ESG 정책과제 마련
	②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한 대책 마련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탄소중립 혁신과제 마련 기후대응기금 내 비R&D 사업 '24년도 집행률 평균

(1) 주요내용

- '24년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문별로는 회복에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 '24년 한국 성장 전망(%) : (IMF) 2.3 (OECD) 2.2 (한은) 2.1 <'23년 1.4%>

* 수출(전년동기비, %) : ('23.1/4) △12.8 (2/4) △12.0 (3/4) △9.7 (4/4) 5.8 ('24.1~2) 11.2

- 특히, 상반기에는 고물가·고금리 영향 누적 등으로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민간소비·건설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우려

⇒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내수 회복의 속도를 앞당기고,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 분야로 빠르고 고르게 확산되도록 총력

-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및 대응

- 외환·외화자금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변동성 발생시 시장안정조치 실시

(2)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 치 '28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실질 GDP 성장률	2.2	△0.7	4.1	2.6	1.4	-			한국은행 발표	한국은행 발표
국가신용등급	무디스 (Aa2) S&P (AA-) Fitch (AA-)	무디스 (Aa2) S&P (AA) Fitch (AA-)	유지	현재 3대 국제신평사의 한국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설정 -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주요 제약요인인 점도 감안		해당 신용평가사 발표	해당 신용평가사 발표			

(3) 기타

- 2024년 경제정책 방향('24.1.4,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1) 주요 내용

- (경제활력 제고)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既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 보강
- (리스크 관리) 금융시장·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경제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		실질 GDP 성장률(%)
관리과제	① 경기 활력 제고		실질 GDP 성장률(%)
	② 물가의 안정적 관리		소비자물가 상승률(%)
	③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 부동산PF 관련 개선방안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실질 GDP 성장률	4.1	2.6	1.4	IMF 주요 선진국 평균 상회 → '23년은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 성장을 달성	'24년에는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IMF, 한은 발표 IMF, 한은 발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지정학적 위험(중동/러·우/中·대만), 글로벌 분절화 심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등 경기 하방리스크 상존
- (갈등요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건설 등 내수가 침체되며 영세 소상공인·지역경제 중심 어려움 가중 우려
⇒ 비상경제체제 下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내수 활력 제고 등을 통해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 분야로 빠르고 고르게 확산되도록 총력

(4) 기타

- 2024년 경제정책 방향('24.1.4.,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경제활력 제고(I-1-①)

□ 추진배경

- ‘24년은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
 -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도 그간 과도한 규제, 경쟁 제한적·불공정 관행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지속 하락
 - 잠재성장률 추정(%), OECD, '23.11) : ('00) 5.5 → ('10) 3.8 → ('20) 2.4 → ('22) 2.3 → ('23) 2.0 → ('24) 2.0
- ⇒ 회복의 온기가 민생全분야로 빠르고 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 역동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 점검·재설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출 중심 경제회복의 온기를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비·투자활력 제고 및 ‘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역점
-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 대응
 - 한은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만나 정책공조 강화 + 최적 폴리시믹스 강구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3년 GDP 및 세계경제 동향 등 대내외 여건 점검	3월	
	매월 경기 모니터링 및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발표	1~3월	
2/4분기	1/4분기 GDP 속보치 등 경제지표 점검	4월	
	매월 경기 모니터링 및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발표	4~6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6~7월	
3/4분기	2/4분기 GDP 속보치 등 경제지표 점검	7월	
	매월 경기 모니터링 및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발표	7~9월	
4/4분기	3/4분기 GDP 속보치 등 경제지표 점검	10월	
	매월 경기 모니터링 및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발표	10~12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4.12월~‘25.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학계·연구기관의 의견 수렴·논의
-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에도 소통 플랫폼("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거시경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6~7월, '24.12~'25.1월
간담회	거시경제 관련 연구기관(한국은행·KDI 등) 간담회	연 2회 이상
기타	경제정책방향 소통 플랫폼 운영	수시

□ 기대효과

- 부처, 협회·단체, 연구원 등 현장의 전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 현실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설계
- 체감도·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수시 공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효과성·수용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3	'24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한다(I-1, 일반재정)			
①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1100-1133)	일반회계	305	925
■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1100-1133-301)	일반회계	305	9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실질 GDP 성장률	4.1	2.6	1.4	IMF 주요 선진국 평균 상회	'23년은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 성장률 달성을 → '24년에는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IMF, 한은 발표	IMF, 한은 발표

② 물가의 안정적 관리(I-1-②)

□ 추진배경

-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세와 함께, 기대 인플레 하락 등 수요 압력 완화 영향으로 서서히 둔화 예상
- 다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며 서민 체감경기 회복 제약 전망

* 물가상승률(%) : ('21) 2.5 ('22) 5.1 ('23) 3.6 ('24e) 2.6 <최근 5년('18~'22년) 평균 : 2.0>

- 지정학적 갈등,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❶ 24시간 물가동향 상시 모니터링,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물가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
 - 매월 소비자물가동향 조사를 통해 월별 소비자물가 추이를 파악하고, 물가 상승 원인을 품목별로 분석
- ❷ 필수 품목별 물가 관리, 설·추석 명절 대책, 물가·민생 안정 대책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생활물가 안정 노력 지속

-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취약 계층 부담 완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추진

③ 중장기 물가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정책 노력 병행

-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개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농축수산물 유통 고도화 등 물가안정 기반 구축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민생 안정 대책 마련	1월	
2/4분기	하반기 물가 여건 점검·전망 및 대응 방안 마련	5~6월	
3/4분기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9월	
4/4분기	김장철 대비 가격 안정대책 마련	10월	
	'25년 물가 여건 점검·전망 및 대응 방안 마련	12월	
	주요 품목 물가 상시 모니터링	연중, 매일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서민·취약계층 포함한 일반국민이 소비자물가 안정의 정책 수혜자
- 다만, 원가상승 부담에 따라 관련 업계·산업과의 이해관계 대립 가능성

기대효과

-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및 소비자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안정적 성장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물가의 안정적 관리(I-3-일반재정①)		
① 소비자물가관리(1100)	일반회계	10.35
■ 소비자물가관리(1131)		10.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공통) 소비자물가상승률(%)	2.5	5.1	3.6	3.1 ^e 우리와 경제 여건이 유사한 OECD 회원국 평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여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 등 거시적 환경에 의한 불가피한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한편,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의 70% 이내를 목표로 하여 주요국 대비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효과적 물가 대응 추진 * 최근 10년('12~'21년) OECD 회원국 평균 물가상승률 대비 한국 물가상승률은 70% 수준, 코로나 이전 10년('10~'19년)은 90%	OECD 통계청 발표	OECD 통계청 발표

③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I-1-③)

□ 추진배경

- 국내 금융시장은 최근 대체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 중이나, 글로벌 금리인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등 상존
-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누적된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필요
 -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안정적 흐름이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 필요

*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BIS): ('20) 103.0(7위) ('21) 105.4(4위) ('22) 104.5(3위) (**('23.3Q) 101.5(4위)**)

- (부동산 PF) 과거 PF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고금리 등 사업성이 악화되며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 확대

* PF 대출잔액(조원, 기말): ('17)56.6 ('18)66.6 ('19)79.6 ('20)92.5 ('21)112.9 ('22)130.3 **('23)135.5**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❶ 거시·금융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비상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FOMC 등 국내외 이벤트 신속 대응

* ①경제부총리(주재), ②한국은행 총재, ③금융위원장, ④금융감독원장 등

- ❷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총량 관리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Stress DSR 단계별 도입 및 조기 안착, 커버드본드 발행 기반 조성 등

- ❸ 부동산 PF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질서있는 연착륙에 총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금조달구조 등 근본적 개선방안 검토

* 유동성지원 등 시장안정조치, 금융회사별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가계부채 월별·분기별 동향 점검	1~3월	
	변동금리 Stress DSR 1단계 시행	2월	
2/4분기	가계부채 월별·분기별 동향 점검	4~6월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거시경제금융회의, 주택정책금융 협의체 등)	4~6월	
	부동산PF 관련 대책 마련	상반기	
3/4분기	가계부채 월별·분기별 동향 점검	7~9월	
	변동금리 Stress DSR 2단계 시행	7월	
4/4분기	가계부채 월별·분기별 동향 점검	10~12월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거시경제금융회의, 주택정책금융 협의체 등)	10~12월	
	커버드본드 활성화방안 마련	하반기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거시경제·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혜택
- (이해관계집단) 가계·기업대출 취급 금융기관 등

□ 기대효과

-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기업·가계·외국인 등 시장참가자의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
-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불안 해소 및 대외신인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가계부채 증가율(%)	9.7	3.1	-	4.8%	'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목표치인 경상성장을 전망치(4.9%)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	(24년말 가계부채 ÷ '23년말 가계부채 -1) × 100
부동산PF 관련 개선방안 마련	-	-	-	지침 개정 및 법령 마련	부동산 PF 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마련	지침 개정 여부, 대책 발표 횟수 등

4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I-1-④)

□ 추진배경

- 고금리 장기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
- 대외 불안요인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대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국제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분석 및 대응

- 美·日·EU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美·日 등 주요국 선거, 中 부동산 위기 등 잠재 리스크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 전문가 간담회(국제금융포럼 등) 등을 통해 대외 금융·실물 리스크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황공유 및 대응 논의
-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국내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점검·대응

② 환율 안정 및 외환·외화자금시장 운영

- 외환시장협의회, 외환·국제금융대책반회의(국금국장 주재)를 통해 외환·외화자금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급격한 시장 변동성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③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국 금융기관(RFI)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정식 시행 준비·추진

-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6개월간 시범운영 통해 혼선 예방

④ 외채 및 외환건전성 제고

-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등 만기구조 장기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

⑤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유지·관리

- 외환시장 급변동에 적기 대응하고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유지 노력 지속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글로벌 금융·외환시장 잠재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연중 지속	
	○ 美 연준, ECB, BOJ 등 주요국 통화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	연중 지속	
	○ 관계기관 회의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1분기	
	○ 시장상황 악화시 시장 안정 방안 강구	1분기	
2/4분기	○ 글로벌 금융·외환시장 잠재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연중 지속	
	○ 美 연준, ECB, BOJ 등 주요국 통화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	연중 지속	
	○ 관계기관 회의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2분기	
	○ 시장상황 악화시 시장 안정 방안 강구	2분기	
3/4분기	○ 글로벌 금융·외환시장 잠재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연중 지속	
	○ 美 연준, ECB, BOJ 등 주요국 통화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	연중 지속	
	○ 관계기관 회의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3분기	
	○ 시장상황 악화시 시장 안정 방안 강구	3분기	
4/4분기	○ 글로벌 금융·외환시장 잠재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연중 지속	
	○ 美 연준, ECB, BOJ 등 주요국 통화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	연중 지속	
	○ 관계기관 회의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4분기	
	○ 시장상황 악화시 시장 안정 방안 강구	4분기	

□ 기대효과

-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거시경제 영향, 대응방안 등 상시 협의
- 외환시장협의회 참석 또는 시장 참여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 의견 청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잠재리스크 요인 논의	연중 수시
간담회	글로벌 금융기관 관계자 금융·외환시장 상황 및 의견 청취	연중 수시
간담회	외환시장협의회 운영회	분기별
간담회	외환시장협의회 총회	상·하반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회의 실시 횟수	-	-	12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주기(월별)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평균 매월 1회 간담회 등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실시횟수	내부자료
국제기구의 대외건전성 평가	-	-	양호	국제기구 등은 매년 국가별 대외건전성을 평가(예: IMF ESR) → 객관적인 국제기구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	국제기구의 대외건전성 발표	국제기구 발표
국제기구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	-	-	적정	국제기구 등은 자체 기준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예: IMF 연례협의)하므로 국제기구의 적정성 평가결과를 목표로 설정	국제기구의 외환보유액 적정 발표	국제기구 발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정식 시행	-	-	10회	정식 시행(7월 예정) 전까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횟수 → 월 2회 시범운영을 가정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시범운영 실시 횟수	내부자료
	-	-	20개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수 → 현재 등록된 외국환은행(56개)의 1/3에 달하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등록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RFI) 개수	내부자료

(1) 주요 내용

① (범부처 협의체) 주요 경제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

- (경제관계장관회의)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한 경제동향·리스크 요인 점검·관리, 범부처 위기극복대책 등 수립
- (수출·투자 활성화) 범정부적 차원의 수출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의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회복세 강화
 - 인센티브 확충, 애로해소 등을 통해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② (산업경쟁력 강화) 역동경제 구현 및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첨단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육성 추진

- (첨단산업 등) 첨단산업 집중지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산업) 민간 주도 신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성장기반 마련
-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특구·산단 조성지원, 특구제도 개선 및 지역산업 애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등 지속 발굴

③ (규제혁신)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및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기업 경쟁력 강화

- (규제개선)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추진
- (경제 형별규정 개선) 비범죄화, 합리화 등 방향으로 경제 형별규정을 개선하여 낙인효과, 범죄자 양산 등 부작용 해소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간중심 경제 기반 마련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개최횟수
관리과제	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가동	관계부처 합동안건 수 현장방문 후속조치 관련 대책 수
	②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중기 익스프레스 건의사항 해소건수 유망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율(%) 경제계 간담회 등 소통횟수(회)
	③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협회·기업·전문가 등 현장방문 횟수(회)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개최횟수	29회	26회	30회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과거 3개년 평균(28)을 상회 하는 29회로 설정	개최횟수 측정	관련 보도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이견 조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민간) 경제부총리·차관 등의 정책현장 방문, 정책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 현실이 반영된 정책방향 수립·집행
 -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정책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정책과제 발굴
 - 특히, 경제분야 규제혁신 및 경제형별 개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수렴
- (국회)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 중점법안의 조속 입법을 위해對국회 법안설명·홍보를 강화하고, 정부대안 마련 등 입법노력 지속

(4) 기타

- 既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moef.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가동(I-2-①)

□ 추진배경

- 복합 경제위기 극복 및 대내외 리스크 적기 대응, 경제성장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정책대응 필요
- 투자 회복 흐름이 둔화되지 않도록 규제합리화, 행정절차 간소화·효율화, 투자인프라 조성 등 투자지원 대책 마련·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방향 및 긴급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
 - 부총리 주재 간담회, 현장방문 등으로 현장의 정책수요 파악, 既발표 대책의 집행 상황 및 국민 체감도 등을 지속 점검
- 지자체·경제단체·협회 등과의 투자 협력 플랫폼인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투자 애로과제 발굴
 -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기업·지역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애로 해소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1월	
	■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3월	
2/4분기	■ '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6월	
3/4분기	■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9월	
4/4분기	■ '2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지자체 투자설명회(제주)	'24.1월
간담회	현대차 투자애로 면담	'24.3월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속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당면한 경제 현안에 적기 대응
- 범정부적 차원의 수출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의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역량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2-일반재정①)			
① 경제정책조정지원(1331)	일반회계	89.23	45.61
■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301)		14.15	13.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관계부처 합동안건 수	88	55	94	94	최근 3년 평균 안건수(78.7건)의 120% (비상경제장관회의 횟수를 감안하여 현실 가능한 최대 목표치)로 목표 설정	안건 및 토의과제 개수 측정
현장방문 후속조치 관련 대책 수	(2)	(-)	(3)	8	전년도 실적치의 250%인 8건으로 목표 설정	토론, 간담회 등 현장방문 관련 후속조치로 마련한 안건 개수 측정

②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I-2-②)

□ 추진배경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첨단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산업전반의 생산성 혁신 필요
- 공공 주도의 추격형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에 의한 신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에 따라 서비스업종간 융·복합,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서비스 산업 혁신 가속화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로 지역산업 침체 문제 대두 →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산업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전국 시군구 229개 중 89개(38%)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비수도권이 95%(행안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첨단산업 육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성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혁신생태계 강화 추진, High5⁺ 중점 첨단산업 분야 지원 강화
 - 첨단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마련,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안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 지속
- (소부장 경쟁력 강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우리경제의 기초체력 강화
 -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육성, 첨단 소부장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전략기술 확대, 소부장 공급망관리 대책 논의 등 추진
- (중소·벤처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기반 확보 노력
 - (중소기업)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마련('24.上),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위한 다각적 지원 등 추진

- (벤처·창업) CVC 출자·투자 규제완화 및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한 모태펀드 투자집행 제고 등 벤처투자 활성화
 - (신산업 육성) 민간 주도 신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한 R&D 체계 개선, 사용 후 배터리 제도 등 대책 마련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및 제도 개선
 - *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방안 마련, 글로벌 R&D 투자 확대,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 R&D전적·혁신적 R&D에 대한 예타 면제 추진 등 등
 - 이차전지 TF* 운영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안 마련, 업계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 지속 발굴 등 추진
 - * (팀장) 기재부 차관보 / (구성) 산업·환경·국토부 등 국장급 공무원(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
 - (서비스 혁신) 서비스산업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혁신과제 발굴·추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추진전략 등 마련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 생활밀착형 서비스 육성 방안 등 기능별·분야별 맞춤형 대책 마련
 - 신규 특구·산단 조성지원, 특구제도 개선 등 권역별 거점 육성 토대 마련 및 지역 소통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신규 특구 및 15개 신규 국가산단 조성¹을 통한 지역투자 촉진,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²을 통한 특구 운영효율성 증진
 - 1」 (특구)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추가지정 등
(산단) 미래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의 신속 착공 지원
 - 2」 국내 특구 현황 및 운영상 비효율(기능중복 등) 등 점검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안 마련
 - 시도경제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사업추진 애로¹ 등 적극 청취·해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² 등 지속 발굴·해결
- 1」 물류·건설 등 지역 밀접 산업 정책지원, 지역 현안 프로젝트 추진을 제약하는 규제 등
2」 既발표(23.10, 중앙지방협력회의) 과제 이행 및 지방시대委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추가발굴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2월	
	■ 이차전지 TF 개최	2월	
	■ 첨단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발표	3월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I) 발표	3월	
	■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 마련	3월	
2/4분기	■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발표	4월	
	■ 이차전지 TF 개최	4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6월	
	■ 여행수지 개선방안 발표	6월~7월	
	■ 항만물류 관련 대책 마련	6월	
	■ '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마련	6월	
3/4분기	■ 벤처·창업 관련 대책 마련	8월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II) 발표	9월	
	■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	9월	
4/4분기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10~12월	
	■ 서비스산업 R&D 관련 대책 마련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금융 서비스 간담회	'24.1월
간담회	애니메이션 분야 규제 간담회	'24.1월
간담회	건축·엔지니어링 업계 간담회	'24.1월
간담회	디자인 정책간담회	'24.1월
간담회	공연예술서비스 업계 간담회	'24.1월
간담회	전시행사서비스 간담회	'24.1월
간담회	교육서비스 간담회	'24.1월
현장방문	부총리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24.3월
회의	제1차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TF 회의	'24.3월
현장방문	부총리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현장방문	'24.3월
간담회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스타트업 실무간담회	'24.3월
간담회	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간담회	'24.3월
간담회	의료기기 업계 간담회	'24.3월
간담회	창업지원 서비스 관련 AC간담회	'24.3월
간담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간담회	'24.3월
간담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간담회	'24.3월
간담회	결혼업계 간담회	'24.3월
회의	관광혁신 민관협의회	'24.3월
간담회	외국인 관광 관련 IT 서비스 업계 면담	'24.4월
간담회	외국인 관광 관련 결제 서비스 업계 면담	'24.4월
회의	제2차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TF 회의	'24.4월
간담회	벤처기업 간담회	'24.8월
회의	디지털이코노미포럼	'24.9월
간담회	청년 서비스 관련 업계 간담회	'24.6월
간담회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계 간담회	'24.10월
회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4.12월
회의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	연중 수시
간담회	중기 익스프레스	연중 수시

□ 기대효과

- 첨단산업, 소부장 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역동경제 구현
- 신기술 확보·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
- 권역별 거점 중심의 지역 육성 전략에 따른 특구·산단 조성과 제도개선 및 지역 소통강화를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 달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경제정책조정지원(I-2-일반재정①)		
① 경제정책조정지원(1331)	일반회계	89.23
▪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301)		14.15
- 글로벌 포럼 개최		2.1
		45.61
		13.19
		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증기 익스프레스 건의사항 해소건수	신규 신규 신규	15개	5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평균 3건 이상의 건의사항 해소	건의사항 해소건수	관련 보도자료 등	
유망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율(%)	신규 신규	35.5	35.6%	'24년 고용전망이 전년도 기저효과 (23년 고용률 역대 최고 수준 기록 예상) 에 따라 둔화될 전망 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바이오헬스, 콘텐츠, MICE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방안 마련 등 적극적 정책대응을 통해 '23년 목표치(35.1%) 및 실적치(35.5%) 보다 높은 목표치 제시(35.6%)	월별 유망 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율 평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中 산업별 취업자

③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I-2-③)

□ 추진배경

-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투자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 촉진
- 기업·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 활동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규제)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추진
 - 경제단체·기업·전문가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건의 수렴
 - 기업체감도 제고를 위해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상황 수시 점검 및 기업 애로해소 여부 지속 모니터링
- (경제 형별규정) 경제 형별규정 개선 TF를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규정 등 정비
- (기업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뒷받침
 - 경제6단체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등 상시적인 기업-정부 소통기회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3월	
	■ 경제 형별규정 3차과제 입법예고 추진	3월	
2/4분기	■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6월	
3/4분기	■ 경제 형별규정 4차과제 개선방안 마련	7월~9월	
	■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9월	
4/4분기	■ 경제 형별규정 4차과제 입법예고 추진	10월~12월	
	■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12월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개선과제 마련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벤처·스타트업 분야 기업 간담회	'24.2월
현장방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24.3월
간담회	규제개선,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24.3월
현장방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24.6월
간담회	규제개선,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24.6월
현장방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24.9월
간담회	규제개선,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24.9월
현장방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24.12월
간담회	규제개선,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24.12월
회의	규제 개선 대안 마련을 위한 부처간 조정 회의	연중 상시

□ 기대효과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新 산업 성장 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비예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경제계 간담회 등 소통횟수	16	17	19	20회	직전 3개년 실적치 평균(17.3회)을 상회하는 목표 설정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협회·기업·전문가 등 현장방문	신규	신규	8	9회	연간 경제규제혁신 방안 발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작년보다 높은 9회 개최를 목표로 설정

(1) 주요 내용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가속화 및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3대 구조개혁]

- ① (노동개혁)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사노委 중심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구체화
- ② (교육개혁)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및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유보통합 본격 추진, 늘봄학교 전국 확산, 대학개혁, 첨단 산업 인재양성 등 지원방안 마련
- ③ (연금개혁) 국회 연금특위 중심 공론화에 맞추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논의 지원*

*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등 정부 내 자문기구 활용

-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계된 구조개혁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회이동성 개선]

-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
- ② 능력·노력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 ③ 자산 형성·활용도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양질의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① 기업의 신산업진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②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전환에 따른 선제적·체계적 고용 지원 강화

② 연령·계층·지역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미래세대 지원 강화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돌봄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두텁게 보호하면서,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저소득층 등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의 근로역량 및 유인 등을 제고하고, 맞춤형 일자리 매칭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

② 의료인력 확충 및 중증의료 등의 보상체계 개선으로 필수의료 지원 강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

③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지원 등 정책 과제 지속 발굴·추진

- 기재부 2030자문단 및 청년 보좌역 운영 내실화 등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 의견을 정책과제에 적극 반영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경제체질 개선	15세 이상 고용률
	① 3대 구조개혁 및 사회이동성 개선	사회이동성 부문별 대책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방안 마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대책 발표
	②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일자리 대책 마련 저소득층 자립지원 방안 마련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③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청년지원 강화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과제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15세 이상 고용률	60.5	62.1	62.6	62.9	'24년 전망치(62.8%) + 0.1p% 초과달성 * '24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 수준	월별 고용률의 연 평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국회 및 관계부처·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해 정책 수립·추진에 어려움 발생 우려
- (갈등관리) 시급성, 추진 용이성, 불합리 시정을 고려하여 구조개혁 추진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 부처·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 지속 보완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3대 구조개혁 및 사회이동성 개선(I-3-①)

□ 추진배경

[3대 구조개혁]

-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을 통해 저성장 극복 및 우리 경제의 역동성·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노동) 산업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및 노사관계 공정성 확립 필요
- (교육) 교육개혁 추진방향('24.1,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라, 수요자가 체감 가능한 교육개혁 세부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연금)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고려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필요

[사회이동성 개선]

-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래투자·근로의욕을 저해, 잠재자원의 충분한 활용 저해로 생산성 향상 지체
⇒ 사회이동성 개선 추진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청년·여성·중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취업 촉진을 통한 소득계층 상향기회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 (노동개혁)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사노委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이중구조 등 제도개선안 마련

-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파견제 개선 등 노동규범 현대화 과제 논의 추진
- 약자보호 등을 위해 상생임금委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방안 마련
- (교육개혁) 유보통합 추진, 첨단분야 인재양성, 교육발전특구 지원 등 핵심과제 본격 추진 → 성과 가시화·확산
- 유보통합 모델 확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참여, 늘봄학교 전국 도입 등을 통한 국가책임의 교육·돌봄 체계 구축 등
- 글로컬대학 지정 및 지원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 협력 활성화, 대학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대학규제 개선 등
- (연금개혁)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월)」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

* 의무가입상한연령-수급개시연령 일치, 출산 및 군 크레딧제도 확대 등 15개 추진과제 포함

- 국회 중심의 공론화와 병행하여, 정부 내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주요 연금개혁 과제 검토 지원

* (미래개혁자문단) 복지부·기재부·민간전문가 참여 → 국회 공론화 논의 지원, 종합 운영계획 주요과제 검토

② 소득계층 상향이동기회를 강화하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추진

- 경제 전반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기회 지원강화 등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24. 4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미래개혁자문단 회의 참여	3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4월~5월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및 다양한 업종으로 자율 확산	3월~	
2/4분기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	4~6월	
	임금체계 개편 기업 인센티브 신설	4~6월	
3/4분기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	7~9월	
	다층노후소득체계 제고방안 발표	9월	
4/4분기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 노동조합 등 노동계 및 경총 등 경영계,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 연금 가입자·수급자 등 전국민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업계 간담회 추진('24.上)

□ 기대효과

-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노동개혁을 통한 상호호혜적 노사관계 구축, 근로자 권리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 유·초·중등교육의 보편적 질 제고, 자유·창의에 기반한 고등 교육 개선 통한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공급 등 인적자본 확충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기반 확충
-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성 개선의 선순환 통해 역동경제 구현 및 성장잠재력 확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사회이동성 부문별 대책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	-	-	대책 발표 사회이동성 TF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정부대책 발표	관련부처 합동발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방안 마련			3개	❶노동유연성·안정성 관련, ❷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등 분야별 방안 마련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발표	정부 부처간 협업 및 경사노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업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발표			대책 발표	제5차 종합운영계획('23)을 토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정부대책 발표	고용부 등과 협업

②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I-3-②)

□ 추진배경

- 그간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데 정책 역량 집중 →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
 - * 취업자수 증감(만명, 전년비): ('18)9.7 ('19)30.1 ('20)△21.8 ('21)36.9 ('22) 81.6 ('23) 32.7
 - 다만, 성장을 추세적 저하,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 산업전환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등 노동시장 구조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적 인적자본 확충 등 대응 강화 필요
- 아울러,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소득 계층 상향기회 확산 필요
 -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❶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민간에서 양질의 고용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여력 확대, 신산업진출 지원 등에 정책역량 집중
 -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여건 개선 및 원활한 일자리 수급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 ❷ (미래 환경변화 대응) 저탄소·디지털 경제전환에 따른 선제적·체계적 전환 지원 강화 및 미래인력 양성 추진
 -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범부처 인력양성 사업 간 협업을 강화*하여 첨단산업 직업훈련 기회 확대

*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내 고용부, 교육부 파견인원으로 구성된 고용서비스전략팀 구성

③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연령·계층·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확대·내실화
 - * (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부담 경감 등
 - (여성) 모성보호제도 개편 등 경력단절 요인 해소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유도 등
 -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고용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
-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 지속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마련(일자리 관련)	1월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마련	1월	
2/4분기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직업훈련, 여성·중장년 관련)	4월	
	「고용서비스전략팀」 신설	4월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이행계획 마련	4월	
	이중구조 개선대책 및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	4~6월	
	「중장년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6월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6월	
3/4분기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 마련	7~9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개편안 마련	7~9월	
4/4분기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급여 제도개선 추진	10~12월	
상시	일자리 TF 개최·운영	매월	
	고용동향 분석·발표	매월	
	임금동향 분석·발표	매월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매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구직자, 근로자 등 전국민
- (이해관계자)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및 전국민

□ 기대효과

- 고용여력 확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증대
-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효율화로 신산업 발전
- 소득이동성 강화를 통한 사회이동성 개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62.8	63.9	64.3	64.4	코로나 이전('15~'19년) 5년 평균 증감폭 * 코로나 기간('20~'22년) 포함 시 과도한 증감에 따른 통계지표 왜곡 가능 * '24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 수준	월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연 평균	통계청 (연간 고용동향)
일자리 대책 마련	-	-	-	3	공식회의(비상경제장관회의, 일자리TF 등)를 통한 일자리 대책 마련	대책 수	

③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미래세대 지원 강화(I-3-③)

□ 추진배경

-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청년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도 존재
- 불공정 의료비 보상체계로 인한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공백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
- 세대간 자산격차 확대, '쉬었음 청년'의 높은 비중 등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면서 경제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약자복지)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지원 강화를 통해 두텁게 보호
 - (취약계층)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공공부조 인상,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
 - (사각지대) 고독사 및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및 발굴시스템 개선
 - (자립기반 확충)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근로역량 및 유인 등을 제고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서비스복지) 서비스복지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체감도 제고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추진

- (미래세대 지원) 취업지원, 자산형성, 주거·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내실화
- (맞춤형 지원) 대학과 연계한 선제적 취업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대출 등 자산형성 기회 제공,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 (청년참여) 1기 운영결과를 환류하여 기재부 2030자문단·청년 보좌역 제안내용이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내실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30자문단 간담회 개최('미래세대와의 대화')	1월	
	노인 돌봄·주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	2월	
	청년정책 추진계획 마련	3월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3월	
	의료인력 확충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의료개혁 4대 과제추진	1~3월	
2/4분기	저소득층 자립지원 방안 마련	4월	
	제3차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4월	
	청년인턴·2030 자문단 간담회	4~5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4~6월	
3/4분기	노인 돌봄 지원 방안 마련	7~9월	
	청년인턴·2030자문단 간담회	7~8월	
	청년보좌역-청년인턴 협의회	7~9월	
4/4분기	제4차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10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10~12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노인 돌봄·주거 복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4.1월
간담회	2030자문단 간담회('미래세대와의 대화') 진행 (부총리 주재)	'24.1월
관계부처 회의	노인 돌봄·주거 복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24.2월
간담회	직업계고 취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추진	'24.3월
간담회	대학재학생 맞춤형 취업준비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추진	'24.3월
간담회	노인 돌봄·주거 복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24.3월
간담회	청년 주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추진	'24.3월
간담회	노후소득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추진	'24.3월
간담회	의료비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추진	'24.4월
관계부처 회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방안을 위한 부처협의회 추진	'24.4월
간담회	과학적 근거기반 고용·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추진	'24.4월
현장방문	저소득층 자립기반 방안 마련을 위한 자활센터 현장방문	'24.6월
간담회	2030자문단 전체회의(하반기 킥오프 회의)	'24.7~8월
간담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	연 3회
관계부처 회의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전문가 회의	수시
간담회	2030자문단 정책발표회 중간점검 회의	연 2회(3·8월)
간담회	청년인턴·2030자문단 간담회 추진 (차관 주재)	연 2회(4·8월)
정책 발표회	2030자문단 정책발표회 추진 (부총리 주재)	연 2회(4·10월)
현장 방문	청년인턴 현장방문 추진	연 2회(5·11월)
간담회	청년보좌역·청년인턴 협의회	연 6회

□ 기대효과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 유지 및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의 탈빈곤과 사회경제적 자립
- 필수의료 분야 등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청년의 삶 여건 개선 및 질 좋은 일자리, 자산형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사회이동성을 개선하여 경제역동성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저소득층 자립지원 방안 마련	-	-	방안 마련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대책 발표	보도자료
의료개혁 4대과제 추진	-	-	제도 개선	의료개혁 4대과제 추진협업	추진경과	보도자료 등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과제 마련	-	-	15	17 '23년 목표(5)·실적(15) 및 '24년 2030자문단·청년인턴 간담회 계획 등을 감안하여 17건으로 설정	정책 반영 건수	기재부 보도자료 등

(1)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①5대분야 중점 효율화, ③재무건전성 집중관리, ④직무중심 보수관리 강화 추진
 - ① 5대분야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 점검
 - ② 재무위험기관 대상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공공기관의 부채를 적극적·선제적으로 관리
 - ③ 직무급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기관 수용성 제고 노력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산 유도
- 지정·경영평가·경영공시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하고, 대국민서비스 개선 유도
 - ①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지정으로 유형별 맞춤관리 강화
 - ②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평가 지표개편
 - ③ ESG 공시 강화 등 공시항목 분류체계 개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알리오 이용자 편의성 제고
 - ④ 공공기관 및 기재부가 협의하여 체감도 높은 서비스 과제를 상·하반기 발굴 및 실행지원
 - ⑤ 공공기관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수렴으로 질적 개선 추진
- 데이터·시설·장비·특허 등 공공기관 보유 자원의 민간 개방·공유를 확대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 ① 공공기관 기술마켓의 참여 기관·기업 확대를 지속 추진
 - ②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의 양적·질적 활성화로 민간의 창업 활동 등을 지원
 - ③ 공공기관 보유 특허의 민간 활용도 개선
 - ④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 개방 건수 확대 및 예약 편의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공공기관 혁신	•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률
관리과제	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 직무급 도입기관 수 • '23년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
	②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 확립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경영공시 개편에 따른 알리오 연간 접속자 수 •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 건수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 기술마켓 구매 실적 • 수요기반 공공데이터 개방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률	-	-	102.7 %	90%	노사합의·부서간 협의 및 법령 제·개정 지연 등에 따른 이행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90%로 설정함	기관별 혁신계획 중 '24년까지 이행완료 예정인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분야의 이행률	기관별로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공 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 소지
 -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부처·기관·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I-4-①)

□ 추진배경

- ①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충실했 혁신계획 이행을 점검 및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 추진실적 점검
- ② (재무건전성 관리) 부채증가, 원자재가격 급등 등 대내외적 환경 악화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위험 관리 필요성 제기
→ 수익성 악화 및 재무구조 취약기관에 대한 적극적 재무관리를 위해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하고, 재정건전화계획** 마련('22.8월)

* 사업수익성 악화기관(9) :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LH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5) : 석유공사, 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철도공사

** 5년('22~'26)에 걸쳐 재무위험기관의 ①비핵심자산 매각, ②투자사업 정비, ③경영 효율화 등 추진

- ③ (직무중심 보수관리 강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

* 업무량 등이 증가하지 않아도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지속 상승하는 구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기관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

* (1분기) 4월, (2분기) 7월, (3분기) 10월, (4분기) 12월~'25.1월

- 주무부처별로 기관별 이행실적 취합 및 사전점검 → 기획재정부 점검*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주무부처·기관의 책임성 확보

② (재무건전성 관리)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급증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추진

- 각기관별 '23년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영평가에 반영(~6月)
-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기관(조세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건전화계획 수정계획 및 '24~'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9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의거, 매년 국회 제출

③ (직무중심 보수관리 강화) 직무급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기관 수용성 제고 노력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확산 유도

- 직무급 도입 및 고도화에 대한 총인건비 인센티브 확대
- 현장소통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홍보 등 통해 공공기관들의 수용성 제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관련 점검단 구성·운영	2~3월	
	재무위험기관 '23년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	3월	
2/4분기	1/4분기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3~4월	
	'23년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경영평가 반영	6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실적 경영평가 반영	6월	
3/4분기	2/4분기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상반기 실적 보고	6~7월	
	'24~'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공운위보고·국회제출	8~9월	
	직무중심 보수체계 관련 공공기관 컨설팅	7~9월	
4/4분기	3/4분기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9~10월	
	'24년도 상반기 주요 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점검	10~11월	
	4/4분기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하반기 실적 보고	12월	
	2024년 이행실적 평가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직무중심 보수체계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모범기관 현장방문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및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4~'28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방향과 재정건전화계획 수정방향을 안내하고 의견수렴 실시	'24.5월
현장방문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모범기관 현장방문	'24.5월
회의	'24~'28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재정건전화계획 수정계획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 관련 의견수렴 실시	'24.8월
간담회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제도개선 의견수렴 간담회	'24.9월
간담회	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야별 추진현황 점검	'24.10월

□ 기대효과

- ❶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주무부처·기관의 책임성 확보 → 국민이 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❷ (재무건전성 관리) 공공기관 재무상황 개선을 통해 대국민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실현
- ❸ (직무급 확산)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통한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II-7-일반재정①)		
①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	일반회계	67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300)		73
	67	7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 직무급 도입기관 수	18	35	55	70	도입기관 추이 및 노사합의 선행 필요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24년 목표는 '23년 실적 대비 약 30% 상향한 70개로 설정 * 직무급 도입은 기관별 보수규정 개정을 위한 노사합의가 필수적이며, 현재 미도입 기관은 노사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직무급 도입기관 수	직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 활용
• '23년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억원)	-	-	80,8 81	78,652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23.8월)」의 이행목표 달성 * '23년 실적(8조) = 기존 목표(5.3조) + 기관의 추가 자구노력(2.7조)으로 재정건전화 시행 첫 해로 추가 노력이 많았던 측면	재정건전화 이행금액(자산매각+사업조정+경영효율화+수익확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실적 제출 및 증빙 점검

②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I-4-②)

□ 추진배경

① (공공기관 지정) 기관의 지속적인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 추진 필요

② (경영평가 지표개편) '22.10월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에 따라 '22년도 경영평가시('23.上)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 지표별 배점 변화: 재무성과 10→20점, 사회적 책임 25→15점 (공기업 기준)

- '23.10월, '23년도 평가편람을 수정하면서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를 위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편람을 일부 보완

* 그간 전년 대비 개선도만을 반영함에 따라 실적치 절대수준이 이미 우수한 경우 실적개선에 대한 부담 과중

- '24년도부터는 재무성과 외에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할 필요

③ (경영공시 제도개선) 국정과제 이행 및 ESG 경영·공시 강화* 등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 지속 제고

* ESG 공시항목(세항목 기준) : ('18) 5개 → ('21) 15개 → ('22) 25개 → ('23) 30개

- 공시업무 확대에 따른 기관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알리오 대국민 정보이용 편의성 제고 및 공시품질 제고 등 추진

④ (대국민서비스 개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미약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요구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 추진

⑤ (공공기관 청년인턴)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공공기관 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강화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

- 인턴 운영경험이 축적('09년~)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프로그램 내실화를 중점·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공기관 지정) 효율적이며 책임성 있는 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시 기관별 특수성 반영

-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추진
- 인력·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과기계 출연연구기관의 지정해제 등 검토

② (경영평가 제도개선) '23년도 평가 시('24.2~6월) 국정과제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채^{*}를 평가에서 제외하여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정부정책 수행을 유도하고,

* '23.下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겨집행한 투자액 등

-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정과제 적극이행 기관에 대해 가점(2점)을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24.10., 잠정)
- 아울러, 평가결과가 성과급 지급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로 환류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발표 이후('24.7~9월) 제공하는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

* (현재) 실적 부진기관(D-E등급)에만 제공 → (개선) 지표별 부진기관 등 전체기관으로 확대

③ (경영공시 제도개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알리오 이용자 편의 제고, 기관의 공시부담 완화, 공시제도 보완 방안 마련·추진

- 사용친화적 알리오 채용공고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공시오류에 대한 자발적 수정 유도 등 공시품질 제고
-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시대상 확대 등 ESG 공시항목 개편 및 공시항목 정비를 통해 공시 효과성·활용성 제고

④ (대국민서비스 개선) 공공기관 및 기재부가 협의하여 체감도 높은 서비스 과제를 상·하반기 발굴 및 실행지원

- (브랜드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브랜드 네이밍 마련
 - (과제발굴) 기관 자체 발굴* 외에 알리오 등을 활용하여 국민 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서비스 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 추진
- *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민원 및 언론 제기 사항, 인력증원 협의 과정에서 반영 필요 사항 및 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등
- (실행지원)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및 경영평가 가점 등 적극 뒷받침

⑤ (공공기관 청년인턴) 기관별 집중 관리로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수렴으로 프로그램 질적 개선 추진

- (운영계획 수립 · 점검) 각 기관별 청년인턴 사업계획* 수립 · 제출을 의무화('24년~)하고, 분기별로 해당 이행상황을 점검
- * 채용계획(인원 · 시기 · 기간 등), 인턴 업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포함
- (수요자 중심 운영) 청년인턴 간담회, 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현장 체감형 개선사항을 발굴, 프로그램에 반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1월	
	「'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가이드라인」 개정 · 배포	1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안) 마련	2월	공운위
	평가단 구성 워크숍	2월	
	‘24년 공공기관별 청년인턴 운영계획 수립 · 제출	2월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작성지침 배포	3월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설명회	3월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브랜드 네이밍' 마련	3월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실적 점검	3월	
2/4분기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정안에 따른 알리오 시스템 개편	4월	
	공공기관 '23년도 경영정보 발표	4월	
	‘23년도 경영평가 공통기준 마련 및 이의신청 검토	5월	
	공공기관 1분기 공시점검	5~6월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개선 간담회	6월	
	‘23년도 경영평가 결과 확정	6월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실적 점검	6월	
3/4분기	공공기관 2분기 경영정보 알리오 공시	7월	
	상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발표	7월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	7~10월	
	‘알리오’ 활용을 통한 ‘국민 제안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굴 추진	9월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실적 점검	9월	
4/4분기	‘24년도 평가편람 수정	10월	
	공공기관 3분기 경영정보 알리오 공시	10월	
	공공기관 청년인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공공기관 2·3분기 공시점검	11~12월	
	‘25년도 평가편람 확정	12월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발표	12월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실적 점검 및 '25년 계획 수립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①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사전 간담회 등을 거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의견을 반영한 공공기관 지정 추진
- ② (경영공시) 全 공공기관 대상 경영공시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24.3월)
 - 경영공시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간담회 추진('24.6월)

③ (공공기관청년인턴) 기재부-청년인턴 간담회(반기별)를 통해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프로그램에 환류

- 청년인턴 운영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과의 소통도 강화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공운위 전 민간위원 간담회(사전 간담회)	'24.1월
간담회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통해 평가위원에 '23년도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별 심화교육 제공	'24.2월
간담회	全 공공기관 대상 경영공시 제도 개선 의견수렴 및 설명회	'24.3월
간담회	청년인턴 운영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	'24.1분기
간담회	경영공시 제도개선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	'24.6월
간담회	공공기관 청년인턴과의 대화	'24.2분기
회의	전문가 및 평가단으로 구성된 지표개선 TF를 구성하여 '23년도 평가의 보완사항을 점검 및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계	'24.9월
의견수렴	'알리오' 활용을 통한 '국민 제안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직접 발굴	'24.9월
현장방문	청년인턴 운영 주요 공공기관 방문 및 간담회	'24.3분기
간담회	공공기관 청년인턴과의 대화	'24.4분기

기대효과

- ① (공공기관 지정) 기관 특성을 고려한 관리 차별화, 자율성 부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 ② (경영평가 지표개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동참 및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 ③ (경영공시 제도개선) 공시정보 이용의 대국민 편의성을 높여 정보 활용성 증대 및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 ④ (대국민서비스 개선) 지속적인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공공기관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에 기여**
- ⑤ (공공기관 청년인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턴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층 취업역량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II-7-일반재정①)		
①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	일반회계	67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300)		73
	67	7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경영공시 개편에 따른 알리오 연간 접속자 수(백만명)	14.7	17.1	17.2	- 경영공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공 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접속자 수 산정(3개년 평균에 5%이상 증가 목표) - '24년 공시대상 공공기관 수 327개로 전년대비 20개 기관이 감소한 점을 감안시 전년수준의 목표치는 도전적 수치	알리오 시스템 접속자 수 월별 집계	알리오 시스템 접속자 수 통계 (월별 집계)
•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 건수	-	-	20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시 포함되어 있는 개선과제 건수	개선과제 건수	연 2회 발표 예정인 개선 방안에 포함된 개선과제 건수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I-4-③)

□ 추진배경

- ① (기술마켓^{*}) 우수 기술·자재가 있어도 납품실적·기술입증 한계로 공공기관 입찰 참여와 납품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필요

* 전문가의 심의·인증을 거쳐 등록된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플랫폼

** 공공기관의 인증, 실적 요구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애로

- ② (데이터 개방)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

- 특히,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 보유자산 중에서 민간의 개방 요구가 많아 공공부문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

- ③ (특허 개방)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 중 민간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무료나눔 추진하여 민간 성장 뒷받침

- ④ (시설·장비 개방) 공공기관의 시설·장비를 유·휴시간에 개방하여 국민 생활편의 및 각종 행사·업무, 여가·문화행사 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기술마켓) 혁신지침^{*} 및 국정과제 15번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고도화'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추진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의1 ①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등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발굴, 제조·판로, 해외진출, 데이터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구매의 대다수가 이루어지는 마켓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관·기업 참여를 지속 확대

① (기존 거래 제품·기술의 신속한 등록) 기관별 자체 인증 기술 및 기존 구매 제품은 모두 기술마켓에 신속하게 등록(24.上)

* 등록 제품·기술 : ^{現)} 500개 → ^{'24)} 1,250개 이상

② (참여기관 확대) 보건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제품도 거래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참여기관 확대 추진(24.下)

* 참여 공공기관 : ^{現)} 63개 → ^{'24)} 90개 이상(공기업·준정부기관 참여 독려)

② (데이터 개방) 수요기반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협업 확대

- 데이터 개방 요청 대비 공개결정 실적을 관리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유도
- 기관 대 개인으로만 시행하던 데이터 개방을 기관 대 기관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③ (특허 개방) 공공기관 보유 미활용 특허의 민간 활용도 개선

- 에너지 · 자원, 기계 · 소재, 전기 · 전자, 바이오 ·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미활용 특허를 선별하여 개방 추진
 - * 상 · 하반기 공고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상황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예정
- 민간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특허 나눔 우수사례 발굴

④ (시설·장비 개방) 시설·장비 예약편의 제고 및 홍보 강화

-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장을 일반인도 이용하도록 개방
 - * 한전: 아트센터 양지홀, 남서울본부 강당 / LH: 경기남부본부 로비, 본사 남강홀(4개 시설)
- 온라인 예약시스템(알리오플러스)을 도입하여 기존 유선전화 예약방식에서 날짜·시간대별 온라인 예약으로 전환
- 개방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우수개방사례·기관추천시설 선정·소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술마켓)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구매상담회 개최	1월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심층검토기관 재검토회의 개최	1월	
	(시설·장비) 개방시설 대외표지판 부착	3월	
2/4분기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심층검토기관 재검토회의 개최	4월	
	(기술마켓)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 확대	5월	
	(시설·장비) 공공기관 우수개방사례 발표회	6월	
3/4분기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심층검토기관 재검토회의 개최	7월	
	(특허)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관계기관 간담회	8월	
	(시설·장비) 알리오플러스 예약·검색기능 고도화	9월	
	(기술마켓) 권역별 구매상담회 개최	9월	
4/4분기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심층검토기관 재검토회의 개최	10월	
	(시설·장비) 알리오플러스 고객만족도 조사	12월	
	(기술마켓) 주요 기능 자동화 등 기술마켓 플랫폼 고도화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기술마켓)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구매상담회 개최
 - (정책설명회) 기술마켓 참여기관의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기관 관심도 제고 및 추진동력 확보
 - (간담회) 기술마켓 참여기업·기관, 조달청 참여로 기업 애로·견의사항 청취
 - (구매상담회) 중소기업·공공기관 1대1 매칭 구매 상담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상담 진행
- (기술마켓) 중소기업기술마켓 협의체 회의로 참여 공공기관의 현장의견·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방향 공유
- (데이터) 협업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및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국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구매상담회	'24.1월
회의	중소기업기술마켓 협의체 회의	'24.3월
현장방문	공공기관 既개방시설 현장방문 및 담당자 의견청취	'24.4월
간담회	(특히)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관계기관 간담회	'24.8월
간담회	공공기관 시설개방 간담회	'24.8월
의견조사	공공기관 개방시설 대국민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24.10월

□ 기대효과

- ❶ (기술마켓) 공공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 지원 시너지 극대화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
- ❷ (데이터 개방)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민간기업의 성장에 활용하여 민간 중심의 부가가치·서비스 창출 생태계 조성
- ❸ (특허 개방) 특허 나눔을 기반으로 한 창업·제품 사업화 성공, 매출 확대 및 유니콘기업 성장 등
- ❹ (시설·장비 개방) 개방시설에 대한 인지도·활용도 제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시스템 개선에 따른 기관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II-7-일반재정①)		
①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300)		일반회계 67 67 73 7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기술마켓 구매 실적(억원)	1,289	1,685	2,206	3,000	직전 3개년도 연평균 성장을 30.8%보다 5%p 이상 높은 전년 대비 약 36% 성장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
· 수요기반 공공데이터 개방률(%)	47.5	41.6	51.9	54.5	전년대비 5.0% 상향한 수치(직전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4.5%보다 0.5%p ↑)를 목표로 설정

(1) 주요 내용

- (미래사회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도전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 등 수립
 - (중장기전략 마련) 경제·산업, 기후, 노동, 교육, 복지, 지역 등 전체적인 정책환경을 조망해,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혁신 전략 마련
 - 중장기전략위원회 및 전문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과제 도출
 - (ESG 확산)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민간 인센티브 설계 등
-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 발굴, 사회적 논의 본격화 및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
 - * ①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산 대응, ②경활인구 확충, ③구조개혁, ④고령·축소사회 대비
- (탄소중립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정책 수립·추진,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기후대응기금 운영 내실화 등 탄소중립 실현방안 구체화
 - (탄소중립 정책 수립)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과제 발굴·추진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수립* 및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시장 선진화 로드맵」** 마련
 - *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조정, 할당방식 개선방안(유상·BM 할당 확대) 등 반영
 - ** 시장참여자 확대, 선물 등 파생거래 도입, 경매제도 개선 등
 - (기금운영 내실화) 기금사업들의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한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용·집행관리 노력 지속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중장기 미래 대비	분야별 중장기전략 수립
관리과제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중장기전략 수립 위한 의견수렴 노력 ESG 정책과제 마련
	②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한 대책 마련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탄소중립 혁신과제 마련 기후대응기금 내 비R&D 사업 '24년도 집행률 평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중장기전략 수립	-	-	-	1 경제·사회 전반 및 인구, 탄소, ESG 등 주요 세부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전략) 수립	분야별 중장기계획(전략) 발표 건수	대외공개안전, 보도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중장기전략·ESG정책 등을 통해 제시되는 새로운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선제적인 갈등관리 필요
 - 전문가, 일반국민 등 다양한 집단과의 의견수렴 채널 활성화를 통해 정책이해 제고 및 정책개발 참여 유도
 - 중장기전략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주요 갈등과제를 사전점검·조율하고 정책 연계성 강화
 - 글로벌 ESG 제도화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바, 전문가·업계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필요
 - 인구정책기획단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주요 갈등과제를 사전점검 및 조율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에 따른 산업계 부담 등 갈등 가능성에 따라, 적극적 의견수렴으로 선제적 갈등관리 추진
 - 배출권할당위원회(부총리 주재), 민·관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갈등현장과 소통 노력 지속
- * 구성 : 환경부·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주요 경제단체, 전문가, 업종별 분과 등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I-5-①)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필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여건을 개선하고 도전 요인을 혁신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 필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가미래전략 수립) 중장기전략위원회(제6기*) 운영을 통해 우리경제의 현주소 및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 도출
 - * 박재완 위원장, 경제·산업·기후, 노동·교육·복지,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등 3개 분과 산·학·연 민간전문가 19명으로 구성
 - 중장기委 운영을 통해 민간위원·작업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포럼·컨퍼런스,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 민간(전문가·업계·미래세대)에서 마련한 「미래전략(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검토·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정책과제化
- (ESG 확산)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체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의 부문별 대책 구체화
 - 글로벌 정합성, 국내 산업여건, 업계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 공시기준」 마련
 - 국내·외 ESG 확대 정책에 중소·중견기업의 적응·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 사내전문가 교육, 찾아가는 ESG 교육,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제공
 - 공시제도(금융위)와 공개제도(각 부처)*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개항목 개편** 및 공개시기 등 조정(매년 12월→8월)
- * 환경정보공개제도(환경부),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고용부),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공정위)
- ** (예: 환경정보공개제도) 핵심정보(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공개 의무화, 비핵심정보(환경관련 수상·협약,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 삭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ESG) ESG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3월	
2/4분기	(ESG) 공시기준 제정	'24.4월	
	(미래전략)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4.5월	
	(미래전략) 미래전략포럼 개최	'24.5월	
	(ESG)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24.6월	
3/4분기	(미래전략)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4.8월	
	(미래전략) 미래전략포럼 개최	'24.8월	
	(미래전략)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계속	
	(ESG) ESG 공시기준 의견수렴	계속	
4/4분기	(미래전략)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4.11월	
	(미래전략)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계속	
	(미래전략) 미래전략포럼 개최	'24.11월	
	(미래전략)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 발표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전체·분과·작업반) 및 전문가 포럼, 공모전 등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①미래전략포럼, ②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공시기준 제정, 기업지원 대책 마련 등에 있어 업계·전문가 의견 충분히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공시기준 관련 관계부처 회의	'24.3월
	중장기전략위원회 분과·작업반 회의	'24.4~11월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24.5·8·11월
	ESG 관계부처 회의	'24.8월
간담회	중장기전략 전문가 간담회	'24.1~11월
	ESG 전문가 간담회	'24.4·6월
	미래전략포럼	'24.5·8·11월
공모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24.6~11월

□ 기대효과

-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각 부처 정책 수립의 준거로 정책 간 연계성 강화
- ESG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우리기업의 ESG 대응력 향상 및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I-1-일반재정②)		
①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1132)	일반회계	10.85
		9.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중장기전략 수립 위한 의견수렴 노력 (건)	55	51	54	55	최근 실적을 감안하여, 3년 평균 (53회)을 상회하며 '23년보다 증가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	중장기전략 관련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건수
ESG 정책과제 마련 (건)	신규	신규	신규	3	전년 ESG 정책과제 마련 건수(2건)를 상회하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기업 지원 공시제도 정비 등 정책 마련 기여건수

② 인구구조변화 대응(I-5-②)

□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下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저출산 심화
 -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사회이동성 둔화에 선제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경제 역동성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
 - * 생산연령인구(15~64세, 만명): ('19) 3,763 ('20) 3,738 ('23) 3,657 ('30) 3,417 ('50) 2,445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p, KDI): ('91~'00) 2.3 ('01~'10) 1.9 ('11~'19) 0.7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
-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분야별 핵심과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정책기획단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응분야별 핵심과제* 추진
- * ①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산 대응, ②경활인구 확충, ③구조개혁, ④고령·축소사회 대비
- (선택과 집중) 저출산 원인 분석을 토대로 기존 사업 정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문제 대응
- (구조개혁) 노동시장, 지역균형, 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병행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마련	'24.3월	
2/4분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예산 협의	'24.4~5월	
	인구위기 대응 과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4~6월	
	인구위기 대응 과제 관련 부처간 회의	'24.4~6월	
3/4분기	법정부 인구대책 추진현황 점검	'24.7~8월	
	인구위기 대응 과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7~9월	
	인구위기 대응 과제 관련 부처간 회의	'24.7~9월	
	인구위기 대응 과제 관계부처장관회의 상정·발표	'24.8~9월	
4/4분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보완	'24.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저출산 원인분석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인구위기 대응 과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15년 이후 심화된 저출산 원인분석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1월
	인구위기 대응 과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년 4~9월
회의	관계부처간 쟁점조정회의(기재부, 고용부)	'24.3월
	인구위기 대응 과제 관련 부처간 회의	'24년 4~9월

□ 기대효과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고 저출산 대책 등을 보완·개선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사회이동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역동경제와 희망사회 구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한 대책 마련(건)	-	-	4	기획단 출범('23.6월) 이후, 분기에 한 번 이상 기획단 내 협의 통해 대책 마련 목표	기획단 논의를 거쳐 저고위·비경 등을 통해 발표한 인구대책 횟수	대외공개안전, 보도자료 등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I-5-③)

□ 추진배경

- 주요국의 탄소중립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선언 및 2030 NDC 상향 등 적극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 중
 - 지난 '23.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통해 상향된 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 ⇒ 既설정된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을 통해 우리경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과제 마련이 긴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❶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과제 발굴·추진
 - 2035 NDC 수립*을 위한 전문가·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주요국 NDC 수립 사례 등 국제사회 동향 모니터링
- * 파리협정 제4조에 따라 이전 NDC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 필요("Progression Rule")
- ❷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2030 NDC를 감안해, 유상할당·BM 할당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 배출권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 마련(시장참여자 확대, 상품다양화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민·관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22.8월 출범)」를 통해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 수렴하여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③ (기후대응기금 운용) 기후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4대 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설비지원, 탄소저감 산단·플랜트 지원, 건물 및 도시국토 저탄소화 등 NDC 이행 지원
-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분야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기업 및 인력육성도 지원
- (공정한 전환) 경제전반의 탄소중립화 과정에서 영향 받는 고탄소산업의 사업전환 등 지원
- (제도·기반 구축) 탄소중립분야 기술개발(R&D),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운영 등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후대응기금) '25년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계획(안) 수립	'24.2월	
	(기후대응기금) '24년 기후대응기금 집행지침 및 자산운용지침 개정	'24.2~3월	
	(탄소중립 정책) 2035 NDC 수립 관련 관계부처 논의	'24.3월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연계 금융상품 출시 협의	'24.3월	
2/4분기	(기후대응기금) '25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요구안 마련	'24.5월	
	(탄소중립 정책) 2035 NDC 수립 관련 관계부처 논의	계속	
	(탄소중립 정책)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계속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 마련	'24.6월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협의체 총괄 분과 논의	계속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협의체 업종별 분과 논의	계속	
3/4분기	(기후대응기금) '25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정부안 국회 제출	'24.9월	
	(탄소중립 정책) 2035 NDC 수립 관련 관계부처 논의	계속	
	(탄소중립 정책)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계속	
	(배출권거래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위 의결	'24.9월	
4/4분기	(기후대응기금) '25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국회 심의·확정	'24.12월	
	(탄소중립 정책) 전기차 보조금 개편 검토	'24.12월	
	(탄소중립 정책) 2035 NDC 수립 관련 관계부처 논의	계속	
	(탄소중립 정책)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계속	
	(배출권거래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24.12월	
	(배출권거래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의견수렴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통해 할당대상업체 업종별 의견수렴 진행
 - * 구성 : 환경부·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주요 경제단체, 전문가, 업종별 분과 등
- 탄소중립 사업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개편 및 '25년 기금 투자방향 설정 등을 위한 분야별 의견수렴 진행(전문가, 관계부처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효율적 기금 운용 및 '25년 기금 투자방향 설정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24.3~4월
회의	기금구조 재정비를 위한 각 부처 실무회의	'24.3~8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협의체 업종별 분과회의 (발전, 석유·화학·정유, 철강·비철, 반·디·전, 시멘트·폐기물·기타)	'24.5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협의체 총괄분과 회의	'24.6월

□ 기대효과

-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상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경제 신성장동력 발굴
- NDC 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녹색성장 촉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탄소중립 혁신과제 마련(건)	-	3	4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탄소중립 혁신과제를 분기별 1~2회 마련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탄소중립 혁신과제 마련 내역 등
기후대응기금 내 비 R&D 사업 '24년도 집행률 평균(%)	-	-	92	90	전년도 목표(90%)를 고려하고 기금 운용 3년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90% 달성을 목표로 설정	집행률 평균

기 본 방 향

- ◇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포용적인 조세제도 마련 추진
- 민간중심 경제구조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 방지, 포용·상생·공정 기반 강화를 위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과세 형평성을 제고
- 경제활력 제고·환경변화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	3	3	14	2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1.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운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② 경제활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③ 금융세제 선진화 및 벤처투자·자산형성 지원 개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④ 수출입 활성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세제도 선진화	현장의견 수렴 건수 (세발심, 전문가· 이해관계자 회의)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한 탄력관세제도 합리화	기본관세율 대비 할당관세 조정폭
2. 세제의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보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② 재산세제 과세 합리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③ 부가가치세제의 합리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①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세수추계오차율
	②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③ 역외탈세 대응능력 강화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④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대응	Pillar1 국제회의 참석 Pillar2 간담회 개최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⑤ 국제조세협력 강화	조세조약 제·개정 협상 등 다자간 작업반회의, 양자 국제조세협의체
	⑥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소비세제 개편	정보교환 이행규정 개정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1) 주요내용

- 민간중심 경제구조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경제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강화·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과세 제도 선진화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관세제도 개선 추진
 - **(성장동력 확충)** 첨단산업 육성 위해 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 개편 추진
-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 방지, 포용·상생·공정 기반 강화를 위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과세 형평성을 제고
 - **(소득 재분배)**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기반을 지속 확대
 - **(과세형평 제고)** 세부담 적정성 제고, 공평과세 실현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제, 부동산세제 등 재산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 경제활력 제고·환경변화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
 - **(세입기반 확충)**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경제 디지털화·국제거래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제조세 제도 선진화 추진
 - **(조세제도 합리화)** 주류 제조·유통·소매 전주기 규제 개선 등 소비세제 합리화 검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환경 조성

(2)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

- 해당사항 없음(전략목표 성과지표 없음)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민간중심 경제구조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경제활력 제고)** 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세 제도 선진화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관세 제도 선제 정비 추진
 - 또한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탄력관세제도를 적극 운용하여 국내산업보호, 수급·물가안정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 제도 개편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관리과제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운영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② 경제활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③ 금융세제 선진화 및 벤처투자·자산형성 지원 개선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④ 수출입 활성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세제도 선진화	• 현장의견 수렴 건수 (세발심, 전문가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⑤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탄력관세 적극 운용	• 기본관세율 대비 할당관세 조정폭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7	7	7	'23년 실적치(7회) 수준으로 '24년 목표치 설정 * '23년 실·국 주관 개정세법 자문회의 중 해당 성과목표 관련 회의 개최 횟수	자문회의 개최 건수	직접 조사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가전략기술 등 기업 투자 세제지원, 금융과세 제도 개선 과정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이라는 오해 발생 가능
 - 신성장 동력 확충과 청년·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는 세제개편임을 적극 설명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편 과정에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납세협력 부담, 이해관계 고려 필요
 - 필요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전문가 및 소비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운영(II-1-①)

□ 추진배경

-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필요
-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투자 확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R&D, 사업화시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 범위 확대
- (일-가정양립 지원) 유연근무 장려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조세지출 관리) 조세지출 특성을 고려하여 비과세·감면제도별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하고, 세제-예산간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현행 제도 평가분석	'24.1~3월	
	○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마련	'24.3월	
2/4분기	○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의 건의 접수 및 검토	'24.4~5월	
	○ 이해관계자·전문가 회의 개최,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등	'24.6월	
3/4분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24.7~8월	
	○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및 통과	'24.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현장방문 등 추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심의회 및 적용범위 조정을 위한 회의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 국가전략기술 R&D·투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청취	'24.3월
	■ 세법 개정 관련 주요 건의처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애로사항 접수(중견련, 상장협, 중기중앙회)	'24.4월
	■ 조세지출기본계획 관련 건의 청취	'24.4월
회의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여부 검토	'24.3·9월
전문가 간담회	■ 세제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24.4~7월

□ 기대효과

- R&D·투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세제선진화 및 글로벌화(II-1-재정①)		
① 조세정책지원(2131)	일반회계	49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306)		16
		55
		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개최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내용 논의시 목표 달성 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직접 조사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국회 국회 통과 통과 통과	국회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법안이 국회통과 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직접 조사

② 경제활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세제도 합리화(II-1-②)

□ 추진배경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추진
- 내수부진·투자위축 등 경기여건에 대응하여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의 투자·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제도 합리화
- 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잡한 과제제도를 개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의 건의 접수 등 관련 세법개정안 마련 준비	'24.3월	
2/4분기	○ 세법 개정 건의 검토	'24.4~6월	
	○ 전문가 및 일반국민과의 현장 소통	'24.4~6월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 개최, 해외사례 조사 등	'24.4~6월	
3/4분기	○ 세법 개정안 마련,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24.7~8월	
	○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및 통과	'24.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경제단체·협회·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견이 반영된 세법개정안 마련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서면 건의	■ 세법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현장 애로 사항 접수 및 검토 *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련·국세청·상장협회 등	'24.3월
간담회	■ 한국경제인협회 세정 간담회를 통해 기업 건의 사항 접수 및 검토	'24.3월
회의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분과위원회	'24.4월~6월
회의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24.7월

□ 기대효과

- 투자·소비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기여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개최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내용 논의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직접 조사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제출한 법안의 국회통과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직접 조사

③ 금융세제 합리화 및 자산형성 지원(Ⅱ-1-③)

□ 추진배경

- 우리기업의 가치제고(밸류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과세제도 개선 필요
 - 청년 및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우리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경제·금융정책을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
 - 신종 투자형태*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제기
-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부동산·저작권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조각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본시장 발전)**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 촉진 및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청년도약계좌 등의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실질적 수익률 제고
- **(금융세제 운영)** 조각투자 등 신종 투자형태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 경제적 실질 및 과세형평 측면의 합리적 조세제도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현행 제도 평가분석	'24.3월	
	○ 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 건의 접수 및 검토	'24.4~5월	
	○ 이해관계자·전문가 회의 개최,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등	'24.6월	
3/4분기	○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의견 수렴	'24.7~8월	
	○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및 통과	'24.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세청 및 금융투자협회 등 협·단체 의견수렴 및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추진
- 국책연(조세연)과 자본시장 과세제도 변화 영향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시장·납세자 영향 등 점검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 건의사항 의견수렴	'24.3월
간담회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 회의	'24.4월
간담회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 회의	'24.5월
간담회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 회의	'24.6월
회의	■ 자본시장 과세제도 변화의 영향 연구용역 보고회	'24.8월

□ 기대효과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내경제 활력 제고
- 청년 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세대간 자본이동 촉진 및 국민 자산 형성 효과 기대
- 신종 투자형태에 대한 과세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혁신적인 자본시장 발전 토대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내용 논의시 목표 달성 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제출한 법안의 국회통과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④ 수출입 활성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세제도 선진화(II-1-④)

□ 추진배경

-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수출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심사·감면 등 관세제도의 적극적인 정비 필요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시장 진출에 따른 해외직구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제도 보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합리적 심사 등 수출입 관련 제도 정비
- 관세포탈·수입금지물품 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입 신고·관세납부 등 관세법령 절차상 납세 편의를 제고
- 관세법과 다른 법률간의 정합성 제고,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관세행정 합리화 및 실효성 제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현행 관세제도 평가 및 분석	'24.3월	
	○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 관련 단체 및 관계 부처의 건의 접수·검토	'24.4~5월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전문가 회의 개최	'24.4~6월	
3/4분기	○ 산업·관세행정 현장방문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24.4~6월	
	○ 관세법 개정안 마련 및 의견 수렴	'24.7~8월	
4/4분기	○ 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 관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 대응 및 국회 통과	~'24.12월	
	○ 후속 시행령 개정 착수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책대상자) 업계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현안·제도개선 등에 관해 의견 수렴
- (관련 전문가) 연구원·교수 등 관세 분야 전문가들과 관세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관세법령 개선방안에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관세 분야 민간전문가·업계관계자 등과 제도현황 및 문제점 논의	'24.4~5월
현장방문	■ 전자상거래 수출입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24.4월
	■ 면세점 방문 및 의견 청취	'24.4월
회의	■ 관세분과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관세법령 개선방안 심층 논의	'24.4~7월
	■ 면세점 관련 위원회를 통해 면세업계 동향 공유 및 신규특허 심사	'24.9월

□ 기대효과

- 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성실신고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
- 관세제도 및 관세행정 선진화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현장의견 수렴	세법심	3회	3회	3회	3회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민간 파급력이 크므로, 세법 개정에 대한 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시 목표 달성을 평가	개최 여부
	전문가 회의		신규		3회	* 관세분과 세법심 3회를 크게 상호하는 6회로 신규목표를 도전적 설정	
	이해관계자 회의		신규		3회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국회	관세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직접 조사
							직접 조사

⑤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탄력관세 적극 운용(II-1-⑤)

□ 추진배경

- 엄중한 물가 상황, 경기회복 둔화 등에 기민한 대처 및 민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탄력관세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
 - * 산업경쟁력 강화, 수급·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24년 정기 할당관세 101개, 조정관세 14개, 긴급 할당관세 40개 품목 운용 중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및 덤핑수입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한 무역구제 조치^{*} 활용 활성화 요구
 - * '24.3월 기준 20개 품목에 대해 22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부령) 운용, 중국(14건), 인도(3건), 인니(3건), 베트남(3건), 대만(2건), 일본(1건), 미국(1건) 등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철강, 합판, 플라스틱류 등 다양한 품목에 부과 중
-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불리한 품목분류(높은 관세율) 적용 등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일시적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가격 상승 품목 등에 할당·조정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통해 물가안정 적극 유도
 - * ① 할당관세: 물자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40%p 범위에서 기본 관세율 인상/인하
 - ② 조정관세: 국내시장 교란 방지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
 - ③ 시장접근물량 증량: 수입제한 농축산물의 일시수입 확대를 위해 낮은세율 적용물량 조정
-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 적극 활용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례 재검토
 - * 덤핑방지조치 이후 수입물량 및 가격변동 수준 등 조치의 적정성 여부 검토
- 新성장(전기차·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HSK 신설^{*} 및 품목 분류(HS) 국제분쟁^{**} 지원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 정책집행(예: 할당관세, 조세지원 등)을 위한 통계산출 및 핵심 수입원자재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 복잡한 품목분류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여 우리 기업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기구(WCO HSC)에 상정하여 아국(我國)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전략적 대응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산업경쟁력, 물가안정 등을 위한 탄력관세 운용	연중	
	○ 덤핑방지관세 부과 검토 및 연례 재검토	연중	
	○ 新성장산업 등에 대한 HSK 신설 등 개정작업(부처의견 수렴)	'24.3월	
2/4분기	○ '23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국회보고	~'24.5월	
	○ 이해관계자(관세청, 경제단체, 전문가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청취	~'24.6월	
	○ 산업·관세행정 현장방문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24.6월	
3/4분기	○ 新성장산업 등에 대한 HSK 신설 등 개정작업(TF팀 검증작업)	~'24.6월	
	○ '25년 할당관세 운용 등에 대한 관계부처 수요조사	'24.8월~10월	
	○ New 성장산업 등에 대한 HSK 신설 등 개정작업(부처의견 수렴)	~'24.9월	
4/4분기	○ 덤핑방지관세 부과 검토 및 연례 재검토	연중	
	○ '25년 할당관세 요청품목의 가격동향 등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 방문	'24.10~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간담회·현장방문을 통해 물가인하 및 국내산업 보호 등 정책 실효성 점검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철강산업 동향 및 무역구제 조치 현황 등 점검	'24.4월
회의	■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관계부처 준비상황 점검회의	'24.8월
현장방문	■ 할당관세 주요 품목 현장 점검	'24.9월
회의	■ '25년 탄력관세 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관세심의위원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할당관세 등의 신속·적극적인 운용으로 물가·수급 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
- 덤핑방지조치 적극 활용 및 품목분류 관련 해외통관 애로의 해소 등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1	'22	'23	'24		
기본관세율 대비 할당관세 조정폭	91%	91%	98%	80%	최근 물가상황 및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세율 조정폭을 80% 이상으로 도전적으로 산출 [$(\text{품목별 기본관세율} - \text{품목별 할당관세율})/\text{품목별 기본관세율}$]의 평균	직접 조사

(1) 주요 내용

- 복합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 방지, 포용·상생·공정 기반 강화를 위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과세 형평성을 제고
- (소득 재분배)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과세기반을 지속 확대
 - 개인택시사업자 부가세 환급 등 생활 밀착형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
 - (과세형평 제고) 세부담 적정성 제고, 공평과세 실현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제 등 개선방안을 검토
 - 또한 과세 형평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산 보유·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세제의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관리과제	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보완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② 재산세제 과세 합리화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③ 부가가치세제의 합리화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7	7	7	7 23년 실적치(7회) 수준으로 '24년 목표치 설정 * '23년 실·국 주관 개정세법 자문회의 중 해당 성과목표 관련 회의 개최 횟수	자문회의 개최 건수	직접 조사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세원투명성 강화 등 과세형평 제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계층간 갈등 유발 가능
 -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적정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추진
- 부동산세제, 상속·증여세제 등 제도 합리화 과정에서 고소득자 세제감면이라는 오해 발생 가능
 -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세제개편임을 적극 홍보하고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병행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보완(II-2-①)

□ 추진배경

- 고물가·경기둔화,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재분배* 개선 노력 지속 필요

* 소득5분위배율 : ('17) 6.96 ('18) 6.54 ('19) 6.25 ('20) 5.85 ('21) 5.83 ('22) 5.76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서민·중산층 등 세제지원 강화) 서민·중산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강화
- (소득과세 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득과세 기반 확충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현행 제도 · 평가분석	'24.3월	
	○ 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의 건의 접수 및 검토	'24.4~5월	
	○ 이해관계자 · 전문가 회의 개최,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등	'24.6월	
3/4분기	○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의견 수렴	'24.7~8월	
	○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24.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근로자 및 기업, 각종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간담회 추진
- 근로·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 적극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 국세청, 경제계 및 세무사회 등 건의사항 의견수렴	'24.3월
간담회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 회의	'24.4월
간담회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 회의	'24.5월
간담회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분과 회의	'24.6월
현장방문	■ 근로자 및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24.2분기

□ 기대효과

- 서민·중산층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소득재분배 개선을 도모하고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내용 논의시 목표 달성 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제출한 법안의 국회통과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② 재산세제 과세 합리화(II-2-②)

□ 추진배경

- 과세 형평 및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상속·증여세 과세제도 개선·보완 요구 지속
- 과세 형평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산 보유·처분 단계에서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보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속·증여세제 개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업가치 개선 지원 등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 (부동산세제 합리화) 다주택자 등에 부동산 규제를 개선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안 마련
 - 납세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복잡한 부동산 세법 정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현행 제도 평가분석	'24.3월	
	○ 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의 건의 접수 및 검토	'24.4~5월	
	○ 이해관계자·전문가 회의 개최 등	'24.4~6월	
3/4분기	○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의견 수렴	'24.8월	
	○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하여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정안 마련

* 상속·증여세 납세자, 공익법인, 공익법인 출연자

** 주택·토지 등 부동산 보유자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 양도자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세법개정안 마련	'24.4월~6월
현장방문	■ 중견기업 연합회를 방문하여 가업승계·상속 관련 주요 개정내용 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	'24.4월
	■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양도·종부·상속·증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 공익법인 세법개정 건의 관련 현장의견 청취	'24.5월(잠정)

□ 기대 효과

- 재산세제 개선을 통한 과세형평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부동산 보유·처분 단계별 과세 합리화를 통해 시장 안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내용 논의시 목표 달성 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제출한 법안의 국회통과 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③ 부가가치세제의 합리화(II-2-③)

□ 추진배경

- 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경제 지원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 세입기반 확충,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한 과세체계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생경제 지원)**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 지속 발굴
 - 개인택시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세부 규정 입법 등 지원방안 마련
- **(과세체계 개선)** 비과세·감면 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제도개선 추진
 -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신고·납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애로사항 등 파악 및 개선 방안 검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현행 제도 평가분석	'24.3월	
	○ 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의 건의 접수 및 검토	'24.4월	
	○ 이해관계자·전문가 회의 개최 등	'24.6월	
3/4분기	○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의견 수렴	'24.8월	
	○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세청 등 관계 부처 및 경제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건의사항 접수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검토
- 주요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및 세법 전문가가 참석하는 세제 발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현장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건의사항 접수·검토	■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 건의사항 접수 및 개선방안 검토	'24.3월~4월
이해관계자 간담회	■ 주요 세법 개정사항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24.5월~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세제발전심의회 소비분과 회의 개최	'24.4월~7월

□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
-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입기반 확충,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편의 증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개최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내용 논의시 목표 달성 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직접 조사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국회 국회 통과 통과 통과	국회 통과	제출한 법안의 국회통과 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직접 조사

(1) 주요내용

- 경제활력 제고·환경변화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
- (세입기반 확충) 추계모형 보완 등으로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경제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제조세 제도 합리화*
 - * (필라1) 시장소재지국 과세권 재배분을 위한 국제논의 적극 대응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대비하여 보완입법 추진
 - 역외 세원 관리 강화 및 역외탈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해외자산 신고대상 확대 등 과세제도 개선 추진
 -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세무조사·불복 등 과세절차 전반에 걸쳐 제도 합리화 추진
 - (조세제도 합리화) 유류세·친환경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 검토 및 주류 제조·유통·소매全주기 규제 개선 등 소비세제 합리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관리과제	①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 세수추계 오차율
	②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③ 역외탈세 대응능력 강화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④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대응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⑤ 국제조세협력 강화	•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⑥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소비세제 개편	• Pillar1 국제회의 참석
		• Pillar2 간담회 개최 여부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 조세조약 제·개정 협상 참석
		• 다자간 작업반 회의, 양자 국제조세 협의체 참석
		• 정보교환 이행규정 개정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	10	10	10 '23년 실적치(10회*) 수준으로 '24년 목표치 설정 * '23년 실·국 주관 개정세법 자문회의 중 해당 성과목표 관련 회의 개최 횟수	자문회의 개최 건수	직접 조사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제 규모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조세체계·세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세수 변동성 심화
 - 국세 징수관청, 경제지표 생산기관·전문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세수추계委의 전문성 보강 추진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신규 도입 과정에서 민간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혼란, 시행 시기 연기 요구 등 발생 가능
 - * '24.1월 시행, '26.6월 최초 신고·납부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개정내용 설명 및 의견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Ⅱ-3-①)

□ 추진배경

- 경제규모 증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조세체계·세입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되는 추세
- 세수오차는 예산편성이 적정 규모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예산불용 또는 과도한 예산 제약 등의 지출 비효율성을 야기
- ⇒ 변화된 세입여건, 조세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추계모형 고도화) 연구용역, 국제기구(IMF 등)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존 추계모형을 보완·개선하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
 - AI 기반 세수추계 모델 등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예산안 편성시까지 대내외 경제여건 및 세목별 특이동향, 추계모형 등 집중 점검·보완
- (전문성 강화) 세수추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분야별 동향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시장자문단^{**} 운영
 - * 민간위원장 + 기재부·국세청·관세청 + 국책연 및 학계
 - ** 위원회 개최시 반도체, 부동산 등 세수 변동성 유발 가능 분야·업종의 시장 동향 청취
 - 위원회 논의 및 자문 결과를 세입예산안에 적극 반영
- (사후점검 시스템 운영) 매월 세수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대비 이탈징후 시 재추계하는 등 적극 대응

- (투명성 제고) 매월 세목별 세수실적(전년 비교), 예산 대비 진도비(전년·최근 5년) 등 세수흐름의 기초자료 정보공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4년 세수실적 점검	'24.2월	
	○ 세수추계위원회 개최	'24.3월	
2/4분기	○ '24년 세수실적 점검	'24.5월	
	○ 세수추계위원회 개최	'24.6월	
3/4분기	○ '24년 세수실적 점검	'24.7~8월	
	○ '25년 세입예산안 편성	'24.7~8월	
	○ '25년 세입예산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24년 세수실적 점검	'24.10~12월	
	○ '25년 세입예산안 국회 심의	'24.10~12월	
	○ '25년 세입예산 국회 확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세수동향 및 전망 관련하여 국세 징수관청, 경제지표 생산 기관·전문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소통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세수추계위원회	■ 외부 전문가, 시장자문단 등과 국세수입 동향 및 전망 관련 협의	'24.3월, 5월, 6월, 8월
실무자 회의	■ 국세청, 관세청과 국세수입 동향 관련 협의	수시
전문가 회의	■ 조세연, KDI 등 연구기관, 전문가와 국세수입 전망 관련 협의	수시

□ 기대효과

-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통한 재정정책 효과성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세수추계 오차율(%p)	9.5	0.2	14.1	5.0	최근 5년간 세수추계 오차율 평균(5.3%)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10월까지 세수진도비(최종예산 대비)와 최근 3년 평균 세수진도비간 차이*	월별 국세수입 현황 보도자료

* 추경 시 추경 예산 기준으로 측정

②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II-3-②)

□ 추진배경

- 고물가·고금리, 내수 회복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친화적인 제도 마련 필요
- 제도 합리화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납세자 친화적 제도) 납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위 조세 신고부터 불복까지의 절차 전반의 제도 합리화 추진
- (납세자 권리 보호)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세 부과·징수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세제지원 강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개정안 마련 준비	'24.3월	
	○ 현행 제도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 관계부처·관련단체 등 세법 개정건의 검토	'24.4월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24.5월	
3/4분기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개정안 마련	'24.7월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등 개정안 국회 제출	'24.12월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제도 개선방안 수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회의, 현장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 검토·마련
- **(세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회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유관기관 협의	■ 국세청, 국토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	'24.3월
제도개선 건의	■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정책집행 및 심사·심판 관련 애로사항 협의	'24.3~4월
회의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세제발전 심의위원회 분과회의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24.5~8월 '24.5~7월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의견수렴	상시

□ 기대효과

-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 기여
- 납세자 친화적 세무환경 구축을 통해 조세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완료 완료 완료	개최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내용 논의시 목표 달성 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직접 조사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완료 완료 완료	국회 통과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등이 개정된 법안이 제출되어 국회 통과 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직접 조사

③ 역외탈세 대응능력 강화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II-3-③)

□ 추진배경

-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해외자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고도화·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등에 대응 강화 필요
 - * 해외소득·재산 은닉, 국내 소득의 해외이전 등
-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OECD·G20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 등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역외탈세 대응)** 조세정보 교환 확대 등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과세제도를 선진화
 - 국가간 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플랫폼인 OECD 정보 교환 동료평가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
 - * (예) ①최신 실소유자 정보 확보, ②상업등기·사업자등록 현황간 격차 축소 등
 - 조세회피 거래를 관리·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검토
- **(국제협력 강화)** UN의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마련 과정에 부의장 국가로서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 국제기준 마련에 기여
 - * '국제조세협력 UN 기본협정' 논의가 개시되어, '24년 중 기본골격(TOR) 마련 예정
-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디지털화되는 국제거래 환경, 국제기준 및 주요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과세권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 조정 제도를 선진화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 합리적 개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3년 국제조세 과세제도 관련 세법개정 후속조치 하위법령 개정	'24.3월	
2/4분기	○ 국제조세 과세제도 관련 주요국 사례 분석 · 검토	'24.4~6월	
	○ 관련 연구용역 수행(필요시)		
	○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OECD 동료평가 등 국제회의 대응		
3/4분기	○ 국제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24년 세법개정안 마련	'24.7~8월	
	○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24.9월	
	○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OECD 동료평가 등 국제회의 대응	'24.7~9월	
4/4분기	○ 국제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 완료	'24.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 세법개정 관련 국세청 업무협의 회의	'24.4월
	■ 국제조세 분과 세제발전심의회(3회)	'24.4~6월
간담회	■ 국제조세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및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24.5월

□ 기대효과

- 역외탈세 방지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 제고
- 거주자 · 비거주자 및 내국 · 외국법인간 공평 과세 실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개최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내용 논의시 목표 달성 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직접 조사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국회 국회 통과 통과	국회 통과	제출한 법안의 국회통과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직접 조사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마련	신 규	협정 마련	의장단회의 참여 및 임시위원회 협상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반영한 기본골격(TOR) 마련	참석 여부	직접 조사

④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대응 (II-3-④)

□ 추진배경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마련 필요 → OECD 중심으로 필라1·2 논의 활발히 진행 중

* ① 물리적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시장소재지국에서 법인세 과세 곤란
→ <필라1> 시장소재지국에 대한 과세권 재배분(Amount A) 논의로 대응

②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무형자산을 통한 조세회피 증가 및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 격화
→ <필라2>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로 대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필라1) 시장소재지국에 다국적기업 초과이익 과세권 재배분 방안 마련
 - 포괄적 이행체계(IF, 145개국)의 운영위원회(SG, 24개국) 이사국 지위 활용 및 작업반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견 개진
 - 다자조약 합의 등 필요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다자조약 가입 및 세법 개정 등 추진

- (필라2)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차단 및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 방지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필요한 보완입법 지속 마련

* '24.1월 시행, '26.6월 최초신고·납부

- 국제적으로 추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3년 국제조세 필라2 관련 세법개정 후속조치 하위법령 개정	~'24.3월	
	○ 디지털세 관련 OECD 운영위·작업반 등 국제회의 대응	~'24.3월	
2/4분기	○ 관련 연구용역 수행(필라1 Amount A 다자조약문 국문화)	~'24.4월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기업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24.5월	
	○ 디지털세 관련 OECD 운영위·작업반 등 국제회의 대응	~'24.6월	
3/4분기	○ 국제조세 분야 '24년 세법개정안 마련	~'24.9월	
	○ 국제조세 분야 '24년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 디지털세 관련 OECD 운영위·작업반 등 국제회의 대응	~'24.9월	
4/4분기	○ 필라2 법률 보완 관련 연구용역 수행	~'24.11월	
	○ 국제조세 분야 '24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24.12월	
	○ 디지털세 관련 OECD 운영위·작업반 등 국제회의 대응	~'24.12월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개정내용 설명·의견 청취 → '24년 세법개정안 반영 및 제도안착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글로벌최저한세 개념 설명, OECD 질의회신 내용 공유 등 * 기업실무자 대상	'24.4월
전문가 회의	■ 글로벌최저한세의 실무 적용에 필요한 행정규정 마련 등 * 법무·회계법인 대상	수시

□ 기대효과

- (필라1) 거대 디지털 기업 등에 대한 시장소재지국 과세권 재배분을 위해 합리적인 규율 체계 마련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 및 시행을 통해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인하 경쟁 방지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Pillar1 국제회의 참석			80%	디지털세 관련 IF 운영위원회, 주제별 실무작업반(TFDE, WP6 등)이 수시 개최되어 국익과 관련 높은 회의 참석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참석여부	직접 조사
Pillar2 간담회 개최 여부			개최	디지털세 관련 변경사항 등을 국내 기업과 공유·의견수렴하여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므로 간담회 개최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직접 조사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국회 통과	제출한 법안의 국회통과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직접 조사

5 국제조세협력 강화 (II-3-⑤)

□ 추진배경

- 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시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변화된 경제환경 및 국제기준에 맞게 조세조약 제·개정
- ② 디지털세 등 최신 OECD 논의에서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자 및 양자간 협력 강화
- ③ 금융소득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정기금융정보교환 협정 이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 ④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OECD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
- ⑤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G20에서 합의된 BEPS 이행과제를 기존 조약에 실효성 있게 반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조세조약 제·개정 협상 및 국내 이행과정 모니터링
- ② 기존 정기 국제조세협의체(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회의 개최 및 주요 국가*와의 협의체 신설 추진
*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 ③ 정기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 규정 개정 및 OECD peer review 대응
- ④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그룹회의 등 국제회의 참여 및 관련 법령 개정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캐나다 조세조약 상호합의 개시	'24.1월	서한 전달
	OECD WP1 회의	'24.2월	
	한-키르기즈스탄 조세조약 개정 협상(서면) 완료	'24.2월	
	OECD CARF 그룹회의	'24.3월	
	OECD WP 10 회의	'24.3월	
	한-베트남 조세조약 상호합의	분기중	
2/4분기	금융정보교환 관련 고시개정 완료	'24.4월	
	한-코트디부아르 조세조약 제정 1차 협상	'24.4월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24.4월	
	한-아르헨티나 조세조약 제정 1차 협상	'24.5월	
	OECD CARF 그룹회의	'24.6월	
	한-일 국제조세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분기중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정 6차 협상	분기중	
	한-싱가포르 국제조세협의체 1차 회의 개최	분기중	
	한-이탈리아 국제조세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분기중	
	한-독일 국제조세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분기중	
3/4분기	OECD WP1 회의	'24.9월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AEOI 그룹 회의 참석	'24.9월	
	OECD WP10 회의	'24.9월	
	한-탄자니아 조세조약 제정 6차 협상	분기중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개정 4차 협상	분기중	
4/4분기	OECD APRG 회의	'24.10월	
	OECD CARF 그룹회의	'24.10월	
	한-파라과이 조세조약 제정 3차 협상	분기중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개정 3차 협상	분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조세조약 제·개정 및 양자 국제조세 협력 회의 개최 시 관련 업계 등 사전 의견수렴*

*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진출국을 대상으로 조세관련 애로 청취

- 자동금융정보교환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기대효과

- 조세조약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세부담 완화 및 조세관련 애로 해소
- BEPS 이행과제를 조세조약에 반영하여 조세조약을 통한 조세회피에 실효성 있게 대응
-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에 따른 이행규정 정비를 통해 정보교환 실효성 제고 및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 협력 강화
- 양자·다자간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이행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조세조약 제개정 협상 등	신규	7	조세조약 제·개정소요, 국제기구 동향 및 양자간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목표치 설정	협상 개최실적	회의·협상 기록
다자간 작업반 회의, 양자 국제조세협의체	신규	8		회의 참석·개최 실적	
정보교환 이행규정 개정	신규	개정 완료	실효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한 이행규정 개정 필요성 감안	법령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소비세제 개편(Ⅱ-3-⑥)

□ 추진배경

-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국내 유가 및 물가 안정화 필요
- 경쟁 제한적 주류시장을 개선하여 국산 주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개별소비세 관련 조세특례 등 제도 합리화 지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물가·민생 안정)** 국제 유가·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각 4월말, 6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의 연장 또는 환원 여부 검토
-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경쟁 제한적 주류시장 개선, 국산 주류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전통주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해 제조-유통-소매 전과정의 규제개선 추진
- **(개별소비세제 합리화)** 친환경(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여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4.12.31. 일몰) 연장여부 등 검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분석, 연구용역 등 준비	'24.3~4월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세제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24.3~4월	
2/4분기	○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의 건의 접수 및 검토	'24.4~5월	
	○ 이해관계자·전문가 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	'24.4~5월	
3/4분기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세제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24.8월	
	○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및 통과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류,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
- 관계부처(국세청, 농림부 등) 및 주류업계 등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주류업계 간담회(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TF)	'24.5월
현장방문	■ 전통주 및 소주·맥주 제조현장 방문(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TF)	'24.5월
회의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자동차업계 의견수렴	수시
회의	■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관련 정유업계, 발전사 의견수렴	수시

□ 기대효과

- 유류세·개별소비세의 적정 운용을 통한 물가 안정화, 중산 서민층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
- 주류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 및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발전 기여
- 친환경, 서민생활 보호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개별소비세제 운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개최 개최	개최	세법개정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내용 논의시 목표 달성 된 것으로 평가	개최 여부	직접 조사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국회 국회 통과 통과 통과	국회 통과	제출한 법안의 국회통과 시 목표 달성된 것으로 평가	국회 통과 여부	직접 조사

기 본 방 향

- ◇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25년 예산 건전재정기조 확립
 -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공공부문 솔선수범(기금운영비, 수지차기관) 등 강력한 재정운용 혁신 추진
 -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안정·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투자 뒷받침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
 - 빈틈없는 고용안전망 구축, 전주기 교육혁신 지원 및 탄소중립 산업 지원 및 지역 체감형 문화채움 지원 강화 등 추진
- ◇ 민간중심 경제활력제고, 핵심 SOC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지속, 농어업 경쟁력 투자 확대 및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 수출기업 적극 지원, 中企·소상공인 자생기반 조성
 - 광역교통 인프라 및 청년 농업인 육성, 글로벌 R&D 지원 등
- ◇ 두터운 약자복지, 저출산 적극 대응, 의료개혁 뒷받침 등 대응 강화
 - 취약계층 자립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원, 재난 대응 적극 투자
- ◇ 민생법죄 예방·피해자보호 지원, ODA 효과성 제고 및 스마트 국방혁신, 무기체계 우선순위 조정 등 국방 투자 효율성 제고
 - 전세사기, 성범죄 등 범죄대응, ODA 내실화, 군 복무환경 개선 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5	15	3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22년 인수위 발표 연차별 새정부 국정과제 투자계획(국비)
1. 건전재정기조 확립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총지출증가율 (단위: %)
	②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협업과제 수 (단위: 개)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신규사업 유사중복 차단 건수(개)
		국고보조사업 재량지출 증가율 관리(%)
		기금 총지출 대비 기본경비 비중(%)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고용부문·교육·문화· 환경분야 투자규모
	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확충	일·가정양립 투자 규모
	②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	청년일경험 참여인원 실적
	③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글로컬 대학 선정 건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상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
		문화격차해소 지원대상
3.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R&D 분야 총지출 증가율
	① 수출 우상향·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등 민간활력 견인	수출 우상향 관련 재정 지원규모
	② SOC 및 농어촌 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	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관련 재정 지원규모
	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교통격차 완화 및 교통 편의·안전 제고 투자 규모
		농어업 경쟁력강화 위한 투자 규모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투자규모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규모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국민의 복지,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효율적 재정투자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① 두터운 약자복지 및 저출산 대응 강화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률
	② 의료개혁 4대과제 적극 뒷받침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가구 수
	③ 재난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필수의료 관련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횟수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사업 예산 반영 현황
		재난안전투자 확대
		소방 훈련·장비 투자 확대
		해양 안전관리 투자 확대
5. 공공·안전 및 국가적 협력 투자 강화		체감형 공공질서 안전 사업군 *투자비율(%)
	① 민생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민생범죄대응, 피해지원 및 재난정비
		마약·스토킹·보이스 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예산 확대 (%)
		사회적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천건)
	② ODA 투자효과성 제고	* 범죄피해자, 장애인, 보호아동 등 대상
		기후대응·보건·디지털 ODA 투자비율(%)
		ODA 융합 프로그램 신규 발굴 개수(건)
	③ 국방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확대(억원)
		군 복무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률(%)

(1) 주요내용

 추진배경

- 과거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매년 100조원 내외 재정적자 고착화에도 국정과제, 핵심 투자과제 필수소요는 지속

* 관리재정수지(조원 결산): ('18) △10.6, ('19) △54.4, ('20) △112.0, ('21) △90.6, ('22) △117.0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 견지하면서 국정과제 및 약자복지, 역동경제 구현 및 국가책임 강화 등 핵심정책과제 투자

(2)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 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국정과제 투자액(조원)	-			11	209*		'22년 인수위 발표 연차별 새정부 국정과제 투자계획(국비)	'27년 예산안 및 결산실적 확인	27년 예산안 및 결산실적 기준

* 5년간 합계('23~'27년), 각 연도의 '22년 대비 순증값의 합

(3)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국가채무, 재정적자, 총지출증가율 관리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뒷받침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
- 사업 타당성 전면 재점검,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등 지출구조 조정과 민자활용 등 투자재원 다각화 등을 통한 재정운용 혁신
 - 신규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방지 및 보조사업 지속적 정비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위해 기금운영비(기본경비)는 지출효율화 기조 下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지출 대비 비중 지속 관리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건전재정 기조 확립	관리재정수지(GDP대비 %)
관리과제	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총지출증가율(%)
		협업과제 수 (개)
	②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신규사업 유사중복 차단 건수(개) 국고보조사업 재량지출 증가율 관리(%)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기금 총지출 대비 기본경비 비중(%)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년 예산안)	'22 ('23년 예산안)	'23 ('24년 예산안)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4.4	△2.6	△3.9	△3.0 이내	재정준칙(안)* 제시된 기준	'25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25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 재정준칙(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하로 관리,
단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비율 축소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지출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정비,
성과관리 강화 등 지출혁신 추진 시 관계부처 등 반발 우려
- (갈등관리계획)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재
투자하는 중점분야 선정 시 부처·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 재정정책자문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Ⅲ-1-①)

□ 추진배경

- 건전재정기조 전환으로 총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정책과제가 다수
-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의 체질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효율적 재정관리 등 재정혁신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업타당성 점검)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전면 재점검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제·폐지
 -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 필수 정책소요 제외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하여 총지출 증가율 관리
- (부처간 협업 확대) 현장·과제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요 정책과제 효과적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 및 배포	'24.3월	
2/4분기	지출구조조정 지침 마련 및 협업과제 발굴	'24.5월	
	'25년 예산안 검토 및 지출구조조정 추진	'24.5~8월	
3/4분기	'25년 예산안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25년 예산 국회 의결	'24.12월	
	'25년 확정 예산 대국민 홍보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요구·편성과정에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컨설팅 등 부처간 협업을 토대로 지출혁신 추진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회의	'25년 예산안 편성방향 및 협조요청 사항 전달(기재부-각 부처) * 지출한도 준수,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추진으로 중점분야 재투자	'24.5~8월

□ 기대효과

-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
-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등 현장중심 과제 및 우리사회 구조개혁 과제 등 핵심 정책에 투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년 예산안)	'22 (23년 예산안)	'23 (24년 예산안)				
총지출증가율 (단위: %)	8.3	5.2	2.8	5.4 이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관리	'25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25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협업과제 수 (단위: 개)	-	-	-	4개	예산안 편성지침상 재정투자 중점 4대 분야별 협업과제 1개씩 발굴 *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25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25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② 유사충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Ⅲ-1-②)

□ 추진배경

- (현황)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지출 확대와 함께 재정사업 수*가 증가하고, 국고 보조사업 수 및 예산**도 증가 추세

* 전체재정사업 세부사업 수(본예산): ('20) 7,693 → ('23) 8,509 → ('24년) 8,249개

**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 수(본예산): ('20) 1,640 → ('23) 1,723 → ('24년) 1,603개

국고보조사업 예산(본예산): ('20) 86.8 → ('23) 102.3 → ('24년) 109.1조원

- 그러나, '24년은 보조사업 정비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으로 전체 재정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의 수 큰 폭 감소

- (한계) 신규사업의 경우, 부처간 유사충복 사업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 보조사업은 계속 유지되는 경향

⇒ 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한계점 지속 내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신규사업의 유사충복성 검토·방지 및
② 보조사업 지속적 정비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 제고

- ① (유사충복 방지) '신규사업 유사충복 사전점검'을 실시해 부처 신규제기 사업이 타부처 사업과 유사충복성이 있는지 검토

* 각 부처는 신규사업 요구 시 과거 유사충복 빈발 관계부처(2~4개)에 유사충복 여부를 상호 열람·검증하고, 이를 기재부가 다시 검증하는 제도(Check-list 도입)

- 검토 결과 유사충복성이 확인된 신규사업은 예산에 미반영

⇒ '25년 예산안에는 전년(48건) 보다 높은 55건 목표

* 신규사업 차단실적: ('20) 30 → ('21) 35 → ('22) 42 → ('23) 48 → ('24목표) 55건

② (보조사업 정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반영,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지원필요성이 낮은(집행부진 등) 사업의 지출 최소화

⇒ 지난 5년간('19~'24년) 보조금(재량지출*) 평균증가율이 4.1%인 점을 감안하여 3.5% 이내로 지출증가율 관리 목표

* 인위적 지출규모 제한이 곤란한 의무지출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국고보조금 재량지출 규모(본예산) : ('19) 44.7 → ('24) 53.9조원 (+20.6%)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규사업 요구시 유사증복 검증방안 명시(편성지침)	'23.3~4월	
2/4분기	보조사업 정비계획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영	'23.5월	
	각 부처 요구 신규사업에 대한 타부처 의견 조회	'23.5~6월	
3/4분기	보조사업 구조조정 예산안 편성	'23.6~8월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유사증복 의견 예산반영	'23.6~8월	
	'24년 예산안 국고보조사업 정비실적 정리	'23.6~8월	
4/4분기	유사증복 통폐합 및 보조사업 구조조정 예산안 국회 확정	'23.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현장방문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부처간담회	• 보조사업 정비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24.4월
현장방문	• 사업연장 및 증액 요구 보조사업 현장방문	'24.5월
회의	• 차년도 신규 제기 예정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점검 회의	'24.12월

□ 기대효과

- 정부 예산사업의 수혜자 편의 증대
- 행정비용 절감 및 중복지출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신규사업 유사증복 차단 건수(개)	35	42	48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높은 성과를 시현한 '23년 (48개) 보다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전년 성과 대비 14.6% 상향 설정	신규사업 유사증복 차단 건수	'25년 예산
국고보조사업 재량지출 증가율 관리(%)	△1.2	△4.8	1.1	3.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보조금(재량지출) 규모를 55.8조원 이내로 관리- 최근 5년간('19~'24) 보조금(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4.1% 보다 낮은 3.5% 이내 수준으로 목표 설정	전년 대비 보조금 재량지출 증가율	'25년 예산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Ⅲ-1-③)

□ 추진배경

-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보호, 안전 보장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로 경상비 절감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한 건전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투자 중점, 건전성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24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통보
 - * ❶사회보험성 기금 재정주체 내실화, ❷사업 평가를 통한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❸금융성 기금 보증관리 및 운용인력 전문성 강화, ❹기금 여유재원 통합관리 등
-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위해 기금운영비(기본경비)는 지출효율화 기조 下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지출 대비 비중 지속 관리
- 수지차 보전기관 대상 출연금 편성시 경상비 규모를 필수 소요 수준으로 반영하여 총지출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 업무추진비·여비 등 경상경비 최대한 절감 추진('22년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 '2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5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 및 통보	'24.3월	
2/4분기	기금관리주체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24.5월	
3/4분기	기금운영비 협의·조정 및 수지차기관 경상비 관리방안 마련	'24.6~8월	
	'25년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	'24.9월	
4/4분기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결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계부처, 기금관리주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현장방문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업무연락	• 다수의 기관(62개 수지차 보전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효율적 협의를 위해 업무연락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사항 공지 등 상시 의사소통	상시
사전설명회	• 금년도 기금운영비 편성 관련 희망 기금관리주체 의견수렴	'24.4월
현장방문	• 완료소요 확인 및 특이소요 요구 기관 현장방문	'24.5월
협의	• 특이소요 제출 기금 위주 예산안 협의 • 수지차 보전기관 '25년 예산 요구 관련 기관 설명 및 협의	'24.6월

□ 기대효과

- 작성지침을 사전에 수립·제시하여 재원배분 우선순위 등 중장기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가능
- 기금 운영비 절감 편성을 통한 지출관리 개선 및 수지차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관리를 통한 정부출연금 집행 효율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기금 및 정부 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기금 총지출 대비 기본경비 비중(%)	0.444 0.412 0.329	0.371	최근 기본경비 절감 기조 감안, 최근 3개년 평균(0.395%) 보다 도전적 수준으로 설정	기금기본경비/ 기금 총지출	'25년 정부예산안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	4.01 3.58 3.42	3.6	최근 3개년 평균(3.67%)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비율 *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의 합계			

(1) 주요 내용

- (배경) 고물가 및 경기둔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한편, 디지털·그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대비 필요성 증가
- 청년층의 학비부담, 장기간 취업준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지연,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으로 결혼·출산 연쇄적으로 지연
 - * 대졸자 첫 취업 소요기간(개월): ('20) 7.2 → ('21) 7.7 → ('22) 7.8 → ('23) 8.2
 - 저출산에 대응한 교육 혁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 교육경쟁력(IMD, '23년): 63개국 중 26위(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적합도는 49위로 최하위권)
 -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격차 해소와 동시에 교육혁신, 기후·환경변화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의 역할 중대
- (주요내용) ①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②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 ③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

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빈틈없는 고용안전망 구축

-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고용서비스, 청년 일경험 지원 등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 및 NEET 청년 발굴·지원
- 저출산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유연근무 지원 강화,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② 생애 전주기별 교육혁신을 지원하여 맞춤형 미래 인재양성

-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을 확대하여 소득여건과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 산업 수요에 맞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③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를 위해 산업·노동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추진

- 기후대응 강화 등을 위해 탄소중립·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운영으로 재정 내 탄소중립 기조 확산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사업별 감축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입('22년)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지역 체감형 문화채움 지원 강화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지원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고용부문·교육·문화·환경분야 투자규모
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확충		· 일·가정양립 투자 규모 · 청년일경험 참여인원 실적
②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		·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 글로컬 대학 선정 건수
③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상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 · 문화격차해소 지원대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고용부문·교육·문화·환경분야 투자규모 (단위: 조원, 교부금 제외)	66.0	64.9	66.5	66.7	■ 과거 3년치 연평균 증기율 (0.3%)을 감안, 3년 평균 수준으로 목표 설정	■ '25년 예산안 편성 ■ '25년 예산안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고용·교육·문화 등 부문별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강하고, 지원 대상·범위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부처별 예산 협의회(부처),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민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노력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확충(Ⅲ-2-①)

□ 추진배경

- (민생 여건) 고물가, 경기둔화 등 실물경제 어려움에 따라 구직자·기업의 일자리 어려움 가중 \Rightarrow 일자리 미스매치 발생
 - 청년은 취업지연과 구직포기, 여성은 경력단절로 노동시장 이탈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 분야의 빈 일자리*가 증가하고, 첨단분야 인력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 빈일자리수(만명): ('20) 12.7 ('21) 16.6 ('22) 22.0 ('23) 20.9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

** '23~'27년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신기술 분야 34.5만명의 인력부족 <직능研>

- (구조 여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감소, '10년대 이후 생산성 향상도 둔화 \Rightarrow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필요

* 생산연령인구(15~64세, 만명): ('19) 3,763 ('20) 3,738 ('23) 3,657 ('30) 3,417 ('50) 2,445

**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p, KDI): ('91~'00)2.3 ('01~'10)1.9 ('11~'19)0.7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청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취업 지원→고용유지」 단계별 고용서비스,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 ② (일·가정 양립) 저출산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경력단절 예방 집중 지원
- ③ (직업훈련) 신기술·신산업 분야, 영세 중소기업, 외국인 등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 지속 확충
- ④ (고용안전망)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구직급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 지속 지원

⑤ (노동개혁)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완화를 위해 원·하청간 자발적 상생노력 및 컨설팅·인센티브 등 지원

⑥ (안전한 일터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을 위해 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인프라 구축 지속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 점검	1월	
	○ '25년 예산안 아젠다 간담회 개최	2월	
	○ '25년 예산편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3월	
2/4분기	○ 직업훈련기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4~5월	
	○ 청년일자리 사업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4~5월	
	○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 현장방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4~5월	
3/4분기	○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개선, 실업급여 등 지출혁신 추진	7~9월	
	○ 고용관련 재정사업 '24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제출	7~9월	
4/4분기	○ 고용관련 재정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	10~12월	
	○ '24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및 예산 국회 확정	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전문가, 구직자·재직자, 사업주 등 적극적 정책현장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일·가정 양립 전문가 간담회	'24.2월
	○ 청년정책 간담회	'24.2월
	○ 청년도전지원 등 청년정책 관련 현장방문	'24.2월
	○ '25년 예산안 편성지침 전문가 간담회	'24.3월
현장방문	○ 청년일자리 사업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24.4~5월
	○ 직업훈련 우수기관, 고용센터 등 방문	'24.4~5월
	○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 현장방문	'24.4~5월
회의	○ 관계부처·기관 회의	수시

□ 기대효과

- 청년,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동 촉진
- 시장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산재 예방·산재율 감소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확충(Ⅲ-2-①)		
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301)	일반회계	8,891
②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305)	일반회계	1,263
③ 모성보호육아지원(358)	고보기금	21,006
④ 내일배움카드(일반)(300)	일반회계	5,188
⑤ 구직급여(350)	고보기금	111,839
⑥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300)	일반회계	10,764
⑦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300)	일반회계	12,255
⑧ 산재보험급여(350)	산재기금	77,923
⑨ 클린사업장조성지원(350)	산재기금	5,070
		6,577
		2,441
		24,968
		5,849
		109,144
		8,375
		9,425
		78,761
		4,7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일가정양립 투자 규모 (단위: 조원)	2.26 ('22 예산)	2.43 ('23 예산)	2.86 ('24 예산)	3.15 ('25년 예산)	■ '25년 예산 편성시 일가정양립 제도 확대개편 등 통해 '24년 예산 대비 10% 이상 확대	■ '25년 예산안 편성 * '모성보호육아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단위사업 투자규모
청년일경험 참여인원 실적 (단위: 만명)	1.1 ('21 실적)	1.3 ('22 실적)	2.7 ('23 실적)	4.1 ('24년 목표 실적)	■ '24년 적극적 집행관리(연중)를 통해 '23년 청년일경험 참여 인원(2.7만명) 대비 50% 이상 확대	■ '24년 일경험 참여인원 집계 ■ 한국고용정보원 HRD 시스템 추출

②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Ⅲ-2-②)

□ 추진배경

- (교육기회)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영유아 교육·돌봄 지원 강화 필요성 대두

* 출생아수(통계청): ('70) 101만명 → ('12) 48만명 → ('22) 25만명

- (교육경쟁력)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필요

* 반도체산업 인력 신규 수요('21~'31년): 10년간 약 12.7만명(한국반도체산업협회)

** 인구소멸위험지역('23.2월): 전체 시군구 261개 중 118개(51.8%)(한국고용정보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보통합·돌봄학교 등 교육·돌봄격차 해소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교육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학습기회 보장
-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지원 확대
- 저소득·저학력·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 인턴십 지원 등 청년 국제교류 확대
- 대학·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첨단분야 특성화 대학, 부트 캠프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컬 대학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 ('23) 10건 → ('24) 10건 → ('25) 5건 → ('26) 5건 ('23~'26년 총 30건)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① 전년도 실적 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	1~2월	
	②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확대방안 관계부처 협의	3월	
2/4분기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편성 지침 협의	4월	
	② 글로컬 대학 지원금 산정방식 협의	5~6월	
3/4분기	① 교육급여 지원안 관계부처 협의	7~8월	
	② '25년 예산안 편성	7~9월	
4/4분기	① 늘봄학교 추진현황 점검	10월	
	② 유보통합 준비현황 점검	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첨단분야 인재양성, RISE 및 글로컬 대학 추진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 등을 위한 현장간담회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교육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2월
	지역대학 청년 간담회	'24.2월
	RISE 추진을 위한 지자체 및 대학 관계자 등 간담회	'24.5월
현장방문	글로컬 대학 지원 현장방문	'24.9월
	늘봄학교 추진상황 현장점검	'24.10월
회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24.3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관계부처 회의	'24.3월
	교육급여 관련 관계부처 회의	"24.7월
	예산 편성 및 정책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수시

□ 기대효과

- 영유아기 통합돌봄 및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초중등교육 교육급여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격차 완화
-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소득여건과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장학금을 확대하여 학비·생활비 마련 기회 확대
- 저소득, 장애인 등 열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Ⅲ-2-②)		
①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고특	2,547
② 교육급여	일반	1,573
③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일반/고특	45,664
④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고특	11,520
⑤ 대학혁신지원	고특	9,110
⑥ 전문대학 혁신지원	고특	5,620
⑦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일반	206
		4,438
		1,604
		47,205
		12,025
		10,046
		6,179
		2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 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단위: 만명)	12 12 14 (22 (23 (24 예산) 예산) 예산)	20 (25 예산)	일학습 병행을 통한 학비와 생활비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6만명 지원	■ '25년 예산안 반영여부 확인	■ 각 회계연도 예산 (차년도 예산반영)			
글로컬 대학 선정 건수(누적) (단위: 건)	- - 10	20	'23~'26년 30건 선정을 위한 글로컬대학30 추진계획상 '24년 10건 신규 선정 예정	■ '24년 선정 결과 확인	■ '24년 글로컬 대학 선정결과 보도자료			

③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III-2-③)

□ 추진배경

-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3.4월)에 따른 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수요 급증
 -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및 탄소 多배출 업종 비중, 불리한 에너지 전환 여건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 완화 필요
- * GDP 대비 제조업 비중(%): (한국) 27.8, (미국) 11.6, (영국) 9.6, (일본) 20.8
- ⇒ 탄소 다배출 분야에 대한 저탄소화, 탄소중립 ·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감축 실적에 근거한 과학적 재정지원 추진 필요
- 지역별 문화향유 여건의 격차가 존재하여 문화소외계층의 수요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대두
- ⇒ 지역맞춤형 문화 · 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지역 문화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문화격차 해소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❶ (기후대응 강화) 산업·노동의 탄소중립 전환 및 탄소흡수원 확보 지원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수행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 내 탄소중립 기조 확산
 -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사업별 감축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입('22년)
→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예산투입, 감축효과를 늘리도록 사업추진 방식 보완 등
 - NDC 감축경로를 고려한 무공해차 보급목표(~'30년까지 450만대)에 따라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지원
 - 내연기관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효과성 높은 저감 사업에 재정 투자 강화

② (문화격차해소 지원)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지역 체감형 문화채움 지원 강화 필요

- 지역 체감형 문화패키지 발굴·브랜드화 지원 강화 및 사업 공동 설명회·공모, 통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재정비
- 수요맞춤형 문화·스포츠 공모사업 추진 및 문화이용권 비수도권 혜택 확대 등을 통한 지역 콘텐츠 채움 및 수요 확충
- 지역특화·지역거점·광역권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 지원 및 수요 맞춤형 국가유산 활용 지원 등 지역사회 활력 제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기후·환경 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Agenda 설정	1~3월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현장방문 등 추진		
	○ 문화분야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등 중기투자계획 부처협의 등	~3월	
2/4분기	○ 예산편성지침 등에 기후환경분야 관련 내용 반영	4~6월	
	○ 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중점 투자방향 검토		
	○ 예산안 편성을 위한 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 문화분야 사업 구체화 관련 관계부처 및 업체, 전문가 등 협의	~6월	
3/4분기	○ '25년도 기후환경분야 사업 검토	6~8월	
	○ '25년 예산편성시 문화격차해소 및 관광활성화 등 관련예산 편성	~8월	
	○ '25년 예산안 국회제출	9월	
4/4분기	○ '25년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의결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예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기후위기 현장 방문 추진
- 무공해차와 그 충전인프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관련 제작사 및 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 등 추진
- 문화격차 해소 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체육분야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무공해차 제작공장 방문을 통해 향후 생산계획, 애로사항 등 논의	'24.2월
간담회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	'24.上
현장방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현장 방문	'24.上
간담회	문화·체육분야 관계기관 간담회	'24.5월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및 무공해차 보급 등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기여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Ⅲ-2-일반재정③)		
① 예술향유기회확대(1765) ■ 문화예술향유지원(301)	문예기금	2,488 2,751
② 생활체육활성화(5161)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00)	체육기금	852 1,203
③ 대기오염발생원 관리(1633)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312)	에특회계	5,189 7,344
④ 녹색금융(6232)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400) ■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300)	기후기금	1,152 400 2,236 500
⑤ 에너지 이용합리화(5139)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302)	에특회계	2,633 2,946
⑥ 전력공급기술(5703) ■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301)	전력기금	2,737 3,217
⑦ 수송기기 기술개발(3551)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301)	일반회계	3,136 3,4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 목표치 '21 '22 '23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상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개)	-	288	294	300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2년 최초도입된 것으로서, 시행초기임을 감안, 전년대비 2%이상 높은 수준으로 목표 설정	■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서상 온실가스감축 인지사업 수
▶ 문화격차해소 지원 (지원대상자 : 만명)	272	280	272	274	■ 소득·지역 등에 따른 문화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 전년대비 2만명 확대	■ 통합문화 이용권 및 체육 바우처 지원 대상 규모(25년)

(1) 주요 내용

-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자방안 마련
 - (수출 우상향) 무역금융·물류·해외마케팅 등 수출기업 애로 적극 발굴·해소,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촉진 등 지원
 - (中企·소상공인 생태계) 유망기업의 해외창업·기술개발 지원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中企·소상공인 자생 기반 조성
- 광역교통 인프라 등 핵심 SOC 구축에 대한 정부 투자를 지속하고 및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SOC) 국민안전 및 편의와 직결된 SOC에 대한 정부 투자 강화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투자 지속
 - (농·어업) 농·어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미래성장산업화 지원,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투자 확대
- 초격차·대체불가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
 - (전략기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및 미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12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
 - * ❶반도체/디스플레이, ❷이차전지, ❸첨단모빌리티, ❹차세대 원자력, ❺차세대통신, ❻수소, ❼사이버보안, ❽인공지능, ❾첨단로봇, ❿양자, ❻우주·항공·해양, ❽첨단바이오
 - (ICT 경쟁력) 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데이터 구축·활용, 인재양성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R&D 분야 총지출 증가율
관리과제	① 수출 우상향·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등 민간 활력 견인	수출 우상향 관련 재정 지원규모
	② SOC 및 농어촌 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	교통 격차 완화 및 교통 편의안전 제고 위한 투자 규모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규모
	③ 미래성장동력 확보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투자규모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규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년 예산)	'22 ('23년 예산)	'23 ('24년 예산)				
R&D분야 총지출 증가율(%)	2.4	0.9	△5.2	증가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 위한 R&D 투자규모 확대 (최근 3년 산출평균 추세치 △0.6% 대비 초과달성)	'25년 예산안 R&D 투자 규모	'25년 예산안 확인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인구감소·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저하로 재정여건 악화로, 기업 자금, 조달여건 악화, 주택수요 둔화 등 대내외 위험요인 상존
- (갈등요인) 경제활력 제고 투자 강화 위한 관련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심사지연 우려
- (갈등관리계획) 경제활력 제고 위한 투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정당성 적극 설명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수출 우상향·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등 민간활력 견인(Ⅲ-3-①)

□ 추진배경

- (수출 여건 저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기조에 따라 수출 주도권 확보에 어려움 지속 전망
 - * 경제성장률('23 → '24년) : (美) 2.5% → 1.6%, (EU) 0.5% → 0.9%, (中) 4.6% → 4.5%
 - * 미국 자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개편, 중국 원자재 수급 정부통제 강화 등
 - (민간중심 경제 위축) 최근 고금리 기조·경제불확실성 등으로 민간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
 - * '23년 3분기 투자: 1.4조원 ('22년 3분기 대비 △1.7조원, △32%)
 - * 가계부채(조원, 기말) : ('11) 916 → ('16) 1,343 → ('21) 1,863 → ('23.4/4) 1,886
- ⇒ ①수출 우상향 + ②中企·소상공인 생태계 혁신 등 지속 가능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활력 견인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수출 우상향) 무역금융·물류·해외마케팅 등 수출기업 애로 적극 발굴·해소,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촉진 등 지원
- ② (中企·소상공인 생태계) 유망기업의 해외창업·기술개발 지원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中企·소상공인 자생 기반 조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처간 안건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24.1~3월	
2/4분기	선정된 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안 수립	'24.4~6월	
	예산안 편성을 위한 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3/4분기	2025년도 예산 편성	'24.6~8월	
	2025년도 예산 정부안 제출	'24.8월	
4/4분기	2025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출여건 및 중소벤처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역상권 등 주요 정책현장 방문,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등 추진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간담회	수출 활성화 및 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4월
현장방문	주요 수출기업 및 지역상권 현장 방문	'24.10월
회의	수출 관계부처 회의, 기조실장 간담회 등	'24(연중)

□ 기대효과

- 글로벌 수출 주도권 확보 경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입·수출 물류,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애로 해소
- 中企·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등 생태계 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 집중 투자 → 장기적으로 민간의 자금·역량 활용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년 예산	'24년 예산
수출 우상향·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등 민간활력 견인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반회계	3,029
②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일반회계	372
③ 수출지원기반활용(중기부)	일반회계	1,197
④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일반회계	1,652
⑤ 소상공인 스마트화	소진기금	1,048
		3,213
		426
		1,119
		1,845
		2,2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1 '22 (22년 예산) '23 (23년 예산) '24 (24년 예산) '25년 예산)	목표치 '24 (24년 예산)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수출 우상향 관련 재정 지원 규모(억원)	5,817 6,078 6,106	6,150	전전재정기조에도 수출 우상향 촉진을 위해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을 상회하는 목표치	수출역량 강화 관련 예산 합계 ①+②+③+α	'25년 예산안 및 본예산 확인
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관련 재정 지원 규모(억원)	2,073 3,857 4,310	4,525	직전 3개년도 평균 실적보다 5% 이상 상회하는 목표치 설정	창업지원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 합계 ④+⑤	'25년 예산안 및 본예산 확인

②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SOC 및 농어촌 투자 효과 제고 (III-3-②)

□ 추진배경

① (SOC) 지역간 교통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필요성 확대, 교통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교통 안전 투자 시급성도 고조

- (균형발전) 수도권-지역간 정주여건 격차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교통격차*가 지역소멸 가속화

* 시도별 철도역 접근성(분) : (전북) 53분 (경북) 52분 (강원) 49분 (서울) 22분

- (안전·편의) 기반시설 노후화*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 필요성 상승,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국민 접근성 부각

* 30년 경과 SOC 시설물 : ('17) 3,344(11%) → ('22) 3,853(12.7%) → ('27) 5,340(17.6%)

② (농어촌) 농어촌 소멸위기 및 혁신동력 약화 극복 위한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SOC) 국민안전 및 편의와 직결된 SOC에 대한 정부 투자 효율화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투자 지속

- (균형발전) 지역거점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의 단계적 확충 및 지방 주요 거점도시 인프라 투자 계속

- (안전·편의) 도로·철도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 투자 강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 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착수,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도로 개선율(도로), 노후 구조물 개량률(철도) 지속 관리

② 농·어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미래성장 산업화 지원,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투자 확대

- (미래산업화) 스마트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 활용하여 미래성장 산업화 및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농수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24~'26, 3개소), 그린바이오 첨단 분석시스템('24~'25, 2개소) 등
- (청년농 육성) 청년농이 농촌에 진입·정착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
-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유해시설 정비, 농·어업인 건강권 보호 강화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농림분야 투자방향 아젠다 간담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수렴	'24.3월	
	·농어업 경쟁력 강화 역점사업 발굴 및 중기사업계획 반영		
2/4분기	·교통망 확충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24.4~6월	
	·지방 거점도시 인프라 투자 촉진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농어업 경쟁력 강화 역점사업 발굴을 위한 부처 협의		
3/4분기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	'24.6~9월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반영한 예산안 편성		
4/4분기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투자 확대 분야 성과 점검	'24.10~12월	
	·농어업 스마트화, 농수산물 사전적 수급관리 등 성과 점검		
	·'25년 예산안 국회 의결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광역교통 개선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주요 교통 SOC·농어촌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등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GTX-A 동탄역 개통준비, 스마트팜 등 현장 방문	'24.3월
간담회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농어촌 정비 등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4월
회의	재정정책자문회의, 기조실장 간담회, 지방재정협의회 등	'24(연중)

□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 적극 뒷받침
- 청년 농업인 육성, 미래성장 산업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투자 확대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년 예산	'24년 예산
교통 격차 완화 및 교통 편의·안전 제고 위한 투자 규모		
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교특회계	9,692
②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교특회계	581
③ 지하철 건설 지원	교특회계	6,065
④ 신공항 건설	교특회계	1,463
④ 고속철도건설	교특회계	4,423
⑤ 광역도로	교특회계	540
⑥ 광역철도건설 지원	교특회계	11,429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규모		
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기금	54
② 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206
③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특회계	20
④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농특회계	345
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특회계	-
⑥ 그린바이오소재첨단분석시스템구축	농특회계	-
⑦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특회계	875
⑧ 청년농업인영농 정착지원	농특회계	551
⑨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농특회계	831
⑩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특회계	48
⑪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농지기금	1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년 예산)	'22 (23년 예산)	'23 (24년 예산)	'24 (25년 예산)			
교통 격차 완화 및 교통편의·안전제고 위한 투자 규모	3.59 조원	3.42 조원	4.10 조원	4.45 조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SOC 투자규모 8.5% 이상 확대 (추세치 6.8% 대비 초과달성)	'25년 본예산 규모(정부안)	'25년 정부 예산안 확인
농어업 경쟁력강화 위한 투자 규모	2,236 억원	3,041 억원	4,097 억원	5,470 억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전년 대비 투자액 증가분 30% 이상 확대	'25년 본예산 규모(정부안)	'25년 정부 예산안 확인

③ 미래성장동력 확보(Ⅲ-3-③)

□ 추진 배경

① (12대 전략기술) 경제·안보 등의 관점에서 첨단기술 및 공급망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와 동시에 대내적으로 성장률, 주력사업 혈력 둔화

→ 향후 기술주권 확립 및 독자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초격차·대체불가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필요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차세대 통신(5G,6G)
**⑥수소, ⑦사이버보안, ⑧인공지능, ⑨첨단로봇, ⑩양자, ⑪우주·항공·해양, ⑫첨단바이오

② (ICT 경쟁력 강화) 산업·사회 전반의 디지털 新기술 융합·확산에 따라 ICT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12대 전략기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및 미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12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차세대통신,
⑥수소, ⑦사이버보안, ⑧인공지능, ⑨첨단로봇, ⑩양자, ⑪우주·항공·해양, ⑫첨단바이오

-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최신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등 기반 조성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반도체 CAD 알고리즘, 초고성능 컴퓨팅 SoC 플랫폼 기술 등

- (우주) 독자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발사체 성능·신뢰성 강화 및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역량 확충 등 주요 전략기술의 자립화·고도화 추진

- (인공지능)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AI 핵심원천기술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전문 인력양성 및 민군·양용 AI 활용 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첨단바이오)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인공세포 설계·제작, 자동화기술 등 합성생물학 기초·원천연구 및 인프라 조성

② (ICT 경쟁력 강화) 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데이터 구축·활용, 인재양성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AI 전산업 활용·확산) AI 활용을 제조·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AI 전환(AX)을 촉진하고 경제 역동성 제고
 - (AI 인프라)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데이터 센터 발전 지원 등 AI·클라우드 산업 성장 기틀 마련
 - (AI 확산)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으로 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AI 서비스 수급 매칭으로 전 경제·사회분야 AI 확산
- (데이터 구축·활용) 양질의 AI 특화 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 통합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생산·유통 등 거래 기반 조성 및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정부(DPG)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 (인재양성) 지역·기업의 디지털 인재 수요 대응을 위한 ICT 전문·실무 인력양성으로 안정적 디지털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ICT분야 중장기 투자방향 발굴 관계기관 간담회	'24.1~3월	
	• ICT/정보화 분야 중점투자방향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24.1~3월	
2/4분기	• ISP제도 비대면 설명회 개최	'24.4월	
	• ICT/정보화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4~5월	
	•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를 위한 사업 발굴	'23.5월	
	• ISP 수립 공통가이드 개정·배포	'24.6월	
3/4분기	•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를 위해 관련 R&D 예산 확대 편성	'23.6~8월	
	• ICT/정보화 분야 예산안 편성	'24.7~8월	
4/4분기	• 12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R&D 예산 국회 확정	'23.12월	
	• 예산안 국회 의결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전략기술 육성 및 ICT 전문가 양성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주요 연구단지 등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등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주요 국책연구단지 및 대학, ICT 교육장 등 현장 방문	'24.3월
간담회	전략기술 육성 및 ICT 전문 등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4월
회의	재정정책자문회의, 기조실장 간담회, 지방재정협의회 등	'24(연중)

□ 기대효과

- (12대 전략기술) 차세대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전주기적 R&D 투자 기반 확충
- (ICT 경쟁력 강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우수 인재양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12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및 민간협력 강화(III-3-③)		
①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사업군 (첨단바이오, 반도체, AI, 우주, 양자, 이차전지 등)	-	46,827 50,234
② 신산업 육성·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한 디지털 기반 강화를 위한 ①정보통신(ICT) 및 ②정보화 예산	-	①22,481 ②51,534 ①18,408 ②50,0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년 예산)	'22 (23년 예산)	'23 (24년 예산)	'24 (25년 예산)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규모 확대 (원)	4.2조	4.7조	5.0조	5.3조	· 23-27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당초 총지출 증가율(4.2%) 보다 높은 5.3조원 목표	'25년 본예산 규모 (정부안 기준)	'25년 정부 예산안 확인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확대(만명)	1.9	2.1	2.3	2.55	·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디지털 분야 (AI·SW 등) 인재양성 규모	'25년 예산안에서 인력양성 인원 추출

(1) 주요 내용

- (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의료·안전 분야 재정 소요 지속
- 복지 지출의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등 어려운 민생여건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지속 필요
 - * 복지지출(조원): ('20) 180.5 ('21) 199.7 ('22) 217.7 ('23) 226.0 ('24) 242.9(+7.5%)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긴요
 -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의료 붕괴 가속**, 고령화·건강 관심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하나 인력공급 부족***
 * 지역 내 의료 이용률('22) : 서울 89.5% vs 충남 67.0%, 경북 63.9%
 ** 전공의 총원율('19→'23) : 소아청소년 92→26%, 응급의학 92→84%, 흉부외과 63→56%
 *** '35년 의사 9.7천명 부족(보건사회연구원, '21), '50년 2.2만명 부족(KDI, '22) 전망
 - 기후변화 등에 따른 대형 재난 반복으로 국민안전 위협 증대
- (주요내용) ①두터운 약자 복지 및 저출산 대응 강화, ②의료개혁 4대과제 뒷받침, ③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 ① 약자에 대한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제공 및 출산·육아 지원 등 저출산 대응 강화
 - 취약계층 자립 지원으로 사회이동성 제고 + 기존 복지제도 보완
 - 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 ② 필수의료 확충 및 빈틈없는 의료체계 지원
 - 의료개혁 핵심과제인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적극적 재정지원 추진
 - 의료인력 이탈 등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재정적 대응 적시 추진

③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 극한 기후 상황 등에 대비하여 ICT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소방 훈련·장비투자 확대 통한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생·포용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관리과제	두터운 약자복지 및 저출산 대응 강화	①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률 ② 아이돌보미 서비스지원 가구 수
	의료개혁 4대과제 적극 뒷받침	① 필수의료 관련 현장의견 수렴 횟수 ②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사업 예산 반영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① 재난안전 투자 확대 ② (보조지표1)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③ (보조지표2) 재난대비 민간역량 강화 ④ 소방 훈련·장비 투자 확대 ⑤ 해양 안전관리 투자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예산)	'22 ('23 예산)	'23 ('24 예산)	'24 ('25 예산안)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35.8	35.4	37.0	37.0+a	'23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실적치가 크게 상승 → '24년에는 '23년 복지지출 비중 이상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25년 예산안 복지분야 지출 ÷ 총지출	'25년 정부 편성 예산안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복지·의료·안전 등 부문별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강하고, 지원 대상·범위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부처별 예산 협의회(부처), 지방재정협의회(지방),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민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노력

(4) 기타 :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두터운 약자복지 및 저출산 대응 강화(Ⅲ-4-①)

□ 추진배경

- (현황)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약자'에 대한 더 두텁고 촘촘한 복지 및 저출산 문제 대응 긴요

* 복지지출(조원): ('19) 161.0 ('20) 180.5 ('21) 199.7 ('22) 217.7(연평균 +10.9%)

- (약자복지) 소득분배는 개선 추세*이나,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취약계층 어려움 지속

* 전년 대비 지니계수 $\Delta 0.005$, 소득5분위배율 $\Delta 0.07$ 배p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저출산) '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 출생아 수 23만명 등 저출산 문제 심화

* 합계출산율(명): ('19)0.92 ('21)0.81 ('23)0.72 / 출생아 수(만명): ('19)30.3 ('21)26.1 ('22)23.0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약자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서비스(건강·거주·돌봄)를 촘촘하게 보완
- (저출산) 양육비·의료비·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약자복지 강화 및 저출산 대응 지원 소요 검토	'24.2~3월	
	○ 저출산 정책방향 및 대응과제 협의·검토	'24.3월	
2/4분기	○ 약자복지 강화 관련 부처 간담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4.4~5월	
	○ 저출산 대응 관련 저고위 등 부처협의	'24.4~5월	
3/4분기	○ '2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및 기초생보 제도개선 확정	'24.7월	
	○ '25년 예산안에 약자복지 강화 및 저출산 대응사업 예산 반영 → 국회 제출	'24.9월	
4/4분기	○ '25년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및 예산 국회 확정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노인 취약계층 경로당 방문 등 현장간담회	'24.4월
회의	저출산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24.4월
간담회	저출산 대응 간담회	'24.4~5월
회의	기준중위 소득 및 기초생보 관련 부처협의	'24.6월
간담회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4.6~7월

□ 기대효과

-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진정한 약자'의 복지수요에 신속 대응, 보장강화를 통한 자립유인 제고
- (양육부담 완화) 건강·보육·근로 등 출산 가정의 수요에 맞는 핵심과제 적극 투자를 통해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약자복지 강화 및 양육부담 완화(III-4-①)		
■ 생계급여	일반회계 60,152	75,411
■ 자활사업	일반회계 6,936	7,499
■ 긴급복지	일반회계 3,155	3,585
■ 첫만남 이용권	일반회계 3,194	3,804
■ 부모급여	일반회계 16,215	28,887
■ 아동돌봄지원	일반회계 3,546	4,67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²² 예산) '22 (²³ 예산) '23 (²⁴ 예산) '24 (²⁵ 예산)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²² 예산)	'22 (²³ 예산)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률 (단위: %)	5.02	5.47	6.09	6.09+a	■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한 23년 실적치 이상으로 설정	■ '25년 예산안 편성 ■ '25년 예산안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가구 수 (단위: 가구)	7.8	8.5	11.0	12.6	■ 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규모 +1.4만명 대비 15% 높은 +1.6만 가구 확대 목표	■ '25년 예산안 편성 ■ '25년 예산안

② 의료개혁 4대과제 적극 뒷받침 (Ⅲ-4-②)

□ 추진배경

-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의료개혁 4대과제*** 발표(21일)
 -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지역 의료 격차 완화, 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의대 증원 등에 대하여 전공의 등은 사직서 제출 등 진료현장 이탈로 대응하고 있어, 의료 공백 최소화 추진 필요
 -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24.2~) 인력 보강, 전원 지원 등 의료 공백 상황에 적극 대응 필요

<의료개혁 4대 과제 관련 대통령님 주요 발언사항>

- ▶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2.1, 민생토론회)
- ▶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3.19, 국무회의)
- 중증외상, 분만, 어린이 진료 등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 추진 ('25년 예산안)
 - 소아·산부인과 등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 지역 간 의료격차 불균형을 위하여 지역거점병원 육성 등 기존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지원방안 검토

○ (빈틈없는 의료체계 지원) 의료인력 이탈로 인한 공백상황 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재정적 대응 적시 추진

- 복지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필수인력 확보, 현장 혼란 방지, 대국민 홍보 등 지원방안 검토
- 지원방안에 대한 시급성·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기존 사업 변경, 예비비 등 활용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년도 집행 실적 점검	1~2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발표과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1~2월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예비비 편성	2월	
	의료현장 방문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3월	
2/4분기	관계 부처 간담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4~5월	
	필수의료 현장 방문, 전문가 협의 등 현장 의견 청취	4~5월	
	필수의료 분야 예산 요구안 접수 및 사업 검토	6월	
	(필요시) 예비비 추가 검토	필요시	
3/4분기	'25년 필수의료 사업 정부안 최종 확정	8월	
	결산 등 국회 대응	9월	
4/4분기	'25년 예산안 국회심의 대응 및 예산국회 확정	11~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비상의료체계 운영중인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24.3월
현장방문·간담회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조직기증원 방문	'24.3월
회의	의료개혁 4대과제 '25년 예산 지원 방향 관계부처 협의	상시
회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검토 방향 관계부처 협의	상시
회의	'25년 신규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24.5월
현장방문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현장 방문 추진(장소 미정)	'24. 4~5월중

□ 기대효과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 목표 달성을 기여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등 필수의료 체계 정상화
-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의료공백에 대한 적시 지원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의료개혁 4대과제 적극 뒷받침(Ⅲ-4-일반재정②)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303)	일반회계	12
○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300)	일반회계	321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307)	일반회계	10
○ 국가암관리(301)	국민건강 증진기금	606
○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303)	응급의료 기금	306
○ 응급의료종사자전문화교육(309)	응급의료 기금	11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316)	응급의료 기금	233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301)	응급의료 기금	109
○ 응급의료체계 이송지원(311)	응급의료 기금	240
○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313)	응급의료 기금	12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303)	응급의료 기금	306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300)	지특회계	1,511
		1,94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필수의료 관련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횟수(신규지표)	-	-	-	10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1~2월을 제외하고 매 월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면담 횟수
필수의료 및 공공 의료 사업 예산 반영 현황(억원)	8,948	11,429	7,065	7,772	최근 3년간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 수준 확대 목표(전체 예산증가율의 4배 수준)	정부안 예산 규모
						'25년 예산 편성안

③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Ⅲ-4-③)

□ 추진배경

①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하는 재난 예방 인프라 확충

- 기후 변화 등에 따라 풍수해, 산불 및 지진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등 국민 안전 위협 요인 증대
- 재난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전 대비가 미흡하여 재정을 통한 복구지원이 반복되는 상황 지속 발생

② 소방 훈련 · 장비 투자 확대 통한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 소방 국가직화(‘20.4월) 이후 국가 단위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소방력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지속 확대 필요
- 재난의 대형화 · 복합화에 따라 다양한 과학기술 기반 소방장비 및 대형 장비 도입 필요성 증대

③ 해양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기상이변, 선박 통항량 증가 등에 따라 최근 선박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해양 안전 대응 강화 필요성 대두

* ('21) 3,588건 → ('22) 3,446 → ('23) 3,757건 (연평균 2.3%↑)

- 해양 사고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관제 강화 필요

* '23.2.4. 신안 청보호 전복사고 발생, 총 12명 중 사상자 9명 (실종자 4명 포함)

'24.3.9. 통영 2해신호 전복사고 발생, 총 11명 중 사상자 11명 (실종자 5명 포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하는 재난 예방 인프라 확충

- ICT 등 과학기술 기반 예측·예보 체계 고도화 및 재해 위험지역 지속 정비 등 예방 인프라 적기 구축 지원
-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내진성능인증 지속 확대 등을 통한 민간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로 복구지원 재정 부담 완화 추진

② 소방 훈련·장비 투자 확대 통한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시 훈련 강화 및 안전교육 지속 투자
- 현장 소방인력의 안전 등을 위해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 및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한 대형·첨단 소방장비 지속 확충

③ 해양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해양경찰의 신속한 해양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노후 구조장비 정비·교체 및 신규장비 도입, 훈련시설 운영 지속 지원
- 선박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광역 단위 선박교통관제(VTS)^{*} 구축, 기운영 VTS의 시설 확충·개량·등에 재정 투자 확대

* 선박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박에 대해 해양안전정보 및 항만운영정보 등 관제서비스 제공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및 안전예산 중점 투자방안 마련	'24. 1~3월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사업 관련 관계부처 협의	'24. 1~3월	
	해양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필수소요 산출	'24. 1~3월	
2/4분기	안전예산 투자방안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24. 4~6월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위한 훈련 및 장비 예산 협의 및 검토	'24. 4~6월	
	해양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대상 사업 확정 및 예산 협의	'24. 4~6월	
3/4분기	재난 대비 및 사고 대응력 제고 위한 안전예산 편성	'24. 7~9월	
	사고현장 대응 강화 예산 정부안 편성 및 홍보자료 작성	'24. 7~9월	
	해양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대상 사업 예산 편성	'24. 7~9월	
4/4분기	관련예산 국회 제출 및 최종 의결	'24. 10~12월	
	사고현장 대응 강화 예산 관련 국회 대응 및 최종 의결	'24. 10~12월	
	해양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예산 국회 제출 및 최종 의결	'24. 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난 피해 국민 및 재해위험지역 거주민 포함 일반 국민 소통 강화

□ 기대효과

- 재난 예보·예측 고도화 및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하여 국민안전 보장
-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소방 훈련 강화 및 장비 확충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소방인력 및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
- 노후 구조장비 교체, 특수훈련 등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능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①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균특	7,033
②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균특	785
③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일반	-
④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일반	112
⑤ 수색구조역량강화	일반	125
⑥ VTS 구축·운영	일반	228
		8,697
		715
		55
		120
		118
		2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재난안전 투자 확대	20.0	21.7	23.9	24.1조	- 정부 총지출 변동성을 감안, 최근 3개년('22~'24년도) 평균 안전 예산(21.9조원) 대비 10% 높은 수준으로 목표치로 설정	안전예산 규모 (감염병 제외)	'25년 예산안*
(보조지표1)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6,176	7,033	8,697	7,667억	- 정부 총지출 변동성을 감안, 최근 3개년('22~'24년도) 평균 안전 예산(7,302억원) 대비 5% 높은 수준으로 목표치로 설정	재해위험지역 정비규모	'25년 예산안*
(보조지표2) 재난대비 민간역량 강화	-	14.9	17.8	21.4%	- 재해취약지역 주택 풍수해 보험 가입률 증가 추세 고려하여, 전년 대비 20% 높은 수준으로 설정	재해취약지역 주택풍수해 보험 가입률 *(가입가구 수/ 주택 가입 대상)*100	'24년 풍수해보험 가입자료 (보험사)
소방 훈련·장비 투자 확대	717	611	633	696억	- 지표 관련 예산의 변동성 감안, 전년도 증가율(3.7%)을 상회하는 +10%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관련 사업 예산 규모	'25년 예산안*
해양 안전관리 투자 확대	478	352	382	420억	- 지표 관련 예산의 변동성 감안, 전년도 증가율(8.6%)을 상회하는 +10%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관련 사업 예산 규모	'25년 예산안*

* 안전예산 규모 등 예산 관련 실적·목표치는 예산편성 순기상 다음년도 예산임
(예시: 재난안전 투자 확대 '23년 실적은 '24년 예산에 해당)

(1) 주요 내용

-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 이상동기범죄, 성범죄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엄정 대응 및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근절 노력 지속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 구조 서비스 확대
- ODA 투자 효과성 제고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경제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추진하고, ODA를 활용한 국익 확보 노력 지속 추진
 - ODA 규모 확대에 따른 질적 내실화를 위해 분야·국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성 제고 및 대외정책과 연계 추진
- 국방 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병의 복무 만족도 제고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한 무기체계 우선순위 조정, 스마트 국방운영 등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스마트 국방혁신 등에 재투자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용 및 강력한 안보태세 유지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공공·안전 및 국가적 협력 투자 강화	체감형 공공질서·안전분야 사업군 투자비중 확대
관리과제	①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예산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② ODA 투자 효과성 제고	기후대응·보건·디지털 ODA 투자 비율
		ODA 융합 프로그램 신규 발굴
	③ 국방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확대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2 예산 (23 예산 (24 예산 (25 예산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예산)	'22 (23 예산)					
체감형 공공질서·안전 사업군 *투자비율(%) (신규) * 민생범죄대응, 피해지원 및 재난정비	9.9	10.2	10.6	10.7%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중 최근 3년 체감형 주요사업군 투자비율 평균 실적 대비(10.2%) 0.5%p 상향한 10.7% 설정	'25년 확정예산 중 공공안전분야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5년도 예산 확정안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예산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신규 투자의 적절성, 지원범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
- 부처별 예산 협의회(부처), 지방재정협의회(지방),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민간) 등을 통해 의견수렴, 예산안 반영 노력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강화(Ⅲ-5-①)

□ 추진배경

- 민생을 위협하는 7대 악성사기*, 스토킹,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①전기통신금융 ②전세 ③가상자산 유사수신 ④보험 ⑤사이버 ⑥특경법 등 다액 ⑦투자영업거래
-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지속 증가하여 자체구제 수단이 부족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필요

※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 국정과제 64.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 국정과제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 안전 확보
 - 사회적 약자 보호 :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위한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❶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마약 등 흉악범죄, 스토킹,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 제고
 - 특히, 일선 현장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장비 투자를 확대하고 미약범죄 등 유관부처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종합플랫폼 구축 지원
- ❷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을 개선해 피해자 구제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기능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성화 등 두터운 피해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정 투자 확대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사법·행정 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Agenda 설정	'24. 1~3월	
	○ 범죄피해자 지원강화 방안 마련 관련부처 협의	'24. 1~3월	
2/4분기	○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강화 방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24. 4~5월	
	○ 사법·행정 분야 예산 편성 관련 부처 협의	'24. 4~6월	
3/4분기	○ 공공질서 분야 예산편성 및 국회 제출	'24. 7~9월	
	○ 공공질서 분야 국회 결산 대응	'24. 8~9월	
4/4분기	○ 공공질서 분야 예산안 국회 확정	'24.11~12월	
	○ '25년도 예산 집행 계획 및 차년도 편성 방향 검토	'2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아동·여성·청소년,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및 대국민

□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예방·대응 강화 및 재발 방지와 범죄 피해자 구제 및 일상 회복 지원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 마약류 범죄·스토킹·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근절을 통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민생안정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마약스토킹·보이스 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예산 확대(%)	-	-	목표 +100% 실적 +46.4% (23년 대비 예산 증가율)	+5.6%	'24년도 증액규모 및 재정자출 변동성을 고려 '24년도 총자출 증가율 2.8% 대비 2배인 5.6%로 설정	관련 분야 '24년 대비 '25년 예산 증가율
②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천건) * 범죄피해자, 장애인, 보호아동 등 대상	14.1	14.9	17.2	16.3	최근 4년 기중평균 실적에 연평균 증가율(7%) 대비 10%p 상향 * 15,193건×7.0%×1.1	'24년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건수

② ODA 투자 효과성 제고(III-5-②)

□ 추진배경 (목적)

- 그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 확대를 위하여 ODA 양적 확대에 집중^{*}한 바, 질적 고도화를 병행할 필요성 확대
 - * ODA 규모(조원) : ('19) 3.1 → ('20) 3.4 → ('21) 3.7 → ('22) 3.9 → ('23) 4.5 → ('23) 6.3
 - 특히, ODA 예산을 확대와 더불어 사업효과성 확보, 투명한 성과관리, 우리나라 국익과 연계 등 다차원 고려 필요
- ODA가 1차원적 기여를 넘어서, 개도국과 「상생의 국익 실현」을 위해서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바탕으로 한 효율성 제고가 긴요
 - 기후변화 대응, 보건 디지털 등 핵심과제 투자분야 중심으로 편성방식 개편 →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선도 국가로 발돋움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융합 ODA) 여타 선진국과 달리 유·무상 ODA 수단을 모두 확보한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 융합 ODA를 추진하여 한국형 ODA 정체성 확립
 - (발굴) 예산실 마련 ODA 융합프로그램 요건을 주관기관 (외교부, 기재부) 및 국조실과 사전 공유 → 프로그램 적극 발굴

< ODA 융합프로그램 요건(예산실) >

□ 기본요건 : ①~② 모두 충족

- 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 요구, ② 구체적 융합 추진 내용 존재

□ 우수요건 : ①~③ 중 두 개 이상 충족

- ① (전략적 방향성) 수원국 수요를 고려하여 전략적 ODA 추진
 - 해당 융합프로그램이 중점협력국가 국별협력전략(CPS)의 중점분야별 성과 목표 달성을 기여하는가?

- ② (개발 효과성)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 구체화로 실질적 협업을 유도
 - 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③ (사전 공동기획)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부처간 연계 활성화
 - 신규 융합사업을 부처 공동으로 기획하였는가?

- (선정) 중점협력국(27개) 중 우선순위, 중점협력국별 CPS* 내 분야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융합프로그램 선정

*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27개 중점협력국가별로 교육, 보건, 농림 등 중점협력분야를 설정하여 수립한 지원 전략

- (편성) 발굴된 프로그램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25년도 예산안 편성
 - (환류) '18~'22년 추진한 융합사업의 경우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점검하여 우수사업 집중 지원
- ② (선택과 집중) 최근 글로벌 개발협력 트렌드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고려하여 기후대응·디지털·보건 분야 중점 지원
- (경과) '21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건·기후대응·디지털 분야 지원의 정의를 확정하고 '22년부터 예산 편성 시 이를 활용
 - (분야)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에 보다 집중
- * '24년 예산(억원) : (기후대응) 11,516(+90%), (디지털) 9,261(+47%), (보건) 4,820(+5.3%)
- (국가) 부처 간 합의가 완료된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사업을 우대하고 경협관계가 높은 아시아·아프리카 투자 확대
 - (유형)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감안, 유·무상 비율 4:6을 유지하되, 일회성 연수사업 등 성과가 낮은 사업 구조조정
- ③ (국의 기여) ODA를 대외경제·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우리나라 모두 Win-Win 관계를 구축하도록 예산 반영
- 다자기구 분담금 기여시, 투표권 확보, 우리 기업·인력 진출 등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영향력 확보 추진
 - 정상순방 등 주요 행사 계기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ODA가 활용되도록 사전 사업발굴 및 부처간 조정 역할 수행
 - IPEF*, 한국판 인태전략 등 주요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와 ODA가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고려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 ODA 및 보건·기후대응·디지털 ODA 관련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보건·기후대응·디지털 ODA 사업 발굴 및 분류 	'24.3~4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처 대상 ODA 예비수요를 전수조사하여 공유 ○ '24년 융합예산 요구서 접수 ○ 보건·기후대응·디지털 ODA 전략적 투자방안 마련 ○ 융합예산 프로그램별 설명서 검토, 부처간 협업의 시너지가 있는 융합 프로그램 선별 	'24.4~5월 '24.5월 '24.5~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수원국별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 검토 → 융합과제 선정 ○ '24년 ODA 융합예산 편성 ○ 기존에 추진한 융합사업의 경우 추진경과 등을 점검하여 우수사업 선별 및 집중 지원 추진 ○ '24년 보건·기후대응·디지털 ODA 예산 편성 	'24.6~7월 '24.7~8월 '24.7~8월 '24.7~8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ODA 융합예산(안) 국회 대응 ○ 차년도 보건·기후대응·디지털 ODA 투자방안 마련 	'24.10~12월 '24.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우리나라 ODA, 공공외교 사업의 대상국가 국민,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수행중 또는 수행 예정인 관계기관
- (이해관계집단) 외교부, 공공외교 사업을 수행중인 관계부처 및 기관, ODA 수행 또는 국제기구분담금 납부중인 관계기관

기대효과

- 보건·기후대응·디지털 분야 집중투자를 통해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선진공여국 위상 정립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
- ODA 분절화 해소 및 효과성 제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수원국 만족도 제고 및 우리나라 국익 달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24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기후대응·보건·디지털 ODA 투자비율(%)	-	30.2	34	40	보건·기후대응·디지털 분야('22년 신규 지표) '23년 실적(목표 31%) , '24년 ODA 예산 확대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예산편성 규모 '25년 예산 정부안
ODA 융합 프로그램 신규 발굴 개수	46개	57개	68개	78개	최근 실적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3개년 평균(46→57개) 증가율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60개) 대비 약 30% 수준의 목표치 설정	융합 프로그램 건수 집계 '25년 예산 정부안

③ 국방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Ⅲ-5-③)

□ 추진배경

- 北 핵 위협 대비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보장하는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능력 및 태세 구축 필요
-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병의 복무 만족도 제고 필요
 - (국정과제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선택형급식체계로 개선, 생활실 2~4인실 개선 등
 - (국정과제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병사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 실현」 ('25, 병장기준)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한 무기체계 우선순위 조정, 스마트 국방운영 등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 핵·미사일 및 다양화, 병역자원 감소('22~'36년간 23만명 → '37년 이후 18만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첨단전력 증강) 北 핵·미사일 및 다양화되는 위협의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첨단무기체계 개발* 지원
 - * 드론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환, 우주사이버 등 미래 전장환경 주도 원천 핵심기술 확보
- (스마트 국방혁신)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장병 훈련 과학화, 스마트 부대·공장 구축 확대 및 군수·의료 등 국방운영 품질 제고
 - * VR/AR 기반 가상훈련체계, 스마트 인재·장비·부대 관리, 사이버 위협 탐지체계 고도화 등
- (장병 복무여건 개선) 병봉급 단계적 인상, 장병의 의·식·주* 개선 및 간부숙소(1인1실), 관사(18~25평→32평형) 등 보급 확대
 - * (衣) 고품질 피복 (食) 선택형 급식 (住) 병영생활관(7~8→2~4인실)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5년도 국방분야 예산 중점투자 방향 마련(편성지침 수립)	'24. 1~3월	
	◦ '24~'28 국방분야 예산 중기사업계획 수립	'24. 2~3월	
	◦ '튼튼한 안보' 아젠타TF 발족 및 운영	'24. 2~3월	
2/4분기	◦ 한국형 3축 체계 연관사업 규모 관계부처 협의·검토	'24. 4~6월	
	◦ 전력지원 분야 국정과제 연관사업 규모 관계부처 협의·검토	'24. 4~6월	
	◦ 국방분야 예산 정부안 편성	'24. 6~8월	
3/4분기	◦ 국방분야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24.8월	
	◦ 국방분야 예산 국회 결산 대응	'24. 8~10월	
4/4분기	◦ 국방분야 예산 국회 심사 대응 및 확정	'24. 9~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 국군장병과의 직접 소통 확대를 통한 군 복무여건 개선 추진
- 국방사업 관련 기관(국방부·방위사업청·각 군(육·해·공·해병대)·국방연구기관 등)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방분야 투자 효율성 제고
- 방산수출 진흥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북 핵·미사일 위협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 획기적 보강, AI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통하여 저인력·고효율의 국방체계로 개선
- 훈련의 과학화, 병통급 현실화, 장병 의식주 개선 등을 통해 군 전투력 제고 및 복무여건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방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III-4-일반재정0)			
국방비		570,143	594,244
① 전력운영비(국방부)	일반회계	400,974	417,712
②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	일반회계	169,169	176,5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확대 (억원)	58,372	58,754	60,200	63,210	정부 총지출 변동성을 감안,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2.5%) 대비 +2.5%p 높은 +5%로 설정	'25년 예산 정부안 제출기준	'25년 예산안 (예산편성 순기상 차년도 예산)
군 복무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률 (%)	-	90	94.4	95	병인건비, 병 내일준비지원, 급식, 피복 등 연도별 국정과제 목표 예산 반영액	'25년 예산안 반영액 ÷ 목표액	'25년 예산안 (7개 세부사업)

기 본 방 향

-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재정전망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혁신 추진
- ◇ 경기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민간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예타 내실화 및 엄격한 사업평가, 환류를 통해 재정효율화 도모
- ◇ 안정적 국고채 발행 등 국고자금 적기 조달·배정을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을 적극지원하고, 국채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도모
- ◇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의 자산가치를 제고하고, 공익적 개발·활용을 통해 국민 편의 및 경제 활력 증진
- ◇ 조달·계약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공공조달 내실화 및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 ◇ 복권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복권기금사업의 사회안전망 지원을 통해 재정운용의 공익적 가치 제고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1	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재정 인프라 혁신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① 중·장기적 재정총량 관리	'24~'28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 통계정비 및 신규지표 도입 검토 간수
	②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마련
	③ 재정지속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재정준칙관련 국회 설명설득 횟수 재정교육 이수자 수
2. 재정운용 관리 강화		
	① 재정집행 관리강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상반기 재정집행률(%) 민자사업 집행률(%)
	②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실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예타제도 운영 개선
	③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부담금 관리	연장평가대상사업 중 사업 장비폐기 감축 통폐합 간수 비율(%)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 정비건수
3. 국고운용 효율화		
	① 효율적 자금관리 및 국채시장 선진화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 평균잔고(억원)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조원)
	②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	기재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 활용전환 건수(필지) 일반회계 배당수입 예산달성을(%)
	③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	조달특례 성과관리방안 마련 국가계약제도 개선 이행건수
4. 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① 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및 홍보 강화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복권기금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② 복권사업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복권수익금 증가율 복권의 사행성 평가

(1) 주요내용

- 재정총량 관리·지출 간 연계·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인프라 혁신
 -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을 분석하고 5년 단위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수립
 - 조세지출-재정지출 ①통합적 재원관리 기반 조성 및 ②지출 유사증복 정비, ③지출 간 평가·환류 강화 추진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및 재정제도 교육 강화
- 효율적 국고 운용을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 안정적 국고채 발행 등 국고금의 적기 조달·배정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
 -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 증진
 - 공공조달의 내실화 및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원 및 저출산 등 사회문제 완화

(2)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 치 '28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재정준칙 준수	-	-	-	-	-	재정 준칙 관리 기준 준수	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 준수	재정준칙 관리기준 : 관리재정수지 ≥ △3%	'24~'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3) 기타

-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여·야 제기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 법제화 여부는 논의 중
 - 22대 국회에서도 재정건전성·지속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

(1) 주요 내용

- ① 중·장기적 재정관리를 위한 '중기재정전략('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국가채무비율 엄격히 관리
- ② 개별 제도로 관리·운영 중인 재정지출·조세지출의 효율적 통합관리 기반 조성 및 연계 강화 추진
- ③ 재정 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미래세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재정 안전장치 마련

*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채무비율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 이내

- 또한, 건전재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재정교육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만족도조사
관리과제	① 중·장기적 재정총량 관리	'24~'28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 통계정비 및 신규지표 도입 검토 건수
	②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마련 재정준칙관련 국회 설명·설득 횟수
	③ 재정지속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재정교육 이수자 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1 '22 '23 '24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재정운용계획 만족도 조사	78.4 78.6 77.4	78.6 최근 3개년 최고 점수 수준인 78.6점	조세연 주관 공무원 및 재정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국가재정운용계획 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반발 우려

⇒ 재정혁신 방안 수립 단계부터 일반 국민,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

(4) 기타: 해당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중·장기적 재정총량 관리(IV-1-①)

□ 추진배경

-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기 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기계획) 전문가·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등을 포함한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국채 차입·상환 실적 등 국가채무 현황, 목표수준 및 관리방안 제시
- (재정건전성 분석·대응) 재정건전성 제고 및 재정정책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재정통계 체계개편 등을 검토할 필요
 - 통합·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현행 재정지표의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고 신규 지표 개발 및 분석방법론 도입 추진
 - 월간 재정동향 등을 통해 수지, 채무 등 주요 재정통계를 산출·분석하여 대외 공개 및 소통노력 지속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1~12월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구성·운영	1~12월	
	• 「월간 재정동향」 발간	1~3월	
2/4분기	• 「한국 통합재정수지」 발간	4월	
	• 「월간 재정동향」 발간	4~6월	
	• 재정지표 보완사항 및 신규 지표·분석방법론 검토	4~6월	
	• 재정전략회의 개최	6월	
3/4분기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작성 및 국회 기재위 제출	5~8월	
	• 「월간 재정동향」 발간	7~9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작성	9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9월	
4/4분기	• 「월간 재정동향」 발간	10~12월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발표	12월	
	• 신규 지표 도입 등 재정지표 개선 방안 마련	12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실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운영을 통해 아젠다별 주요 투자방향 및 제도개선안 마련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킥오프 회의	3월
회의	아젠다별 작업 착수 회의	4월
회의	아젠다별 중간 점검회의	4~5월
중간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중간보고	5월
최종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 최종보고	11월

□ 기대효과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
- 상시적인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가능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2711)	일반회계	9.32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300)	일반회계	9.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3	'24			
'24~'28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5.7	평균치 하회 (과거 10년 평균* 7.5%)	건전재정기조 견지를 위해 통상적인 국가채무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의 채무 증가율 설정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
통계정비 및 신규지표 도입 검토 건수	신규	2건	기준지표 개선 및 신규지표 도입 등 2건	건수	내부보고자료

* [('14~'18계획 연평균 증가율) + ('15~'19계획 연평균 증가율) + ... + ('23~'27계획 연평균 증가율)] / 10

②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IV-1-②)

□ 추진배경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운영체계·지출방식 차이 등으로 별개 제도로 관리·운영 중

	분류체계	지출방식
재정지출	12대 분야	단년도 예산안
조세지출	16대 분야	법령 상 특례규정

- 조세지출은 정부지출(재정+조세)의 약 10% 수준이며, 총량은 크지 않으나 최근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지출의 2배 수준
 - * 조세지출(조원) : ('20) 52.9 ('21) 57 ('22) 63.5 ('23^e) 69.5 ('24^e) 77.1
재정지출(조원) : ('20) 549.9 ('21) 558 ('22) 604.4 ('23) 638.7 ('24) 656.6
연평균 증가율(%, '20~'24) : 조세지출 10.1% > 재정지출 4.5%
- 조세-재정지출의 체계적인 연계 관리를 통해 중복지출을 방지하는 등 재정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반조성) 재정지출·조세지출 분류체계 연계 강화를 위해 예산실·세제실 등 협의체 구성
- (지출효율화) 신규지출에 대한 유사·중복 사전검토 기준 마련 및 현행 재정-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점검
- (평가·환류) 재정사업·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주요내용 수시 공유 및 정책수단 간 효과성 비교·분석을 심층평가 항목에 포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관련 실·국 간 쟁점사항 협의(재정국-세제실-예산실)	1~3월	
	조세지출기본계획·예산편성지침에 유사·중복 지출 사전 검토 규정	3월	
2/4분기	조세지출의 12대 분야 개편안 마련	4~6월	
	재정-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사업군 선정·정비	4~12월	
3/4분기	d-Brain 내 조세지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7~9월	
	재정사업 담당자 대상 조세지출 재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7~12월	
4/4분기	d-Brain 내 조세지출 데이터 이관·입력	9~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조세-재정지출 연계 관련 실국(세제실·예산실·관리국·재정국) 간 협조·애로사항 교환을 위한 협의체 회의 정기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실무 킥오프 회의	1월
회의	제1차 조세-재정지출 연계 방안 협의체 회의	3월
회의	조세-재정지출 연계방안 후속점검 회의(제1차)	6월
회의	조세-재정지출 연계방안 후속점검 회의(제2차)	9월
간담회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하반기

□ 기대효과

- 유사·중복 지출을 정비하고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마련	-	-	방안 마련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내부보고자료

③ 재정지속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IV-1-③)

□ 추진배경

- (재정준칙)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
- (재정교육) 재정업무 담당자(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 성과평가 등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해외재정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확장재정을 계기로, 재정수요 대응과 지속가능성 간 균형에 관한 지속 검토 필요성 대두
 - ☞ 역동경제, 저출산, 안보, 기후변화 등 유사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해외 유사사례 및 주요국 재정운용 기조·동향을 파악·참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정준칙) 재정준칙 도입안 발표('22년) 이후 지속적인 설득 노력으로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 계류 중
 - 21대 국회 임기 만료, 22대 국회 총선 일정 등 입법여건을 감안하여 법제화 추진 노력 지속
- (재정교육) 건전재정 등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업무 역량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집행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교육 강화
 - 이론-실무교육 연계, 실무사례중심 과목 확대, 실무 경력자 교수진 배치 등 현장감 있는 실무 중심 교육 강화로 재정교육의 실효성 확보
 - 공무원, 공공기관 외에도 교육수요가 있는 기관 교육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해외재정 분석) 주요국 재정정책의 동향 및 변화, 국제기구·해외언론·싱크탱크 등의 최신 재정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해외재정 모니터링 주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英/獨/佛/日/中 등 각국 재정당국 웹사이트 • 대사관 주재 재경관 외교전문(대외경제국 수신 공유) • 美 CBO·싱크탱크(피터슨/브루킹스/CSIS) • 해외 언론(Financial Times/The Economist/Wall Street Journal) 등 • 국제기구(IMF/OECD) 등
------------------------	---

- 해외 주요 재정현안* 발생시 관련 정보 및 시사점 등을 신속하게 파악·분석·공유하여 우리나라 재정정책 운용에 적극 참고

* (상시) 주요국(美/英/佛/獨/日 등) 정부예산(안) 발표 및 확정예산(의회 통과)
(수시) 기타 정책에 참고할 만한 재정이슈(예: 美 부채한도 협상, 英 신용등급 강등 위기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재정교육 홈페이지 운영	1~12월	
1/4분기	• 입법여건을 감안한 재정준칙 법안 법제화 추진전략 검토	3월	
1/4분기	• 2024년 재정교육 교육계획 수립	3~4월	
2/4분기	•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논의	4~6월	
	• 재정교육 실시(집합, 사이버 등)	4~11월	
3/4분기	•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논의	7~9월	
	• 나라살림멘토단 운영(실무경력자 활용 재정교육)	5~10월	
4/4분기	•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논의	10~12월	
	• 재정교육 성과조사 및 분석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재정준칙) 연중 여·야 의원실 방문설명 및 의견수렴 지속
- (재정교육) 강사·교육전문가 등 전문가 자문 및 교육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전문가 대상 '24년 재정교육 운영 관련 의견수렴	상반기
만족도 조사	'24년 재정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1~12월

- (해외재정 분석) 해외재정 관련 주요 정보를 파악·분석·공유할 수 있는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및 인력·업무체계 구축
 - * 한국재정정보원(재정정보분석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해외 재경관 등
 - 필요시 동 업무를 각 기관의 자체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상설 운영하거나, 별도 정책연구과제 추진 등도 추후 검토

□ 기대효과

- (재정준칙)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외신인도 향상 기여 등 미래세대 부담 완화
- (재정교육)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재정교육을 통해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총족 및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강화
- (해외재정 분석) 주요국의 재정운용 기조·동향을 적시 파악·분석하여 우리나라 재정정책 운용에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3-일반재정①)		
① 중장기재정전략수립(2712)		일반회계
■ 재정교육(303)		37.38 7.4
		24.41 6.9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재정준칙관련 국회 설명·설득 횟수	-	25*	75	75	총선결과 확정 및 국회 개원 이후 본격적인 설명작업이 가능하여 설명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 수준으로 목표 유지	의원실 등 방문설명 횟수	자체 집계자료
재정교육 이수자수	4,774	5,173	5,145	5,282	과거 실적 및 최근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최근 3개년('21~'23) 평균 대비 5% 상향된 목표치 설정	재정교육 최종 이수자 수의 합	자체 수집

* '22년의 경우 9.13일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8월 이후 본격적인 설명 개시

(1) 주요내용

□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민간투자사업 신속추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① 민생경제 회복,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24년 관리대상사업 예산의 65.0%(중앙재정 253조원 중 164조원)를 상반기 신속집행 관리

② 민자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자사업 신속추진·집행관리·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 제안부담 완화, 수요예측 재조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및 집행관리를 통해 민자사업 신속추진 지원 및 발굴규모 확대(15.7조원) 추진

□ 예타제도 개편과 기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의 지속성 유지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계사업 및 R&D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예타 비대상·면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② 지원 필요성 등 보조사업의 존속여부를 평가 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담금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재정운용의 효율성 만족도(%)	77.2	77.5	77.6	78.0	78.4	79.9	지난 5개년('19~'23년) 실적치 연평균 증가율은 0.39%이고, 향후 5개년('24~'28년) 실적치의 연평균 증가율도 유사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리커트 5점 척도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조사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집행기관(관계부처 등)에서의 집행 애로요인 발생 시 재정당국의 집행관리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기관간 갈등 우려
 - 재정집행점검회의(매월), 집행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신속하게 해소하고, 기관간 협의 강화
- 민자사업 추진시 소요 시간·비용 부담이 과다하여 사업 추진 지연 우려
 -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 단축, 제안부담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장기간의 조사 과정에서 타당성 미확보 사업에 대해 사업 주체인 중앙관서·지자체 등의 반발 가능성
 - 예타 제도개선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정 절감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불식
- 보조사업·부담금 평가시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반발 가능성
 - 부처 사업 담당자 및 평가단 대상으로 수시 간담회,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정책 수용도·예측 가능성 제고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재정집행 관리강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IV-2-①)

□ 추진배경

- '24년은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나, 설비·건설 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내수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
 - 또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은 회복세 본격화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
 - 부동산 경기 하강, 건설수주·착공 부진 등 '24년에도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 ('22.4/4)△17.4 ('23.1/4)△11.1 (2/4)△31.5 (3/4)△44.7
-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차질없이 추진될 필요
 - GTX 등 광역교통망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출퇴근 교통 정체, 교통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등 민생 어려움 해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생경제 회복,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24년 관리대상사업 예산의 65.0%(중앙재정 253조원 중 164조원)를 상반기 신속집행
- 재정(중앙+지방+지방교육) 및 공공기관·민간부문 투자를 모두 합친 상반기 집행 목표는 총 38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 2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경제여건 등 변동시 집행계획 보완

-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약 110조원을 집중 관리
 - 약자복지 약 70조원, 일자리 14.9조원, SOC 25.1조원 규모의 중점 관리사업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애로 적극 해소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효과와 투명성 제고
- 불용 전망조사, 실무회의,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하반기 불용 최소화 추진
-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투자·집행관리 강화
 - 신유형 시설 발굴, 제안 부담완화 등을 통해 '24년중 15.7조원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추진
 - 대규모 착공 예정 사업에 대한 추진단계별 점검 및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등을 활용하여 착공 관리 및 적기 착공 지원
 - 경기제고 효과·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집행실적 등을 집중 관리
- 민자사업 추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수요예측 재조사 및 이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 기간을 6개월 가량 단축(^{현행}270+270 → ^{개선}150일+210일)
 - 민자사업 제안에 과도한 시간·비용이 투입되어 제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안) 마련
 -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량(개량운영형)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제안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 및 사업유형(모델) 제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 중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집행현황 관리	수시	
	민간투자사업(BTO 및 BTL) 사업 검토	수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수시	
	민간사업 투자집행 실적 점검	수시	
1/4분기	'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수립	1월	
	재정집행 점검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한 재정집행 관리	1~3월	
	약자복지, 일자리, SOC 등 중점 관리대상 집행 점검	1~3월	
	'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관련 의견수렴	1~2월	
	'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수립	2월	
2/4분기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한 재정집행 관리, 상반기 65.0% 집행	4~6월	
	약자복지, 일자리, SOC 등 중점 관리대상 집행 점검	4~6월	
	'24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국회 제출	5월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5월	
	민자제도 부처·지자체 대상 교육 및 설명회	6월	
3/4분기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한 재정집행 관리	7~9월	
	약자복지, 일자리, SOC 등 중점 관리대상 집행 점검	7~9월	
	'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고	7월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심사	8월	
	'25년 BTL 한도액 요구서 국회 제출	9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	10월	
4/4분기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한 재정집행 관리	10~12월	
	약자복지, 일자리, SOC 등 중점 관리대상 집행 점검	10~12월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의결	10~12월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재정포럼 개최	12월	
	민자제도 30주년 기념행사	12월	
	민자제도 부처·지자체 대상 교육 및 설명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재정 신속집행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어려움 경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효과는 전 국민에게 귀속
-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부처 및 지자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투자자(건설사) 및 재무적투자자(은행, 펀드 등), 민자사업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등

□ 기대효과

-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 경기대응, 하반기 불용 최소화 등으로 경기 활성화 뒷받침
 -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을 경감하고, 내수 및 고용 회복 지원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
- 민자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가회계운영			
국가회계운영(2631)	일반회계	12	12
■ 국가회계제도운영(301)		12	12
재정집행관리강화			
재정집행관리(2643)	일반회계	3.2	2.8
■ 재정집행관리(300)		3.2	2.8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2645)	일반회계	3.7	3.4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300)		3.7	3.4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2032)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59.1	145.6
■ 인프라보증대위변제(680)		153.9	140.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 상반기 재정집행률 (%)	68.2	64.4	65.7	65.0	'24년 경기전망,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집행목표 65.0% 설정 * 과거 집행목표(%) : ('19) 61.0 ('20) 62.0 ('21) 63.0 ('22) 63.0 ('23) 65.0	(관리대상사업 상반기 집행액 /예산액)×100	정부예산회계시스템 (dBrain)
■ 민자사업 집행률(%)	120.9	97.0%	100.1%	97%	• 전년도 목표치(97%)와 동일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	투자집행 금액/ 투자집행 계획	주무관청 협의자료 등 민자사업 추진현황

②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내실화(IV-2-②)

□ 추진배경

- 객관·투명·공정한 예타 제도^{*}의 운영을 통해 재정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
 -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SOC.R&D.정보화.사회복지 등)을 추진 시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
단, R&D사업에 대한 예타는 '18.4월부터 과기부에 위탁 수행 중(동법 제38조의3)
- 예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그동안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예타 제도를 개선^{*} 해왔지만, 현장 건의사항 및 제도정비 수요 등 지속 제기
 - * 예타 제도 개선안 확정('22.9) 및 지침개정('22.12), 시스템 개편(~'23.12) 등

⇒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예타 제도 개선안 발굴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예타 제도개편) 예타제도 세부 운영과정상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신속성·효율성·유연성 제고
 -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연계된 사업의 평가 체계 개편^{*} 및 예타 대상 기준 금액 상향조정^{**} 등 제도 개편안 마련
 - * 예타운용지침 및 수행총괄지침 개정 ** 국가재정법 개정(현재 기재위 계류중)
 - R&D 위탁운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R&D 예타 제도 개편 추진
-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객관·투명·공정한 운영을 통해 재정누수 차단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 '23년 예타 14건, 타재 9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31건 완료
 - ** 현재 예타 54건, 타재 21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32건 진행중('24.2월말 기준)
 - 연 4회 예타 대상·면제 사업 선정, 필요시 사적을 실시하고, 예타 비대상 사업도 타재·사재 등을 통해 사업 관리 강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가 R&D 예타 위탁운영결과 평가 중간점검	3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3월	
2/4분기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4월	
	국가 R&D 예타 위탁운영결과 평가 최종점검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6월	
3/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중간점검	9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9월	
4/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향 확정 및 지침 개정	12월	
	국가 R&D 예타 제도개선 확정	12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국민
- (이해관계집단)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지자체 등

기대효과

- 대규모 집단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평가제도 개선으로 예타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제한된 기간과 인력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기대
- R&D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R&D 재원 운용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과학기술 선도와 산업성장 기반 구축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3	'24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6)	일반회계	82.5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301)		79.7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402)		2.8
		88.4
		85.7
		2.7

* 「국가재정법」 개정('18.1.16.)으로 R&D 예타(사업계획적정성검토 포함)는 과기부로 이관되었으며, R&D사업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예산만 포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17.2	17.5	16.3	17.1 * 최근 3년 평균 조사기간(17.1 개월)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신규 지표) 예타 조사 선정 이후 평균 조사기간(개월)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일 기준 평균조사 소요기간 통계자료
② 예타제도 운영 개선	-	-	-	지침 개정	• 예타제도 제도개선 등을 반영한 지침 정비 • R&D 위탁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한 R&D 예타 제도 개선	지침 개정 및 R&D 예타 개선방안(안) 마련 여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의결안건, 보도자료, 내부보고 자료 등

③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부담금 관리(IV-2-③)

□ 추진배경

-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 중요성이 부각

* 국고보조금 규모(조원, 본예산 기준) : ('20) 86.8 ('21) 97.9 ('22) 102.3 ('23) 102.3 ('24) 109.1

- 관행적으로 운용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및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추구

- 최근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국민·기업의 부담완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노력 필요

* 부담금 징수규모(조원) : ('18) 21.0 ('19) 20.4 ('20) 20.2 ('21) 21.4 ('22) 22.4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장평가) 사업타당성, 재정지원 필요성 등 보조사업의 존속 여부를 평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폐지 등 구조조정 추진

* 평가대상 : 3년이 지난 보조사업 중 의무지출, 예타 대상 등은 제외

- (적격성심사) 예산 요구 전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규 보조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사전 방지

* 추진성과(실시/적격) : ('19) 90건/46건(51.1%), ('20) 90건/41건(45.6%), ('21) 59건/16건(27.1%), ('22) 69건/23건(33.3%), ('23) 102건/24건(23.5%)

- (부담금평가) 존치 타당성, 부과요율의 적정성, 부과실태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 '09년 이전까지는 매 3년마다 전체 부담금을 평가, '10년 이후 매년 1/3씩 평가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조사업 연장평가 서면심사	'24. 2월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면심사	'24. 3월	
2/4분기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수립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24. 4월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1차)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24. 5월 '24. 5월	
3/4분기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2차)	'24. 7월	
	부담금운용평가 실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24. 7월 '24. 9월	
4/4분기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 수립	'24.12월	
	부담금운용평가 심사 및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2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보조사업평가) 부처 보조사업 담당자·평가단 대상으로 간담회 및 의견수렴, 전문가들과 정기 및 연중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 (부담금평가) 소관 부처의 부담금 부과요율·대상 조정, 민간 전문가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보조사업평가 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 쟁점 관련 사항 수시 논의 등	'24.1월~5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 경감, 평가 등 심의·보고	'24.3월~12월
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결과 의결, 평가단 구성 및 평가계획 확정 등	'24.5월~12월
부담금평가 회의	부담금운용평가 제도 설명 및 평가방향 논의, 평가단 의견 수렴	'24.8월, 12월

□ 기대효과

- 관행적인 보조사업의 지속과 무분별한 신규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여 재정누수 최소화
- 불필요한 부담금 폐지·통합, 부과요율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담금 운영 효율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평가(2644)	일반회계	23.99
■ 재정사업평가(300)		23.99
		32.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연장평기대상사업 중 사업정비(폐지, 감축 통폐합) 건수 비율(%)	43.2	52.2	63.3	52.9	최근 3개년('21~'23년) 정비실적 평균치로 설정	(폐지,감축,통폐합 사업 건수/평가 대상 사업 건수) x100
②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 정비건수	11	12	16	18	전년도 실적에 최근 3개년('21~'23년) 정비실적 연평균 증가율(13.3%)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국민부담 경감 부담금 정비건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

(1) 주요 내용

- 효율적 국고금 조달·배정을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 뒷받침
 - 한정된 재원을 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에 집중 배정하여 자금집행 적기 지원
 - 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여유 자금을 적극 운용
-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요 저변 확대 및 국채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외인 투자자 확대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신규 국채 상품 개발 등 국채시장 발전 도모
-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유휴·저활용 재산 매각·활용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 국유재산 총조사*(행정재산 조사)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유휴·저활용 재산 매각 활성화 및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토지 약 201만필지(1.8만km²), 건물 3.7만동 조사(23.1~11월)→용도폐지 등 후속조치 추진(24년)
 - 국유증권인 정부출자증권 및 물납증권에 대한 가치제고 및 관리 개선으로 국고수입 증대 기반 마련
- 공공조달의 내실화 및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원 및 저출산 등 사회문제 완화
 - 조달사업법령·각종지침 정비 등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기술경쟁 강화, 기업부담 완화, 안전 강화 등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차질없이 추진
 - * 국정과제29(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실천과제6(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반영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고운용 효율화	• 국고 제도개선 관련 정책고객 만족도(점)
관리과제	① 효율적 자금관리 및 국채시장 선진화	•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 평균잔고(억원) •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조원)
	②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	• 기재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 활용전환 건수(필지) • 일반회계 배당수입 예산달성을(%)
	③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	• 조달특례 성과관리방안 마련 • 국가계약제도 개선 이행건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국고 제도개선 관련 정책고객 만족도(점)	-	-	85.2 (신설)	87 '23년도 신설 결과 목표점수(75점)에 비해 높은 점수가 도출된 바, 추후 평가 분야를 확장하되 현재 수준 이상의 실적을 설정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국고채 발행량의 안정적 소화를 위한 전략적 발행관리 필요성 증대
 -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개인투자용 국채 및 30년 국채선물 등 신규 상품의 시장 안착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총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既 사용승인 받은 부처와의 갈등 우려
 - 국유재산 관계기관 협의회(24.2.20일 킥오프, 국유재산심의관 주재)를 통해 토론 및 원활한 조정 추진

- 공공조달 및 계약제도에 대한 혁신·안전 등 다양한 가치 실현 요구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과의 갈등 가능성
 -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업계 등 의견을 조율하여 공공계약·조달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추진
- * 공공조달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범정부 의사결정기구(위원장: 부총리)

(4) 기타 :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효율적 자금관리 및 국채시장 선진화(IV-3-①)

□ 추진배경

- 관리대상사업(상반기 65%), 총지출*(상반기 60%) 등 신속집행 확대에 따라 자금소요가 증가
 - * 총지출(기금포함) 상반기 집행실적(%) : ('19)57.1 ('20)56.6 ('21)56.0 ('22)57.8 ('23)65.0
 - 대내외 변수 등 감안 시,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상존
-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면서도, 일시차입 최소화 및 여유자금 적극 운용을 통해 국고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안정적 국고채 발행을 통해 적기에 재정자금을 조달하고, 국채 수요저변 확대와 국채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적기 자금조달·배정을 통한 효율적 지원배분 및 자금관리 효율성 강화

- (재정집행 지원)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에 자금을 적기 배정하여 원활한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
 - 자금여건 제약을 감안하여 경기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부 소비 투자 관련 대상사업에 재원 우선 배정, 그 외 사업은 적정수준 배정
- (효율적 국고금 운용) 운용비용은 줄이고 운용수익은 늘리는 최적의 자금조달·운용 방안 모색
 - 공자기금 일반회계 예탁, 재정증권, 한은 일시차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단기 자금부족에 대응하고, 차입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 부처별·5일 단위별 지출 스케줄 관리를 통해 통합계정 유 휴자금을 최소화하고, 단기 여유자금은 금융시장에서 적극 운용

- (세입 모니터링) 세수여건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세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건 악화시 자금배정 조정 및 추가재원 확보
 - 세제실·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일 세입 동향 및 특이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2) 안정적 국고채 발행 및 시장관리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 뒷받침

- (전략적 국채 발행)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 확대된 국고채 발행량^{*}을 차질없이 소화

* 국고채 발행량(조원): ('19) 101.7 ('20) 174.5 ('21) 180.5 ('22) 168.6 ('23) 165.7 ('24^e) 158.4

-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연물별 발행물량을 적정 배분^{*}하고, 바이백·교환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적기 공급
 - * 연초에 분기별·연물별 발행계획을 제시하여 국고채 발행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수요기반 강화)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30년 국채선물 상장 등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 추진
 - 개인의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 만기보유시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4.上)
 - 초장기물 국채의 미래 가격변동 위험 관리 수단 제공 등을 위해 30년 국채선물 상장('24.2)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지속 추진

*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FTSE Russell社에서 관리하는 세계최대 채권지수로 23개국 편입(추종자금 2.5조달러 추정)

- (안정적 시장관리)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백 등 적기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국채시장 변동성 최소화

* 국채연구자문단 운영, 업권별 간담회(PD, 장기투자자, 외국계투자자 등) 개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월별 국고채 발행계획 수립 및 PD · 외국계투자자 간담회 개최	매월	
	'23년 하반기 국고 여유자금 윤용평가	1월	
	국고금 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1~3월	
	30년 국채선물 신규 상장	2월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 실시	2월	
2/4분기	월별 국고채 발행계획 수립 및 PD · 외국계투자자 간담회 개최	매월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 실시	4~6월	
	국고금 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4~6월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출시	6월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통	6월	
3/4분기	월별 국고채 발행계획 수립 및 PD · 외국계투자자 간담회 개최	매월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 실시	7~9월	
	국고금 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7~9월	
4/4분기	월별 국고채 발행계획 수립 및 PD · 외국계투자자 간담회 개최	매월	
	제11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12월	
	'25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	12월	
	국고금 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10~12월	
	연말 세수여건 점검 및 '24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추계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고채전문딜러 간담회 실시(매월)
- 금융기관 등 국고채 투자자 협의회 개최(매월)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위한 투자자 대상 IR 실시(수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국고채전문딜러 간담회 실시	매월
회의	금융기관 등 국고채 투자자 협의회 개최	매월
현장방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위한 투자자 대상 IR 실시	미정(수시)

□ 기대효과

- 민생과 직결된 주요사업에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국채시장 성장 도모
- 국고금 여유 자금의 적극 운용으로 일시차입 이자비용(일반회계)을 효과적으로 절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고업무관리지원(II-2-일반재정①)		
① 국고업무관리지원(2233)	일반회계	5.0
■ 국채시장관리 및 국제화(304)		5.0
국고업무관리지원(II-2-일반재정①)		
① 국고업무관리지원(2233)	일반회계	11.8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307)		1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유휴자금 최소화 -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 평균잔고(억원)	3,832 3,147 3,110	3,000	유휴자금 최소화를 위해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 평균잔고 비중을 전년 대비 낮게 관리 목표* * ('23 실적) 3,110억원 → ('24 목표) 3,000억원	통합계정 일일 평균잔고	D-brain 이용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조원)	164.1 193.0 219.5	237.2	최근 10년 평균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16.1조원)의 110% 인 +17.7조원 추가 유입을 목표로 보유잔액 237.2조원(역대 최고치) 설정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금융감독원 통계

②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IV-3-②)

□ 추진배경

-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한 유휴재산 발굴 등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국민 편의 극대화 및 경제활력 제고 지원*
* (국정과제 5-3)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제고하고, 유휴 국유재산은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여 활용가치 증대
- 국유증권인 정부출자증권 및 물납증권에 대한 가치 제고 및 관리 개선으로 국고수입 증대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

- (민간참여개발 활성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 개발대상지(행정재산 포함) 확대, 개발방식 다양화(장기토지임대부 방식 등), 출자방식 유연화 (REF, REITs, 공공부문 출자 확대) 등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 기재위 법안소위 논의 중
** 例) 위탁개발(캠코·LH)로 조성된 부지 일부를 민간참여(장기대부) 방식으로 개발
- (토지개발 추진) '19~'23.1월 개발대상지로 선정한,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사업* 18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대규모 이전·유휴 부지 등 개발 → 창업공간, 공공주택, 국가산단 등 조성
- (국가정책 뒷받침) 토지·건축개발을 적기에 추진하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창업·농업인 지원 추진
 - 신규 토지개발 사업지 발굴, 도심 노후 청·관사를 「청·관사 + 수익시설 +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 추진
 - 유휴·공공청사 리모델링·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 조성, 유휴·저활용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 창업농·스마트팜 사업 등 지원

(2) 체계적 국유재산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

- (무주지 국유화) 수복지역 내 무주지로 장기간 지속되어온 재산 국유화 단계별 추진 및 실경작한 지역민에 매각·대부 실시
 - * 강원 양구군 해안면은 국유화 既 완료('20.8월, 9.6km²), 양구군 이외 7개 수복지역 (약 84km²)도 순차적으로 국유화(~'23년) → 국유화 후 실경작자에게 매각·대부 실시
- (행정재산 관리강화) 각 중앙관서가 개별 관리 중인 행정재산의 관리실태 점검 및 관리 정상화 추진
 - * 청·관사 사용목적 부합여부 점검 → 목적변경 협의, 사용승인 철회, 용도폐지 등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전환, 변상금 부과 조치 등
- (보유재산 가치제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접지를 빨굴하여 비축토지로 매입하고, 국유기금을 활용한 청·관사 신축 연계
- (국유재산특례 관리강화) 특례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유 재산특례 존치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특례 관리를 강화
 - * 개별 특례규정의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21.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 ** ('23) 연구용역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 ('24) 존치 시범평가 → ('25) 제도 시행
- (유휴 국유재산 매각) 국가가 활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은 민간 등에 매각하여 국토의 효율적 사용 및 재정 수입 확보
 - * 민간에 매각한 국유재산은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경제 선순환 효과 창출

(3) 국유증권의 가치제고 및 관리개선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

- (출자) 안정적 배당수입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을 뒷받침 하는 한편, 신규 출자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기업을 적기 지원
 - 중기 배당성향목표(40%)를 기준으로, 기관별 재무여건, 배당여력,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수준의 배당 추진

- 개별법령상 규제(배당성향, 보증배수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관리계획, 상장기업 특성 등 기관별 특이요인은 별도 고려
- 현금출자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출자기업 자금여건을 개선하고, 적기 현물출자로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 확충
- (물납) 물납증권 가치 제고를 위한 물납기업 지원과 동시에 원활한 매각 추진을 통해 국고 수입 증대
- 물납기업 상황에 맞는 매각방식을 통한 신속한 매각 추진으로 물납주식 장기 보유에 따른 국고 손실 방지
- 물납주식 투자설명회 개최 등 집중 마케팅을 통해 투자형 매각(기관투자자 대상 매각) 시장 구축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1월	
	○ '24년 배당성향 산정을 위한 배당기초자료 징구	1월	
	○ '24년 배당성향 협의(정부배당협의체)	2월	
	○ '23년 정부배당 확정(주주총회 또는 결산 승인)	3월	
	○ 용도폐지 등 총조사 후속조치계획 제출(중앙관서→기재부)	3월	
	○ 2024 상반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개최	3월	
	○ '24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추진과제 발굴	계속	
	○ 현금출자예산 집행을 위한 소관부처 협의	계속	
2/4분기	○ 제1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개최	4~5월	
	○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및 특례종합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배포	5월	
	○ '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	5월	
	○ 배당실적 공표 및 국회 보고	5월	
	○ '25년 정부배당수입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징구(1차)	5월	
	○ 행정용도 활용을 위한 비축부동산 매입 결정(1차)	6월	
	○ 국세물납증권 투자설명회 개최	6월	
3/4분기	○ 국유재산 종합계획(관리처분계획, 특례종합계획 포함) 수립	7월	
	○ '25년 정부배당수입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징구(2차)	7월	
	○ 2024 하반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개최	7~8월	
	○ '24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	8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4/4분기	○ '24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	8월	
	○ '25년 정부출자수입(안) 마련	8월	
	○ 증권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8월	
	○ '24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특례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9월	
	○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개최	9~10월	
	○ 직권용도폐지 대상 통보 및 의견 제출	9월	
4/4분기	○ 증권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10월	
	○ 직권용도폐지 국유심 의결	10월	
	○ 행정용도 활용을 위한 비축부동산 매입 결정(2차)	12월	
	○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지침 제정	12월	
	○ 증권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행정재산 관리가 위임된 각 중앙관서, 개발·활용가능 국유자 소재 지자체, 정부출자기업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 추진
 - 이를 위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상·하반기), 국유재산 관계기관 협의회('24.2월 킥오프) 등 지속 개최하여 협의 확대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국유재산 개발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등 국유재산의 정부 정책 기여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 극대화
- 유휴 국유재산의 적극 발굴·활용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 증대
- 출자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면서도 배당수입을 통해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
- 물납증권의 신속한 매각을 통해 장기 보유에 따른 관리 비용 등 국고 손실 우려 완화 및 매각수입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3	'24
국유재산관리(II-2-일반재정②)		
① 국유재산관리(2234) ■ 국유재산관리(2234-302)	일반회계	8 7 8 7
비축토지매입(II-3-재정①)		
① 비축토지매입(2035) ■ 비축토지매입(2035-300)	국유재산 관리기금	800 800 800 800
청사(II-4-일반재정①&②)		
① 청사(6931) ■ 천안청사(6931-180) ■ 대전청사(6931-190) ■ 중앙전파관리소청사(6931-280) ■ 의정부청사(6931-300) ■ 도봉세무서 복합개발(6931-310) ■ 성남 3개구 선관위 복합개발(6931-320) ■ 용인통합청사(6931-330) ■ 창원통합청사(6931-340) ■ 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6931-360) ■ 안양세관통합청사(6931-390) ■ 수원세무서복합청사(6931-400) ■ 천안세관 복합개발(6931-410) ■ 동대구지구대 복합개발(6931-420) ■ 강남통합청사(6931-430) ② 관사(6932) ■ 관악복합관사(6932-320) ■ 부산공무원 통합관사(6932-470) ② 기타(6933) ■ 정책연수원(6933-100) ■ 국유 일반재산 리모델링(6933-110) ■ 정책연수원 통합관사(6933-130)	국유재산 관리기금	349 14 192 - 38 10 2 3 3 9 - - - - 12 10 2 226 193 34 - 510 30 344 7 40 19 24 4 4 3 3 5 120 9 1 8 53 15 38 125 73 52 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기재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 활용전환 건수 (필지)	18,744	14,665	18,159	18,908	최근 3개년 기재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 활용전환 건수 평균 (17,189건) 대비 110%수준을 목표로 설정	'23년도 말 기준 보유재산 및 '24년 신규유입 재산 중 대부 등으로 활용전환된 필지수	국유 일반재산 대장
일반회계 배당수입 예산달성을(%)	111.4	99.8	87.3	104.8	국가 재정소요 증가 추세를 감안, 전년보다 20% 증가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정부출자수입 본예산 대비 배당실적(일반회계)	정부배당금 국고수납 금액 및 세입예산

③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IV-3-③)

□ 추진배경

-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22년 기준 196조원)하면서 공공조달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 * 공공조달 규모(조원) : ('18) 141.2 → ('20) 175.7 → ('22) 196.0
 - 공공구매력을 활용, 혁신성장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추진('22.12~)
- 효율적 국가계약제도 운용 및 신산업 지원·저출산 등 사회 문제 완화를 위해 계약 제도·관행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공조달 혁신) 혁신조달제도 운용과 함께 전략적 조달(SPP*) 도입을 위해 조달법령 체계 개편, 조달특례제도 정비, 조달 기업 부담완화 등 체계적·전략적 공공조달 정책 기반 마련
 - * 공공조달을 예산, 세제와 더불어 국가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 선진국 既 도입
 - (혁신조달제도 운용) '20년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도입 후 양적 성장과 함께 공공서비스 기반의 질적 성과 체계*로 전환 → 공공부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 수행
 - * 혁신제품지정목표제 폐지, 지정심사시 공무원 참여, 기관현실감안 혁신구매목표 설정
 - (조달법 체계 정비) 조달 규모, 영향력 확대에 맞춰 공공조달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조달법 체계 정비 추진
 - 중앙조달 중심¹의 현행 「조달사업법」 이외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공공 조달을 체계적·일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조달법(가칭)」 제정² 추진
- 1」 조달청이 공공기관 의뢰로 입찰, 계약 등 조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 2」 現 공공조달 법제는 기능별로 규정 → 기본원칙 부재, 거버넌스 부재, 성과관리 체계 부재, 정책 인프라(통계, 전문인력 등) 부재 등 일관된 조달정책 수립에 애로

- (조달특례제도 개편) 중소기업(구매총액50%), 여성기업제품(물품.용역 5%) 등 개별법에 의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조달특례 제도(의무·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조달특례가 개별법에 의해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운영 중 → 중복·중첩, 비효율, 공공서비스 질 하락, 산업·기술 발전 저해, 중복인증 기업 특혜 집중 등 문제 발생
- (조달기업 부담 완화) 조달기업(제3자 단가계약^{*})이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기준 마련
 - * 조달청-공급업체간 계약(단가·기간·총계약액 계약, 계약시 계약보증금 또는 증서 납부) 후 계약된 단가로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주문(수량만 입력)
- (계약제도 개선) 신산업 등장 및 산업환경 변화^{*}, 저출산^{**} 문제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계약제도 개선 필요
 - * (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① **하드웨어 판매** + **콘텐츠 구독**(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VR 컨텐츠) + **서비스 구독**(건강관리·원격진료 서비스 구독)
 - ** 출산율(명): ('10)1.23 ('14)1.21 ('18)0.98 ('20)0.84 ('22)0.78
- 국가계약제도 개선 TF^{*} 등을 통해 계약제도 개선과제 마련·검토 후 제도개선 추진
 - * 기재부 국고국장 주재로 관계부처·민간·공공기관 등 참석
- (계약 특례)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에 대응한 한시특례^{*} 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등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 * 선금지급 한도 확대, 입찰공고기간 단축, 입찰·계약보증금 완화, 검사기간 및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계약특례 연장	1월	~'24.6월
	○ 공급망 리스크 대응 관련 비축 현장 방문	2월	
	○ 공공조달 혁신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3월	
2/4분기	○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	4월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및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	6월	
	○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3/4분기	○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7월	
	○ 조달의 날 행사 및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9월	
	○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4/4분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월	
	○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개정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원자재 비축 현장을 방문하여 공급망 리스크 관련 현황 점검, 혁신제품 개발·생산 기업 및 수요기관의 현장의견 수렴
- 부처·기관·민간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계약제도 개선소요 발굴 및 현장의견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공급망 리스크 대응 관련 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원자재 비축 현황 점검	'24.1월

□ 기대효과

- 공공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신산업 지원 및 저출산 등 사회문제 완화,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정 경제 정착
- 공공조달 전반의 체계 정비 및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 달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고업무관리지원(II-2-일반재정①)		
① 국고업무관리지원(2233) ■ 혁신조달지원(305)	일반회계	3.5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조달특례 성과관리방안 마련	-	-	-	대책 마련 부처 개별법으로 산발적 도입·운영됨 중인 조달특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체계 도입 필요 *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23.7~12월): 정책효과 검증·평가 등 관리 부재	대책 발표 - 관리대상 조달특례 선정 - 성과점검 연구용역을 통한 성과보고서 안 마련	보도자료 용역자료 조달심 안건
국가계약제도 개선 이행건수	17	22	36	43	도전적 목표설정을 위해 전년도 실적(36건) 대비 20% 높은수준으로 설정	법 개정안 국회제출 시행령·예규: 개정 개정안 제출공문 개정·시행 공문 등

성과목표 IV-4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1) 주요 내용

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및 홍보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핵심 민생사업 중점 관리, 현장 방문을 통한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
- 복권기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적 관심 이벤트 (파리올림픽)를 활용, 서포터즈 청년층 확대 등 홍보 활동 전개

복권사업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 복권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안 및 위변조 방지 강화, 자금관리시스템 및 인쇄복권발권시스템 신규개발 등 추진
- 복권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복권상품구조, 복권시스템, 복권사고 대응체계 등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상시적 검증·자문 실시
- 건전한 복권구매 환경조성을 위해 판매점 건전화 관리체계 개편, 지도단속 매뉴얼 제작 등 불법행위 감시활동 강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관리과제	① 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및 홍보 강화	복권기금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인지도
	② 복권산업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복권수익금 증가율 복권의 사행성 평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73.7	74.0	81.0	76.3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대상 복권에 대한 인식 공감도 조사 - 최근 3년 평균치(76.3%)로 목표 설정	설문기관 조사	설문기관 조사 결과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복권기금은 각 부처 · 기관에 재원을 배분^{*}하는 계정성 기금으로,

* '24년 13개 기금, 3개 부처, 17개 시 · 도, 3개 기관의 121개 사업 지원

- 복권 판매 증가율 둔화 및 여유재원 소진으로 재정여력은 감소된 반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복권기금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중요
- 관련 부처와 예산 편성 및 각종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 강화

(4) 기타

- 복권제도 소개, 복권정책 최신동향, 복권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상시적으로 공지하는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www.bokgwon.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및 홍보 강화(IV-4-①)

□ 추진배경

- 복권기금의 저소득·소외계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한편, 수혜자에게 적시·적정 집행되도록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사업편성)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 복권 판매 증가율 둔화 및 여유재원 소진으로 재정여력은 감소된 반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 수요는 증가
-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 재정사업과 복권기금 사업간 차별성 모색

② (집행관리) 「핵심 민생사업*」과 「경제정책방향 사업**」 중점 관리 및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 강화

- 분기별 집행점검 및 현장 방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적기·적정 집행 추진

* 중점관리대상 사업(약자복지) : 재난적의료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 '24년 경제정책방향 중 복권기금 사업 : 근로자햇살론, 공공임대, 장학사업

③ (사업환류) '23년 복권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5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④ (공익성 홍보 강화) 복권기금 및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궁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TV, 디지털 매체 및 국민적 관심 이벤트(파리올림픽)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복권기금 공익 메시지 전달
- 서포터즈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청년층(만19~29세)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복권 궁정 인식 확산 도모
- 복권위원회(2차관)과 복권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확대 (연 4회 → 6회)하여 복권의 기본가치인 나눔 실천 지속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복권기금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1월	
	○ 복권기금 집행지침 마련·통보	1월	
	○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 마련 · 통보	2월	
	○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모집 및 1차 봉사활동 실시	2월	
	○ 복권기금 홍보영상 CF(2편) 및 포스터(3종) 제작	3월	
	○ 복권기금사업 현장 점검	1~3월	
2/4분기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4월	
	○ 1/4분기 복권기금사업 집행실적 점검	4월	
	○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3차 봉사활동 실시	4~6월	
	○ '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정부안 수립	5월	
	○ 복권기금사업 현장 점검	4~6월	
3/4분기	○ 2/4분기 복권기금사업 집행실적 점검	7월	
	○ 복권기금사업 현장 점검	7~9월	
	○ '24년 행복지음 4기(서포터즈) 발대식 및 활동	7~10월	
	○ '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정부안 국회 제출	9월	
	○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4차 봉사활동 실시	9월	
	○ '25년 복권홍보계획 수립	9월	
4/4분기	○ 3/4분기 복권기금사업 집행실적 점검	10월	
	○ 복권기금사업 현장 점검	10~12월	
	○ '24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실시	11월	
	○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5차·6차 봉사활동 실시	10~12월	
	○ '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 의결	12월	
연중	○ 복권기금 홍보영상 CF 방영, 언론홍보, SNS 및 캠페인 운영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소외계층
- (이해관계집단) 지방자치단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0개 법정배분기관, 국토부·여성부·고용부·복지부 등 9개 부처

□ 기대효과

- 효율적인 복권기금 운용을 통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복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및 궁정 인식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복권기금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인지도 (%)	62.2	60.7	67.6	63.5	복권 관련 인식 공감도 중 '공익 기금 투명사용' 조사 결과 - 최근 3년 평균치(63.5%)로 목표 설정	설문기관 조사	설문기관 조사 결과서

② 복권사업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IV-4-②)

□ 추진배경

- IT 기술 발전, 해킹 등 급변하는 복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복권발행의 안정성, 신뢰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여 복권사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복권시스템의 신뢰성·안정성 강화

- 복권구매통합포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관리적¹·물리적²·기술적³ 관점의 복권시스템 보안 종합대책 추진

1」 (관리적) 정보시스템 시설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추가 실시, 보안교육 강화 등
2」 (물리적) 시스템 보안구역 접근통제, 시스템 기기 반입·반출 보안점검 강화 등
3」 (기술적) 웹취약점 분석 솔루션 도입, 이상징후 통합탐지 시스템(SIEM) 도입 등

- 복권의 위·변조 방지 강화를 위해 현재 전자복권에만 적용중인 블록체인 기술을 인쇄복권('24년)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

* 복권 블록체인 순차 도입 : ('19년)전자복권 → ('24년)인쇄복권 → ('26년)로또·연금복권

- 복권시스템의 국내외 보안 인증* 자격 취득 및 유지

* 국내 ISMS-P 갱신, 국제공인 ISO27001, WLA-SCS 인증 갱신

- 인쇄복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쇄사고 예방 및 인쇄복권 품질개선 등의 기능을 포함한 인쇄복권 발권시스템 신규 개발

- 복권판매대금 관리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금관리시스템 신규 개발

② 복권발행·시스템의 상시적 외부 검증체계 구축

- 「복권발행·시스템 및 복권사고 검증자문단」 운영을 통해 복권상품 당첨확률, 복권 사고대응체계, 시스템 구축 등 핵심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시 검증을 거쳐 복권 신뢰성 제고

③ 복권 불법행위 감시 강화 및 건전한 판매질서 확립

- 복권 불법행위 신고체계 정비, 불법 행위 근절 홍보 강화 등 불법 모니터링 확대 추진
- 판매점 지도단속 매뉴얼 제작(신규) 및 건전화 관리 등급 체계개편, 판매인 건전화 교육확대(연 3회 → 4회)를 통해 건전구매 환경조성

④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복권 이용 문화 정착

- 대상별 맞춤형 복권 과몰입 및 중독예방 캠페인*을 한국도박 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하여 진행

* 일반인, 도박문제 경험 소비자, 청소년으로 대상

-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복권 과몰입 자가진단 기준 개발 및 건전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용역 실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복권시스템 보안강화 종합대책 마련	1월	
	○ 복권시스템 웹취약점 분석 솔루션 도입	2월	
	○ 5기 복권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입찰공고	3월	
2/4분기	○ 5기 복권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4월	
	○ 개인정보(동행복권 포탈 가입자) 위탁업체 점검	4월	
	○ 상반기 지역센터 보안감사	4월	
	○ 침해사고 대응 훈련	5월	
	○ 복권 과몰입자 참여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 (온라인)	4~6월	
	○ 복권 과몰입 자가진단 기준 개발	4~6월	
	○ 복권시스템 및 복권사고 검증자문단 구성	5~6월	
	○ 상반기 복권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6월	
	○ 상반기 복권시스템 운영감리	6월	
3/4분기	○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7월	
	○ 인쇄복권 발권시스템 구축 완료	8월	
	○ 복권 과몰입자 참여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 (오프라인)	9월	
	○ 복권상품 종합개편안 검토	7~9월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8~10월	
	○ WLA-SCS 사후심사 완료	9월	
	○ 복권시스템 및 복권사고 검증자문단 회의	9월	
	○ 인쇄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적용	9월	
4/4분기	○ 하반기 지역센터 보안감사	9월	
	○ 이상징후 탐지시스템(SIEM) 도입	10월	
	○ ISMP-P 간접 심사	11월	
	○ ISO27001 사후심사 완료	12월	
	○ 하반기 복권시스템 운영감리	12월	
	○ 하반기 복권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12월	
	○ 복권시스템 및 복권사고 검증자문단 회의	12월	
	○ 복권위-지자체-수탁사업자 판매점 건전성 강화 워크숍	12월	
연중	○ 5기 복권사업 운영 관련 협의체 회의(월2회)	계속	
	○ 복권매출 실적 점검 및 복권별 매출 관리(매월)	계속	
	○ 온라인복권 신규 판매점 모집 및 계약	계속	
	○ 복권판매점 불법행위 지도·단속 점검(매월)	계속	
	○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 실시	계속	
	○ 복권 건전화 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이벤트 실시	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복권 구매자)
- (이해관계자) 복권 수탁사업자, 복권 판매인, 지자체 공무원 등

□ 기대효과

- 복권발행체계의 안정성·신뢰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복권사업의 안정적 성장 및 원활한 기금조성에 기여
- 불법행위 근절 노력, 복권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복권에 대한 긍정 인식제고, 과몰입 예방, 건전구매 등 건전한 복권문화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복권수익금 증가율(%)	8.9	7.5	6.1	6.9	복권수익금(복권판매수입-발행경비)은 복권 매출을 통해 공적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 최근 복권수익금 증가율은 문화 주제임에도, '24년 목표치는 전년 보다 0.8% 증가한 6.9%로 설정 *	복권수익금 실적	연간 복권수익금 실적 자료
복권의 사행성 평가(%)	45.9	44.7	30.5	40.4	복권 사행성 조사를 통해 '사행적인 편이다' + '매우 사행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로 사행성 평가 - 최근 3년 평균치(40.4%)로 목표 설정	설문기관 조사	설문기관 조사 결과서

기 본 방 향

◇ 국가 대외신인도 관리

- 한국의 건실한 경제 편더멘털과 위기대응력 등을 국제신평사 및 해외투자자와 적극 공유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규율체계 선진화
- 핀테크 기반 혁신적 외환서비스 도입·활성화, 안정적 운영 및 경쟁 촉진을 통해 對국민 외환서비스 質 지속 제고

◇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

- G7·G20 참여 계기, 세계경제 리스크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 강화 및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성과 창출 노력
- ASEAN+3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고 주요국과 양·다자 정책 공조를 통해 역내 금융협력 성과 도출 및 우리 영향력 확대

◇ 전략적 경제외교 후속조치·공급망 대응전략 수립·이행 및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 정상순방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고, 향후 순방 관련 경협사업을 집중 발굴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기회요인 극대화 도모
- KSP·EIPP를 통해 유망 산업 분야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성 제고

◇ 개발협력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인력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위상제고 등 국가경제에 기여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	3	3	10	19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V.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1. 국가 신인도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① 한국경제 홍보 및 국가 대외신인도 관리	한국경제 홍보활동 실시 횟수
	②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및 관련 입법절차 등 후속조치 신산업 관련 외환서비스 제도 개선 수
	③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	G20·ASEAN+3 등 국제 협의체 결과문서에 우리측 제안 반영 양자회의 및 면담개최
2. 국익중심의 경제외교 후속조치 및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변화 대응		FTA체결국과의 교역비중
	① 경제외교 후속조치 통한 국내경제 역동성 제고기여	애로사항 해소 컨설팅 대상 기관 만족도 조사
	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역량 제고	통상환경 변화 및 공급망 대응 관련 안건의 장관급 회의체 상정 건수
	③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및 FTA 활용촉진	FTA전문가 평가점수 FTA 특혜관세 활용제고 추진실적
3.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①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	MDB 신탁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아국 영향력 제고 및 인력·기업 진출 지원 사례
	②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상회담 연계 성과사업(MOU 등) 비율 (%) 1억불 이상 사업 승인 비중 (%)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기후 관련 국제기구 통한 아국 기관·기업 진출 지원 기후대응 관련 국제 논의 통한 아국 위상 강화 건수
	④ KSP, EIPP를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 강화	정책자문 제언 항목건수 정책채택가능성

(1) 주요내용

- 대외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시장 및 투자자 불안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대외신인도 지속 관리
 - 역대 최고수준인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연례협의,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신평사의 관심·우려사항에 적극 대응
- (경제외교 후속조치) 정상순방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고, 향후 순방 관련 경협사업을 집중 발굴
 - 글로벌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부처 별 경제외교 후속조치 추진 과정 상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을 적극 지원
 - 경제외교 후속조치 사업 별 이행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이행과정 점검 및 관리 추진
- (통상환경 변화 대응역량 제고) 공급망 리더십·교섭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기회요인 극대화 도모
 - (리더십) 전략자산 보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 위상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
 - (교섭력) 공급망 교란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 교섭채널,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역량 결집 추진

(2)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 치 '28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없음									

* (기재부) 전략목표V는 전략목표 성과지표가 없는 상황으로 해당 지표내용 미작성
→ 추후 국조실 협의를 통해 성과지표 추가 가능

(3) 기타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국가 대외신인도 관리

- 국제신평사와의 연례협의, 고위급 면담, 상시 소통채널 구축 등을 통해 국가신용등급 안정적으로 유지
-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관리하는 한편, 민간차입비용 절감에 기여
- 해외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IR 개최, 정책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문가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소통 노력 지속
- 美 환율보고서 등 외환이슈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對美협의 등을 통해 대외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 對국민 외환서비스 質 향상을 위해 혁신 외환서비스 도입·활성화, 안정적 운영 및 경쟁 촉진을 지속 추진
-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편의제고 및 부담완화를 위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적극적 유권해석을 지속 추진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

- 이태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여('24.5) 계기, G7과 글로벌 핵심 이슈 관련 협력 강화 및 韓에 유리한 국제질서 수립 노력
- G20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책공조·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여 국익을 제고

- 금년 ASEAN+3 의장국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주요국과 양·다자 정책 공조를 통해 역내 금융협력 성과 도출 및 우리 영향력 확대
- IMF 연차·춘계 총회 참석 및 공동선언문 발표 등을 통해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고 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금 참여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가신인도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 금융협력 관련 전문가 평가
관리과제	① 국가 대외신인도 관리	▶ 한국경제 홍보활동 실시 횟수
	②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및 후속조치 ▶ 신사업 관련 외환서비스 제도 개선 수
	③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	▶ G20·ASEAN+3 등 국제 협의체에 우리측 제안 반영 ▶ 양자회의 및 면담개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금융협력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	85.1	86.2	86.4	87.0	금융협력은 상대방이 있으며, 주관적 평가시 심리적 상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년 목표를 최근 3년 평균치인 85.9점 및 전년도 실적인 86.4보다 높은 87.0 수준으로 설정	전문가 평가	내부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가 대외신인도 관리

- 신평사는 고령화 및 대북리스크를 중장기 위협요소로 지적하는데, 총선 이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변화 등에 주목*

* (피치, 3.6일) "중기 재정정책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인 가운데,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등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 향후 신평사 연례협의·등급발표*에 대비, 반복적으로 지적 되는 리스크요인에 대해 맞춤형 대응전략 개발 수립

* 일정(잠정): (2분기) 무디스·S&P 등급발표, (하반기) S&P·무디스·피치 연례협의, 피치 등급발표

□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및 법령 개정안 마련·시행시 금융회사, 감독기관, 국민·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新사업 관련 규제혁신 추진시 금융위, 관세청, 금감원 등 감독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소비자 보호·모니터링에 만전

□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

- G7·G20 계기 양자면담 등 통한 주요국과 협력 강화, IFA WG* 등 통한 가교 역할로 글로벌 핵심이슈 관련 합의 도출에 기여
* 韓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IFG WG) 공동의장국(韓-佛)으로 MDB개혁 등 논의 주도
- 실무 면담, 회의 발언 등으로 주요국 입장을 상시 파악하고 '24년 공동의장국으로서의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 합의 도출에 기여
- IMF 주요 의제에 대해 이사국으로서 소속 국가들의 입장을 균형있게 조율하고 16차 쿠타 일반검토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 (쿠타증액) 금통위 의결 + 국제기구가입조치법 시행령 개정 / (NAB축소) 금통위 보고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한국경제 홍보 및 대외신인도 관리(V-1-①)

□ 추진배경

- 한국의 건실한 경제 편더멘털과 위기대응력 등을 국제신평사 및 해외투자자와 적극 공유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 美재무부 환율보고서, IMF 대외부문평가 등 우리 외환정책 관련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리스크 최소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해외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한국 중시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홍보
 - 실제 투자자들의 의견이 정책 구체화·추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담 결과 등을 유관 부서에 공유
 - 주요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IR을 개최하고, 해외투자자들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한국경제 상시 홍보
- 우리경제 주요 이슈에 대하여 신평사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관리하는 한편, 민간차입비용 절감에 기여
- 외환이슈 관련 대외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및 對美협의 등 추진
 - 美 재무부와 고위·실무급 협의를 통해 우리 외환정책 및 투명성 제고 노력 등에 대한 美측 이해 제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	1분기	
	○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및 정보제공	1분기	

2/4분기	○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	2분기	
	○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및 정보제공	2분기	
	○ 美재무부 환율보고서 관련 협의 및 대응	4월(잠정)	
3/4분기	○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	3분기	
	○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및 정보제공	3분기	
	○ IMF 대외부문보고서 대응	3분기(잠정)	
4/4분기	○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	4분기	
	○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및 정보제공	4분기	
	○ 美재무부 환율보고서 관련 협의 및 대응	10월(잠정)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금융위·통일부·한은·KDI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신평사 연례협의 및 등급평가 대응전략 마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신용평가사 컨퍼런스 참석 및 신용등급 전망 논의	연중 수시
회의	한국은행·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과 신용평가 대응전략 논의	연중 수시

□ 기대효과

- 안정적인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여 우리 기업의 차입비용을 절감하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촉진
- 美 환율보고서 관련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예방하는 등 대외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한국경제 홍보활동 실시횟수	-	-	360	400 전년도 실적치(360) 대비 약 10% 높게 설정	홍보활동 등 횟수 측정 및 홍보대상·수단별 가중치 반영 내부 증빙 자료

※ 한국경제 홍보활동 실시 횟수

- 장·차관급 면담·컨콜·설명회 등 ×10점
- 장·차관급 미만 면담·컨콜·설명회 등 ×5점
- 실무 협의 ×3점
- 기타(메일링서비스 등) ×1점

②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V-1-②)

□ 추진배경

- 외환거래 수요 급증, 외화송금·결제방식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외환거래 규율방식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
- 펀테크 등 기술발전에 따른 외환서비스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한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 수요도 지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및 추진

- 국민·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는 대폭 자유화하고 거래당사자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규율방식 선진화 방안 마련·추진
- 내실있는 대외전전성 관리 지원을 위해 “실시간 외환거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
-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및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23.7월 도입)를 본격 가동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3조) 주요 정책수립, 법령 제·개정 및 해석 등 제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재부장관下 설치(위원장(국제금융국장) 포함 10명 이내)

② 혁신적 외환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 펀테크 등 관련업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산업 외환 서비스 개선 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편 지속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사무 위·수탁 제도 등 통해 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 출시 지원체계를 지속 운영
- 규제샌드박스 등 통해, 금융·ICT 분야와 융합된 혁신서비스의 적기 출시 지원, 他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축소로 경쟁 촉진

③ 적극적 유권해석 등을 통한 외환제도 개선 지속

- 국민·기업·금융기관 등 각 분야의 외환거래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반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1분기	
	○ 실시간 통합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안) 논의·마련	1분기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3월	
2/4분기	○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2분기	
	○ 외환규제 합리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안 마련	2분기	
	○ 실시간 통합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분기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6월	
	○ 신산업 외환서비스 개선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6월	
3/4분기	○ 외환규제 합리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령」 입법절차	3분기	
	○ 실시간 통합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계속)	3분기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9월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3분기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개최	3분기	
4/4분기	○ 외환규제 합리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령」 입법절차(계속)	4분기	
	○ 실시간 통합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개시	4분기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12월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4분기	
	○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개최	4분기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관세청·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규제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및 거시경제 영향, 법령 개정안 등 상시 협의
- 신산업 외환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대한상의 등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수요 발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소액송금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 구축 위한 업계 간담회	'24.4월
현장방문	환전영업에 대한 감독체계 개선 위한 현장 점검(관세청 공동)	'24.6월
회의	관세청·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방안·법개정안 논의	연중 수시
간담회	은행·증권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규제합리화 관련 의견수렴	'24.1분기
회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보고체계 정비 위한 회의(한은·금감원 등)	연중 수시

□ 기대효과

- 외환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기업의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는 최소화되는 선진적 규율체계로 전환
- 펀테크 기업 등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도입·활성화, 안정적 운영 및 경쟁 촉진을 통해對국민 외환서비스 質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①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	-	-	-	-	대책 발표	○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은 '24년 발표할 신규 대책	대책 발표	보도자료
						법령 개정안 마련	○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의 제도화 및 이행을 위해 법령 개정안 마련·제출	국회 제출	보도자료
						시스템 구축	○ '24.하반기 개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개시	보도자료
② 신산업 관련 외환서비스 제도 개선 수	-	-	-	-	13	15	○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확인 제도 심사건수(분기별) ○ 환전·송금사무 위·수탁, 송금증개 제도 심사건수(수시) ○ 규제샌드박스 등 신산업 외환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건수(수시)	각 제도별 운영실적 합산(건수)	업체·부처 회신, 보도자료 배포 등

③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V-1-③)

□ 추진배경

- 최근 G7과 브릭스 간 주도권 경쟁과 G7의 외연확장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G7과의 협력기회 확대 전망
- G20 内에서 지정학적 이슈 관련 갈등이 확대되는 한편, 성과창출을 위해 중간적 위치인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 확대
- '24년 의장국으로서 ASEAN+3 주요 의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역내 금융안전망 형성에 기여하며 경제적 위상에 맞는 국제적 지위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G7 등 협력강화) G7 재무장관회의 참여(24.5, 이태리) 한미일 재무장관회의(24.4, 미국) 계기, 핵심이슈 관련 장기 협력관계 구축 추진

- G7 재무장관회의 참여 계기, AI, 아프리카 협력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
- G7 주요국·초청국 등과 소통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G7+ 참여를 위한 장기적 협력 기반 구축
-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외환시장, 공급망 협력 등을 추진하여 주요국 협력관계 강화

② (G20 정책공조 강화) 불평등 대응 등 주요현안에 공조하는 한편,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 성과 창출에 기여

- 불평등 대응·MDB 개혁 등 핵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IFA WG* 등 통한 가교 역할을 통해 합의 도출에 기여
- * 韓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IFWG) 공동의장국(韓-佛)으로 MDB개혁 등 논의 주도
- G20 계기 주요국·국제기구 양자면담 등 통해 현안 관련 우리 입장 설명, 지지 요청 등 韓에 유리한 성과도출 노력 추진

③ (ASEAN+3 금융협력) 재무장·차관 및 실무회의에서 역내 금융안정성 제고, 신규과제 도출 등 금융협력 논의성과 도출에 기여

- (CMIM*)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속금융 프로그램 신설 등 논의를 주도하고, 금리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역내 회원국 위기시 달려 유동성 지원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출범('10.3월)한 다자간 통화스왑

- (AMRO*) 거시경제 동향 점검(Surveillance) 및 CMIM 운영 지원 역량 강화, 기술지원 활성화 등 추진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 (ABMI*) 韓 주도 TF**를 중심으로 역내 채권시장 발전 및 통합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등 추진

*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

** TF1: 공급, TF2: 수요, TF3: 규제, TF4: 인프라, 한국은 필리핀과 함께 TF4 담당

- (미래과제) 韓 주도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역내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신규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 협력방안 등 성과 도출

* '21년 우리나라 의장국 수임시, ASEAN+3의 미래과제로 4개 워킹그룹 승인('21.3월)
(①인프라 투자(싱가포르), ②구조적 이슈대응(中), ③기후변화 대응(日), ④핀테크(韓))

④ (양자협력) 고위급 양·다자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상대국과 경제·금융 협력기반 확대 추진

- 중국·일본, ASEAN 회원국은 물론 미국·영국·호주·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우호적 협력관계 유지

⑤ (IMF 협력 강화) 춘계·연차총회 참석, 연례협의 실시, 저소득국 역량개발사업 지원 등 IMF와의 협력 강화

- (춘계·연차총회)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 경제분절화 대응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국제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 (연례협의) 실무회의·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경제상황과 재정·통화 정책 등에 대한 IMF의 균형있는 평가 도출

- (역량개발사업 지원) 3기 한-IMF 기술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저소득국 재정·금융·조세정책 등 역량개발 지원

* '23~'27년간 총 2천5백만불 지원('23년 200, '24년 500, '25~'27년 각 600만불)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G20 제1차 FWG 실무회의	1월	
	G20 제1차 IFA WG 실무회의	1월	
	제1차 ASEAN+3 실무회의	1월	
	G20 제1차 재무보건TF 회의	2월	
	G20 제1차 IWG 실무회의	2월	
	G20 제1차 SFWG 실무회의	2월	
	G20 제2차 재무차관회의(23.12월 제1차 회의 既개최)	2월	
	G20 제1차 재무장관회의	2월	
	제2차 ASEAN+3 실무회의	2월	
	G20 제1차 기후대응TF 회의	3월	
	G20 제1차 GPFI 실무회의	3월	
	G20 제2차 IFA WG 실무회의	3월	
	한·일 재무차관대화	3월	
	G20 제2차 FWG WG 실무회의	3월	
2/4분기	제1차 ASEAN+3 차관회의	4월	
	G20 제2차 SFWG 실무회의	4월	
	G20 제2차 IWG 실무회의	4월	
	G20 제2차 기후대응TF 회의	4월	
	G20 제3차 재무차관회의	4월	
	G20 제2차 재무장관회의	4월	
	IMF 춘계총회 참석	4월	
	ASEAN+3 장관회의	5월	
	G20 제2차 재무보건TF 회의	5월	
	G7 재무장관회의	5월	
	G20 제3차 IFA WG 실무회의	6월	
	G20 제3차 FWG 실무회의	6월	
	IMF Staff Visit	6월	
	한·호주 국장회의	7월	
3/4분기	G20 제2차 GPFI 실무회의	7월	
	G20 제3차 IWG 실무회의	7월	
	G20 제3차 SFWG 실무회의	7월	
	G20 제3차 기후대응TF 회의	7월	
	G20 제4차 재무차관회의	7월	
	G20 기아·빈곤대응TF 장관회의	7월	
	G20 제3차 재무장관회의	7월	
	한·싱 고위급 경제정책 대화	8월	
	G20 제4차 IWG 실무회의	9월	
	G20 제4차 SFWG 실무회의	9월	
	G20 제3차 재무보건TF 회의	9월	
	G20 제4차 기후대응TF 회의	9월	
	G20 제4차 FWG 실무회의	9월	
	G20 제4차 IWG 실무회의	9월	
	G20 제3차 GPFI 실무회의	9월	
	제3차 ASEAN+3 실무회의	9월	
4/4분기	제4차 ASEAN+3 실무회의	10월	
	G20 제5차 재무차관회의	10월	
	G20 제4차 재무장관회의	10월	
	IMF 연차총회 참석	10월	
	G20 기후대응TF 장관회의	10월	
	G20 재무·보건 합동 장관회의	10월	
	G20 정상회의	11월	

	AMRO 연례협의 제2차 ASEAN+3 차관회의	12월	
연내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미정	
	한·일 재무장관회의	미정	
	한·영 경제금융 대화	미정	
	IMF 연례협의 추진	미정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G20 핵심의제 관련 논의에 전문가·관계기관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아국 입장 마련
- ASEAN+3 의제와 관련된 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한국의 입장 마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전문가 면담	·학계(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연구기관(KDI·대외경제연구원) 등 핵심이슈 관련 의견 교환	수시
전문가 면담	·연구기관(아시아연구센터) 등 핵심이슈 관련 의견 교환	수시
관계기관 회의	·한국은행(국제기구팀), 금융위원회(글로벌기구과) 등과 G20 핵심 의제 및 실무회의별 대응전략 마련	수시
관계기관 회의	·G20 성과목표 관련 재무차관-세르파 전부처 회의	2월 8월
관계기관 회의	·한국은행(금융협력팀), 금융감독원과 ASEAN+3 주요의제 및 AMRO 주요보고서 등 대응전략 마련	수시

□ 기대효과

- G7과 글로벌 핵심이슈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질서 수립 논의에 韓 입장 반영, G7과 실질적 경제협력 기회 확보
- 국제금융체제 등 G20 핵심의제 관련 의견 조율 등 통해 韓에 유리한 성과 도출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 ASEAN+3 역내 주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24년 공동의장국으로서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역내 협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제금융협력 강화지원(Ⅲ-1-일반재정①)		
① 국제금융강화지원(014-3100-3131)	일반회계	69.7
▪ 역내 금융협력사업(014-3100-3131-304)	일반회계	51.8
▪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014-3100-3131-311)	일반회계	17.9
② 국제금융센터보조(014-3100-3132)	일반회계	20.0
▪ 국제금융센터보조(014-3100-3132-)	일반회계	20.0
③ 국제금융기구 출연(014-3100-3134)	일반회계	129.0
▪ 팬데믹 대응 기금 지원(014-3100-3134-302)	일반회계	129.0
		130.0
		13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G20·ASEAN+3 등 국제협의체 결과문서에 우리측 제안 반영	220	200	280	310	정책공조 필요성 확대 등을 반영, 평균대비 33%, 전년 실적 대비 10% 확대된 도전적 목표 설정 * '22년 실적 : <u>280점</u> - 정상회의 8회 × 30점 = <u>240점</u> - 장관회의 2회 × 20점 = <u>40점</u>	하단참조	기재부 내부자료 및 보도자료
양자회의 및 면담 개최	-	240	380	400	양자협력 중요성 증대 등을 반영, 평균대비 29%, 전년 실적* 대비 5% 확대된 도전적 목표 설정 * '23년 실적 : <u>380점</u>	하단 참조	기재부 내부자료 및 보도자료

※ G20·ASEAN+3 등 국제협의체 결과문서에 우리측 제안 반영

- 정상회의 아국 의견개진 : 30점 (x 회) / 장관회의 반영 : 20점 (x 회)
* 정상회의와 중복 적용 배제

※ 양자회의 및 면담 개최

- 미·일·중 장관급 이상 양자회의·면담 : 20점 (x 회)
- 미·일·중 차관급 이하 양자회의·면담 : 10점 (x 회)
- 그 외 국가 장관급 이상 양자회의·면담 : 10점 (x 회)
- 그 외 국가 차관급 이하 양자회의·면담 : 5점 (x 회)

(1) 주요 내용

- (경제외교 후속조치) 정상순방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고, 향후 순방 관련 경협사업을 집중 발굴
- 글로벌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부처 별 경제외교 후속조치 추진 과정 상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을 적극 지원
- 경제외교 후속조치 사업 별 이행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이행과정 점검 및 관리 추진
- (통상환경 변화 대응역량 제고) 공급망 리더십·교섭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기회요인 극대화 도모
- (리더십) 전략자산 보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 위상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
- (교섭력) 공급망 교란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 교섭채널,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역량 결집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익중심의 경제외교 후속조치 및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변화 대응	FTA체결국과의 교역비중
관리과제	① 경제외교 후속조치 통한 국내경제 역동성 제고기여	애로사항 해소 컨설팅 대상 기관 만족도 조사
	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역량 제고	통상환경 변화 및 공급망 대응 관련 안건의 장관급 회의체 상정 건수
	③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및 FTA 활용 촉진	FTA전문가 평가점수 FTA 특혜관세 활용제고 추진실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71.7	71	71.2	71.5	공급망 교란 등 세계교역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21~'23년 실적 평균치 이상으로 목표 설정	FTA 체결국 교역액 / 총교역액 관세청 무역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부처간 협조) 범부처 간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조가 필수적
 - 특히, 부처별 입장의 차이로 정보 공유 및 수집에 애로 존재

⇒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주요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상의 도움 제공등을 통해 형식적인 이행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순방성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통상환경 변화 대응역량 제고) 대외협력·대응 성과는 정치·외교관계, 국제무역질서, 산업 업황 등 외부변수에 크게 영향
 - 특히, 올해 선거의 해*를 맞이하여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심화·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대외정책 관련 불확실성 증대

* 미국 대선, 유럽의회 선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등 76개국 선거 예정

⇒ 각국의 이해·역학관계와 글로벌 산업 지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되,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경제외교 후속조치 통한 국내경제 역동성 제고기여 (V-2-①)

□ 추진배경

- 경제외교 성과가 수출·투자·고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창출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주요내용

※ 정확한 이행상황 진단과 차질없는 이행지원 위해 ①계획수립 - ②상대국 협의 - ③후속과제 이행 - ④완료 4단계로 엄격히 분류

- (후속조치 이행점검 결과) 4대 순방 추진과제 177개 중,
 - ①추진계획 수립단계 : 6개 → ②상대국과 협의단계 : 48개
③협의 후 후속과제 이행중 : 109개 → ④이행완료 : 14개
 - 순방 주요성과로 선정한 30대 핵심과제^{*}(美:5, 日:10, 美·日:7, 중동:8)는 모두 차질없이 추진중(협의중: 12, 후속이행중: 15, 완료: 3)
- * ①대통령실 브리핑시 주요성과로 발표되었거나 ②경제적 효과성이 큰 사업 중 부처협의 통해 선정
- (후속조치 추진성과) 수출 확대, 공급망 안정화, 관광객 유치 등 성과
 - (수출) 한-GCC FTA 타결(30억불 후생 증대효과), 수출 상담회 등 통해 중기제품(63억원), 영화(150억원) 등 약213억원 수출계약 체결
 - (공급망) 한미 EWS(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반도체 공급망 공동연구 등 추진
 - (관광객) 한일 국제선 운항 확대로 방한 일본인 관광객 780% 증가
- (애로사항) 일부 과제에서 상대측 협의지연, 관련예산 삭감 등 애로
 - (상대측 협의 지연: 카타르 스마트팜 협력, 한일 제3국 인프라 공동진출) 공관 통해 상대기업 접촉, 고위급 교류회 계기 비즈미팅 주선
 - (예산부족 : 한일 청소년 교류, 한일 노동분야 정기교류) 후속조치 필수예산은 '25년 예산 반영 추진, 금년은 상대국 협의 추진

□ 추진계획

- 순방 성과가 국내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강화·애로해소 등 체계적 후속조치 추진
 - 상대국 협의채널 공유, 공관 네트워크 활용, 현지 및 금융·수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경제외교 컨설팅 센터' 운영* 등 통한 상대국 소통 강화
 - * "정부는 (기업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함" (VIP, '23.6 수출전략회의)
 -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통해 후속조치 이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협의 통해 신속한 해소 추진
 - 추진체계 및 우수성과 홍보를 강화하고 핵심분야 성과 제고방안 검토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경제외교 순방 관련 후속조치 이행점검을 위한 플랫폼 출범	1월	
	○ 경제외교 순방 관련 후속조치 추진계획 대경장 상정	2월	
2/4분기	○ 경제외교 순방 관련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점검 및 해소방안 마련	4~6월	
	○ 경제외교 순방 관련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우선지원 대상사업 선정	4~6월	
3/4분기	○ 경제외교 순방 관련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지원(계속)	7~9월	
4/4분기	○ 경제외교 순방 관련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지원(계속)	10~12월	
	○ 경제외교 컨설팅 센터 설치 및 운영	10~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대외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대외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의견 반영
- 경제외교 후속조치 유관부서 간 범부처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정례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구 분	내용	세부일정
대외경제자문회의	글로벌 이슈에 관한 의미있는 시사점 도출	'24.4월

□ 기대효과

- (애로사항 해소) 후속조치 이행시 발생하는 규제 등 결림돌 제거
- (협력채널 공유·확대) 활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협의 가속화
- (추진체계 강화 및 효과성 제고) 이행점검단·대경장 연계를 강화하고, 핵심분야 성과제고방안 마련 및 기업 컨설팅 등 통해 경제효과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3-일반재정①)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 ■ 세부사업명(코드번호)	일반회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 목표치 '21 '22 '23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목표치						
애로사항 해소 컨설팅 대상 기관 만족도 조사	신 규	신 규	신 규	평균 3점 이상 (5점 만점)	<평균이상의 만족도 달성을 목표> 5점만점 기준으로 하여, 만족도 점수가 보통(3점) 이상 의 평균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	애로사항 관련 컨설팅 받은 기관들 상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애로사항 해소기관 만족도 조사

- 예상 대상 기관 : 경제외교 후속조치와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컨설팅 대상 기관
- 조사 관련 예상 지원 기관 : 수출입은행
- 측정산식 : $\sum\{(애로사항 해결 만족도(5점)-1)/(5-1)\}/(\text{전체 응답기관}) \times 100\%$
- 예시 5점 응답시 채택가능성 점수: 5점 응답시 : 100% 4점 응답시 : 75% 3점 응답시 : 50% 2점 응답시 : 25% 1점 응답시: 0%
- '23/'24 경제외교 후속조치 추진 관련 애로사항 해소기관 대상으로 실제 만족도 조사

<질의문안>

- Q. 경제외교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이행에 저해 됨
 2. 도움되지 않음
 3. 약간 도움 됨
 4. 도움 됨
 5. 매우 도움 됨

1. 이행에 저해됨 : 0% 2. 도움되지 않음 : 25% 3. 약간 도움 됨 : 50% 4. 도움 됨 : 75%
5. 매우 도움 됨 : 100%

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역량 제고 (V-2-②)

□ 추진배경

- (배경) 선진국을 중심으로 對中 공급망 의존도 완화 및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공급망 재편 추진
 - (특징) ①보조금정책 확산 등 첨단제조업 경쟁 격화, ②보호무역 대두에 따른 분절화 심화, ③자원무기화 등 공급망 교란 수반
 - (영향) ①우수한 제조 역량, ②자유무역질서, ③안정적인 원재료 공급망에 기초한 우리 산업 경쟁력 유지에 도전요인으로 작용
-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선제적·범부처* 대응 긴요
- * 특히,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체에 안건 상정 및 후속조치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리더십) 초격차 기술 확보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 위상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
 - (전략자산 보호체계 개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관리체계 개선, 방지대책 모색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산업별 선도국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IPEF 등 경협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공급망 연대 강화
 - (산업생태계 조성) 통상협정 활용방안 모색,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 등을 통해 수출·R&D·공급망 경쟁력 강화 지원
- ② (교섭력) 공급망 교란 등 리스크 발생시 상대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모색
 - (거버넌스 구축)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 예정인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활용하여 관계부처 간 유사시 대응방안 모색
 - (범부처 가용수단 동원) 상대국과의 공급망 교섭 과정에서 부처별 채널,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가용수단 총동원

③ (추진방향) 공급망 리더십·교섭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별, 산업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를 연중 상시 발굴·추진

- (전문성 확보) 분기별 1회 이상 자문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이슈 분석, 애로사항 파악, 시사점 도출

* 분기별 1회 부총리 자문기구인 대외경제자문회의 운영→ 장관급 회의체 안건 발굴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과제 발굴	1월~계속	
2/4분기	○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과제(1차) 대경장 상정	4월	
	○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과제(1차) 후속조치 추진 및 이행 점검	4월~계속	
	○ 대외경제 자문회의(1차, 부총리)	4월	
3/4분기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	7월	
	○ 대외경제자문회의(2차, 부총리)		
4/4분기	○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과제(2차) 대경장 상정	10월	
	○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과제(2차) 후속조치 추진 및 이행 점검	10월~계속	
	○ 대외경제자문회의(3차, 부총리)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산업 분야별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과제에 반영
- 통상정책 등 관련 범부처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정례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 기대효과

- 우리 경제의 공급망 리더십·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교란요인에 대한 근본적 대응역량 강화
- 對주요국 협력이 포함된 정책과제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점검단」과 연계함으로써 정상외교 경제성과 창출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통상환경 변화 및 공급망 대응 관련 안건의 장관급 회의체 상정 건수(건)	12	7	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안정화, 통상환경 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정의 ○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3개년 평균(8건) 대비 20% 이상 상향 → 도전적 목표 설정 	실적 집계 (장관급 회의체에 상정된 검토수립·이행 과제 건수)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수집·활용

③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및 FTA 활용 촉진(V-2-③)

□ 추진배경

-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FTA를 지속 확대하고 新 통상규범 도입을 통해 공급망 안정 및 기업 진출기반 필요
- 既체결한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이행 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출 확대·수입 원활화를 위한 원산지, 통관 분야* 협상 적극 추진
 - * (원산지 절차) 특혜를 부여하는 원칙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증명, 신고방법 및 원산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규정
 - (통관·무역원활화)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개선,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들이 직면한 통관애로 해소
 - (FTA) 자원부국인 GCC, UAE와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발효시키고 몽골, 조지아 등 신시장과의 FTA 협상 추진을 통해 경제영토 확장
 - (IPEF^{무역원활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당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도모
- FTA 이행·개선 협상의 내실화 및 관련 법령 개선으로 수출입 기업의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도모
 - (활용 촉진) 협정세율표 변환·검증 체계 고도화,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원산지 증명·통관절차 간소화 등 FTA법령 및 협정 개선
 - (애로 해소) 수출입기업의 고충 상시 모니터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행 협상 의제를 발굴하고 적시성 있는 통관애로 해소에 주력
- WTO·WCO 등 국제기구內 통상 협상·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다자간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을 통해 新통상환경 대응

- (국제기구 논의) WTO 전자상거래·개도국 지원, WCO 개정교토협약 협상 등 다자간 관세·통상 규범화 논의에 아국 이익 반영 극대화
- (디지털통상)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IPEF^{디지털}, 한-EU 디지털통상협정 등 체결 추진으로 무역·통관 절차의 디지털화 대응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1월	
	○ APEC 시장접근그룹(MAG) 회의 대응	2월	
	○ WTO 각료회의 대응	2월	
	○ 한-아세안FTA PSR 개선 협상	3월	
	○ 한-캄보디아 원산지 및 통관절차 위원회 협상	3월	
	○ WCO 재정위원회, ADB Trade Forum 대응	3월	
	○ FTA·IPEF 협상 추진,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3월	
	○ FTA관세법령 개정 관련 건의 검토	3월	
2/4분기	○ WCO 개정교토협약 관리위원회, 정책위원회, 총회,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 내용	4,6월	
	○ 한-영FTA, 한-인도CEPA 개선 협상	4월	
	○ 협정세율표 변환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4월	
	○ FTA·IPEF 협상 추진 및 FTA 이행점검·이행협상 추진	6월	
	○ UN ESCAP 종이서류 없는 무역원활화 협정 이사회·상임위 대응	6월	
	○ WCO 개정교토협약 관리위원회 대응	6월	
3/4분기	○ APEC 시장접근그룹(MAG) 회의 대응	8월	
	○ FTA·IPEF 협상 추진 및 FTA 이행점검·이행협상 추진	9월	
	○ FTA관세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제출	9월	
	○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한 UN ESCAP 합동 워크샵 개최	9월	
4/4분기	○ WCO 개정교토협약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대응	11,12월	
	○ 광역두만개발계획 세관 소위	12월	
	○ FTA·IPEF 협상 추진 및 FTA 이행점검·이행협상 추진	12월	
	○ FTA관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의결 및 시행령 개정 추진	12월	
연중	○ 한-조지아, 몽골 FTA/IPEF 무역 분과/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대응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원산지·통관 관련 FTA 협상 및 이행전략 등에 우리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해 수출입업계 및 관계 부처 대상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 협정관세율표 변환·검증 관련 전문가 간담회	'24.3월
현장 방문	■ FTA 협상 관련 국내 생산·수입 업체, 인천공항세관, 특송업계 등	'24 상반기
이해관계자 회의	■ FTA 협상별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 KOTRA 등과 검토 회의	'24 하반기
	■ FTA관세법령 개정 건의 부처(관세청 등)와 검토 회의 개최	'24.3월

□ 기대효과

- FTA 추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WTO·IPEF 등 **新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통상 네트워크 확대
-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 증대에 따른 수출입기업 매출 증가, 국내물가 안정 및 상품 다양화 등 소비자 후생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세제선진화 및 글로벌화(II-1-재정①)			
① 조세정책지원(2131)	일반회계	48.7	55.0
■ 국제조세협력(301)		12.2	15.0
■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303)		5.1	5.9
■ 관세협력기구 출연(304)		9.6	1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FTA전문가 평가점수*	92.3	91.6	92.5	92.5	○ 3개년(21~'23년) 평균값은 92.1점, 3개년 평균을 초과하는 실적으로 목표치 설정 전문가 pool을 대상으로 평가집계 (하단참조)
FTA 특혜관세 활용제고 추진실적	26건	27건	29건	29건	○ 최근 3년간 평균(27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FTA관세법령 개정건수, FTA 제도개선건수 등 합산

※ FTA 전문가 평가점수 측정방법 (전문가 pool을 대상으로 평가 집계)

- (측정산식) 전문가 평가 10개 문항을 7점* 척도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1점(매우 부적절)~4점(보통)~7점(매우 적절)

- (측정방법) 대상: 학계, 기업인, 연구원 등 FTA 전문가 집단 / 항목: FTA 관세분야에 대한 정책 만족도 평가(10개 문항)

[1] 주요 내용

① (추진배경)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분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국제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개발재원 수요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이 2.5조불에서 3.6조불로 증가(UNCTAD, '22년)

- 또한, 국가안보 및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ODA 중요성 확대* → **ODA Control Tower**로서 역할 강화 필요

* (美) B3W(Build Back Better World, '21.6),,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1.10)

(中) 일대일로, 중국-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EU) 인태전략 내 개발구상 추진 등

-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등 계기(세계 10위권 ODA 국가 도약) 우리나라 ODA 규모도 지속 확대* → **실질적 성과창출** 중요

* ('21) 3.8조원 → ('22) 3.9조원 → ('23년) 4.8조원 → (24년) 6.3조원

② (주요과제) 유상 ODA 주관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 담당부처로써, 개도국에 대한 전략적 ODA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도모

(1)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

-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개발재원 논의에 적극 참여
- 정례회의·연례회의 등 국제금융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경험 공유를 통해 선진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2)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대형 랜드마크형 사업 비중 확대, 우리나라 기술 우위 분야에 대한 협조용자 체결 등 우리 기업 해외 수주 지원
- EDCF 절차 개편 통한 소요기간 단축, 외화표시차관 확대 및 수원국 과제 정보 제공 등으로 진출 기업의 불확실성 축소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기관의 기후사업 발굴 및 진출을 지원
- GCF가 핵심적인 기후 국제기구로 발전하도록 지원
 - GCF 2차 재원보충('24~'27년)에 3억불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GCF 이사이자 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GCF 발전에 기여

(4) KSP를 통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지원 강화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수주 및 지원 등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해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에 기여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분	성과지표
관리과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제개발협력논의 참여에 대한 전문가 평가(점수)
	①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	MDB 신탁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②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아국 영향력 제고 및 인력·기업 진출 지원 사례(단위: 건) EDCF 대상국과 정상회담 시 정상회담 연계 성과사업(MOU 등) 추진 비율 (%)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1억불 이상 사업 승인 비중 (%) 기후 관련 국제기구 통한 아국 기관·기업 진출 지원
	⑤ KSP를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 강화	기후대응 관련 국제 논의 통한 아국 위상 강화 건수 정책자문 제언 항목건수, 만족도 평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국제개발협력논의 참여에 대한 전문가 평가(점수)	-	82.2	-	80.0	만족도 조사를 5단계 Scale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로 조사하여, 평균 '만족'이상 평가 달성 목표	국제개발협력 논의 관련 전문가 대상 만족도 조사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6-'30) 도입 이후 원조(Aid)에서 개발(Development)로 패러다임이 전환중
 -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기반이 강조되면서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한 유상원조 및 민간재원 활용이 강조되는 추세
 -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이 강조됨에 따라 공적재원 지원이 민간재원 지원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축에 대한 논의 활발
- 우리나라는 이분화된 유·무상 ODA 업무분장에 따라 지원효과성 증대를 위해 일관된 지원전략 설정 및 여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10.1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효과적 ODA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 확대 필요
 - 유·무상 원조간 연계 강화 등 ODA의 효율성 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제도 선진화 병행 추진
 - 개별 신탁기금 사업 지원시 '국제개발사업 심의위원회(국내부)'에서 他 ODA 연계 방안 및 MDB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
-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코로나19 재유행, 저소득국 채무위험 증가 등이 사업 발굴·승인 및 집행관리의 정상 추진에 위험 요인
 - 대외환경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유·무상 연계 강화, PPP 사업 참여, MDB 협조융자 확대 등 지원모델 다각화 노력 지속 추진
- 최근, 기후변화 논의가 재무Track으로 확장됨에 따라, G20, 주요 MDB 등을 활용한 기후분야 국제협력 요구 등 심화
 - 그런 분야 주요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GCF·GGGI 등 국내 소재 국제기관을 활용, 우리 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논의 참여 지원
- 수원국의 비협조적 태도, 감염병·전쟁 등의 이동제한 요인 등 대외불확실성 심화
 - 수원국 요구사항 적극 청취 및 선정 시 사업 스크리닝 강화
 - 화상회의 등 비대면 자문에 대한 대비 추진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V-3-①)

□ 추진배경

- **(국제환경변화 대응)** 코로나19, 기후변화, 분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국제사회 양극화 심화 → 개발재원 수요 증가*
 - * 코로나19로 인해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이 2.5조불에서 4조불로 증가(UNCTAD, '23년)
 - 또한, 공급망 분절화 등 국가안보 및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ODA 역할 확대* → ODA 효과성 제고 필요성 대두
 - * (美) B3W(Build Back Better World, '21.6),,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1.10)
(日) 일본식 인-태 전략 지원을 위해 ODA 강령 개정('23.6) 등
- **(국제적 위상 강화)** 아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내 글로벌 논의 및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 → 선진 공여국 위상 제고
 - 성공적인 개발 경험 공유 등 수원국 수요 맞춤형 지원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주관기관으로서 ODA 정책 충실히 이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유상·MDB 관련 Control Tower 역할 및 대내외 전략 수립

- ① **(Control Tower 역할)** MDB 신탁기금, EDCF, KSP 등 우리부 주관 양·다자 사업 연계를 통한 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모색
 - 국제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탁기금 사업을 심의·승인하고, EDCF, 국제금융기구, GCF 등과 협력방안 검토
 - * 개발금융국장(주재), 개발금융국 전과장, 경협기획과장, 사업전담팀 등 참여
 - 특히, '24년에는 확대*된 신탁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MDB 신탁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추진
 - * 국제금융기구(MDB) 출연 예산 : ('23년) 1,593 → ('24년) 3,541억원(+166.6%)

② (ODA 대내외 전략수립) ODA 종합시행계획 등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개발재원 논의에 참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연간 4회 개최)를 통해 관계부처·민간위원 등과 소통·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ODA 계획 마련*
 - * '24년에는 국조실·외교부 등 협업 하 ODA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 로드맵 마련 추진
 - 제3차 OECD DAC 동료검토* 일정에도 차질없이 대응하고, 권고사항 등 발표('24.4월 말~5월초)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 * OECD DAC 회원국의 ODA 정책·집행에 대한 5~6년 단위 주기적 평가

(2)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아국 영향력 확대 및 인력·기업 진출 지원

① (영향력 확대) 기구별 정례회의*·연례협의**·협력 행사 계기 개발 경험 공유 등 글로벌 개발 논의 적극 참여

* ('24.3월) IDB 연차총회, AIIB 1분기 정기이사회 ('24.4월) WB/IMF 춘계회의 ('24.5월) ADB 연차총회, AfDB 연차총회, EBRD 연차총회, CABEI 연차총회 ('24.6월) AIIB 2분기 정기이사회 ('24.9월) AIIB 3분기 정기이사회/연차총회 ('24.10월) WB/IMF 연차총회 ('24.12월) AIIB 4분기 정기이사회

** (9월) WB, EBRD (10월) ADB (11월) IDB, CABEI

- 국제금융기구 주요 협력 의제 적극 참여, 조직의 국내 유치, 고위직 진출 지원 등 아국 위상에 걸맞은 협력 다각화
- 아국 개발경험 전파, 기후 대응 등 개발 협력 수요에 맞는 국제 금융기구 출자·출연 지속 추진 및 출연기금 성과관리 강화

※ 국제금융기구별 협력 추진 계획

- (WB) 우리기업 대상 WB의 변화된 조달정책을 설명하는 조달설명회 개최, 한-WB 협력기금 일자리·직능 분야 사업성과 세미나 개최, WB 녹색혁신의 날
- (ADB) 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 준비, ADF-14 재원보충 적극 참여, EDCF-ADB 협조용자 간신 MOU 및 중앙아 기후변화대응준비 다자기금 출연 체결 등 협력강화
- (IDB) 한-중남미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개최, IDB Invest 증자·다자투자기금 출연 등 주요 재원확충계획 참여
- (AfDB) 제8차 KOAFEC 장관급 회의 추진 협의, '24년 KOAFEC 신탁기금 출연금 납입 등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 (CABEI) 신탁기금 지속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인력의 중미시장 진출 확대
- (EBRD) 신임총재 선거, 수원지역 확대 등 기구 내 주요 논의 참여, 재난대응특별기금 (CRSF) 신규출연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기반 확대, 한국인력·기업 진출 활성화 노력
- (AIIB)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진출 지원을 위한 AIIB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AIIB 위기 대응체계 구축,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양허성기금 출자 참여, 한국 인력의 AIIB 진출 지원

② (인력·기업 진출 지원) 국제금융기구와 우리인력·기업 간 교류 기회 제공을 통해 아국 영향력 확대 및 新시장 개척 지원

- (채용·조달설명회) 우리 청년층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및 기구별 발주처와 우리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우리 기업 중남미 진출을 위한 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진행, 현지 기업과 교류 기회 마련(7월)
- (정보제공)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최신 채용·조달정보 제공을 통해 우리 우수 기업·인력의 참여 유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협의 및 위원회 의결	'24.2월	
	제3차 OECD DAC 동료검토 TF 최종 회의	'24.3월	프랑스
	IDB 연차총회 참석	'24.3월	도미니카공화국
	AIIB 1분기 이사회	'24.3월	중국
2/4분기	제4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협의 및 위원회 의결	'24.4월	
	MDB 신탁기금 성과평가 개선 관련 연구용역 발주	'24.4월	(잠정)
	WB/IMF 춘계회의 참석	'24.4월	미국
	WB 조달설명회	'24.5월	한국
	한-WB 협력기금 일자리·직능 분야 사업성과 세미나	'24.5월	한국
	ADB 연차총회 개최	'24.5월	조지아
	EBRD 연차총회 참석	'24.5월	아르메니아
	AfDB 연차총회 참석	'24.5월	케냐
	CABEI 연차총회 참석	'24.5월	온두라스
	AIIB 2분기 이사회	'24.6월	중국
3/4분기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협의 및 위원회 의결	'24.7월	
	MDB 신탁기금 성과평가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도출	'24.8월	(잠정)
	IDB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24.7월	브라질
	WB 연례협의	'24.9월	미국
	EBRD 연례협의	'24.9월	한국
	AIIB 3분기 이사회 및 연차총회 참석	'24.9월	우즈벡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24.9월	한국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24.9월	한국
4/4분기	제5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협의 및 위원회 의결	'24.11월	(잠정)
	MDB 신탁기금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24.11월	(잠정)
	ADB 연례협의	'24.10월	(미정)
	WB/IMF 연차총회	'24.10월	미국
	WB 녹색혁신의 날	'24.11월	한국
	IDB 연례협의	'24.11월	미국
	AIIB 4분기 이사회	'24.12월	중국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개도국 국민 · EDCF · GCF 등 사업에 참여하거나 해외 시장,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기관·인력 등
- **(이해관계집단)** 외교부 · 국조실 등 관계부처, 신탁기금 출연 관련 국제금융기구(WB, ADB, IDB 등)

□ 기대효과

- ODA의 전략적 추진 및 내실화를 통해 개도국의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고, 공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등 국익에 기여
 - 특히, 국제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국가 간 개발격차 확대 → 지속가능한 개발 기반 마련 지원
- 외부 지적(감사원, 시민사회, 국회 등) 및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등을 기반으로 ODA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적 확대에 걸맞은 수요자 중심의 ODA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ODA 질적 제고 목표
- MDB, EDCF, GCF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협력 정책·사업간 연계성을 강화
 -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의 전략적·효율적 운용을 통해 우리 원조가시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인력 진출 가능성을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제개발협력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Ⅲ-1-④)		
① 국제금융강화지원(3100-3131)-	일반회계	166
■ 국제금융협력강화(3100-3131-301)	일반회계	9.6
② 국제금융기구 출연(3100-3134)-	일반회계	1,593
		3,45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MDB 신탁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신규 지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MDB 주관부서로서 신탁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 등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 기구별 신탁기금 기여 규모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정성지표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및 내부증빙자료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아국 영향력 제고 및 인력·기업 진출 지원 사례(단위: 건)	신규 지표	20	최근 3년간 기준 실적 감안('21~'23년 각 16건, 16건, 17건), 아국 위상에 걸맞는 국제금융기구 협력 추진을 위해 평균보다 25% 상향한 공격적 목표 설정	아국 영향력 제고 및 인력·기업 진출 지원 사례 조사	① 국제금융기구 주요 협력 의제 주도·참여 ② 국제금융기구 조직의 국내 유치 ③ 인력·진출 지원 등 협력행사 개최 ④ 국제금융기구 주요 역할 수임 및 고위직 진출 ⑤ 그 외 이에 준하는 성과

②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V-3-②)

□ 추진배경

- 기후변화·국제분쟁 등으로 개발재원 수요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요 공여국은 대외전략과 연계하여 ODA 확대·활용 중
- 국제사회 내 역할·책임을 다하는 공여국으로서 아국 위상 제고 및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 경제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략적 추진)** 대형 랜드마크형 사업 비중 확대, 우리나라 기술 우위 분야에 대한 협조융자 체결 등 우리 기업 해외 수주 지원
 - F/A 증액·신규 체결, EDCF·EDPF 복합금융, MOU 등 활용한 유망 대형사업의 선점 통한 대형 인프라 사업 적극 추진
 - 교통·ICT 등 우리기업 기술우위 분야에 대한 협조융자 통해 아시아 지역 외 아프리카·중남미·인도 지역 기업 진출 지원
- **(제도개선)** EDCF 절차 개편 통한 소요기간 단축, 외화표시차관 확대 및 수원국 과제 정보 제공 등으로 진출 기업의 불확실성 축소
 - 절차 간소화, 요건 명확화로 승인 후 본구매 체결까지 소요기간 단축 및 사업관리 컨설턴트 현지 파견으로 사업 전단계 밀착 지원
 - 환차손 리스크, 물가 상승 위험, 수원국 세금 부담 등 해외진출 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하여 잠재적 해외 진출 수요 창출
- **(대내외 협력강화)** 정상외교와 연계하여 유망 대형 사업 추진동력 확보, 기업 및 공여기관간 소통 강화로 경제협력 성과 극대화
 - 정상 순방·회의 대상국 맞춤 개발협력 패키지(대상국 선정, F/A 증액·체결 등) 마련하여 우리기업 관심사업 추진동력 확보
 - 기업 간담회 분기별 개최 통해 관심 분야·애로사항 등을 전략에 반영 및 선진 공여기관 네트워크 활용한 사업발굴 다변화 및 협력 강화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4.2월	
	EDCF 운용관리지침 개정	'24.3월	
	EDCF 현안점검회의 개최	'24.3월	
	대개도국차관 집행	'24.1~3월	
	수원국 정책협의	'24.1~3월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 개최	'24.3월	
2/4분기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4.5월	
	EDCF 현안점검회의 개최	'24.6월	
	EDCF 청년지역전문가(청년인턴) 선발 (35명 내외)	'24.4월	
	대개도국차관 승인·집행	'24.4~6월	
	수원국 정책협의	'24.4~6월	
	국제금융기구(MDB)와 협조용자 발굴/승인을 위한 업무협의 실시 (WB, ADB, AIIB, IDB, AfDB, CABEI 등)	'24.4~6월	
3/4분기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 개최	'24.4~6월	
	EDCF 현안점검회의 개최	'24.9월	
	대개도국차관 승인·집행	'24.7~9월	
	수원국 정책협의	'24.7~9월	
	국제금융기구(MDB)와 협조용자 발굴/승인을 위한 업무협의 실시 (WB, ADB, AIIB, IDB, AfDB, CABEI 등)	'24.7~9월	
4/4분기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 개최	'24.7~9월	
	EDCF 사업 승인 및 집행 현황 점검	'24.11월	
	EDCF 청년지역전문가(청년인턴) 운용 현황 점검	'24.12월	
	대개도국차관 승인·집행	'24.10~12월	
	국제금융기구(MDB)와 협조용자 발굴/승인을 위한 업무협의 실시 (WB, ADB, AIIB, IDB, AfDB, CABEI 등)	'24.10~12월	
	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 개최	'24.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①해외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우리기업, ②수원국 국민, ③우리나라 국가 위상 제고를 통한 전국민 간접 수혜
- **(이해관계집단)** ①EDCF 사업 참여(희망)기업, ②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③수원국 정부(차주, 사업실시기관) 등

□ 기대효과

- EDCF 사업 수주 계기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 발판 마련
-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아국 위상 제고
-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Ⅲ-3-①)		
① 대개도국차관(3331)	기금	15,030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Ⅲ-3-②)		
③ 대개도국차관지원(3376)	기금	318
		367

* '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 예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정상회담 연계 성과사업(MOU 등) 비율 (%)	-	-	26.8 (11/41)	27	EDCF 지원대상국과 정상회담 시 EDCF 관련 MOU 등을 체결한 '23년 실적 감안 '24년 목표 설정	(정상회담 연계 성과사업 수)/ (EDCF 지원대상국 정상회담 수)
1억불 이상 사업 승인 비중 (%)	57	65	79	90	우리기업이 선호하는 대형· 고부가가치 및 랜드마크형 사업 승인 비중 확대 추진	1억불 이상 사업 승인액/ 전체 사업 승인액 (%)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V-3-③)

□ 추진배경

- GCF 등 기후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개도국 기후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기관의 참여 활성화 모색
-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글로벌 기후 리더십 제고
 - UN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재원 논의에 적극 동참
 - GCF 이사국('22~'24년)이자 적용기금 이사국('20~24년)으로서 기금 운영정책 및 사업 승인 등에 기여하며 우리 위상 강화
- GCF가 핵심적인 기후 국제기구로 발전하도록 지원
 - GCF 2차 재원보충('24~'27년)에 3억불 공약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GCF 이사이자 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GCF 발전에 기여
 - GCF 본부 유치국으로서 사무국(인천 송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
- 국내 기업·기관의 기후사업 발굴 및 진출을 지원
 - GGGI 신탁기금, UNFCCC 협력사업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기관의 기후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 기후사업 진출지원TF를 통해 우리기업, 국제기구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개도국 기후사업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등 행사를 통해 기후 협력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관의 기후사업 참여 기회 확대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기후사업 진출지원 TF 회의 개최	'24.2월	
	· 손실과 피해 기금 관계부처 회의	'24.2월	
	· 기후재원 관련 간담회	'24.2월	
	· 제38차 GCF 이사회 대응	'24.3월	
	· GCF 사무국 업무협의	'24.3월	
2/4분기	· G20 기후 TF 대응	'24.4월	
	· AF 제42차 이사회 대응	'24.4월	
	·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회의 대응	'24.4월	
	· UNFCCC NCQG 회의 대응	'24.4월	
	· 기후사업 진출지원 TF 회의 개최	'24.6월	
	· UNFCCC 부속기구회의(SB) 대응	'24.6월	
3/4분기	· 제39차 GCF 이사회 대응	'24.7월	
	· G20 기후 TF 대응	'24.7월	
	· 기후사업 진출지원 TF 회의 개최	'24.9월	
	· 제10차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24.10~11월	
4/4분기	· AF 제43차 이사회 대응	'24.10월	
	· Pre-COP 대응	'24.10월	
	·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회의 대응	'24.10월	
	· G20 기후 TF 대응	'24.10월	
	· GCF 제40차 이사회 대응	'24.10월	
	· 기후사업 진출지원 TF 회의 개최	'24.11월	
	· UNFCCC COP29 대응	'24.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개도국 국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업 및 기관
- (이해관계집단) 환경부·산업부·과기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 관련 업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및 국내 ODA 관련 기구 등

□ 기대효과

- 기후변화 대응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후기금 발전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위상과 발언권 강화
-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 기업·기관의 개도국 진출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Ⅲ-1-국제금융협력 강화 지원)		
① 녹색기후기금 협력지원(3133)	일반	519.9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국고채무부담행위)(330)	일반	352.9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331)	일반	429.1
▪ 기후행동강화 지원(332)	일반	82.0
▪ 녹색기후기획사업(333)	일반	8.8
		89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22 '23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아국 기업·기관의 국제 기후사업 진출 지원	8	12	14	18	우리 기업·기관의 진출 수요, 경쟁력, 개도국 수요 등을 고려한 도전적 목표 설정	기후사업 TF 등 회의 및 행사 등 개최 건수 등	회의 및 행사 등 개최 실적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통한 아국 위상 강화	8	8	10	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국제 논의시 아국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해 적극적 목표 설정	국제논의 참여 사례 등	국제기후 기구 주요 역할 수임, 기후협상 논의 참여, 협정 체결 등 실적

④ KSP, EIPP를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 강화 (V-3-④)

□ 추진배경

- 성장 잠재력을 지닌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는 높으나, 기업의 정보부족, 개도국 재원부족 등 애로사항 존재
 - 우리 기업의 초기 진출이 어려운 국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협력 추진 필요
-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지식 및 기술 등을 개도국과 공유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외경제정책 지원) 아세안·유라시아 지역 등과의 KSP·EIPP 협력을 강화를 통해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지원
 - 정상회담, 재무장관 회담 등 고위급 정책협의시 KSP·EIPP를 경협 수단으로 적극 활용
- (전략적 경협 확대) KSP를 통해 해외 진출·수주 지원, 공급망 협력 등 전략적 경협 확대해 개도국과 상호 발전 추구
 - KSP와 연계한 투자포럼, 민간 사업제안 제도 등을 통해 개도국 기업 유치 및 우리 기업의 협력국 진출 지원
 - EDCF, 국제금융기구 차관 등과 연계하여 개도국 인프라 구축 및 우리 기업 해외수주 지원
 - 에너지, 광물 개발 등 공급망 협력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관련 개도국 산업 발전 및 국내 경제안보 기반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24/25년도 사업 선정(KSP 추진협의회 개최)	1~3월(3월)	
	○ 2024/25년도 사업 총괄기관 선정	1~5월	
	○ 2025/26년도 후보사업 검토 (2025년 무상원조시행계획(안) 작성·제출)	2~3월 (3월)	
2/4분기	○ 2023/24년도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4~6월	
	○ 2025/26년도 후보사업 심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국제개발협력위원회)	5~7월	
3/4분기	○ 2024/25년도 사업 사전협의	7~9월	
	○ 2023/24년도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6~10월	
	○ 2024/25년도 사업 수행기관 선정	8~10월	
	○ 2026/27년도 사업 신청 접수	6~11월	
	○ KSP 성과공유세미나	9월	
4/4분기	○ 2024/25년도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11~12월	
	○ 2023/24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검토	12월	
	○ 2025/26년도 사업 선정	12월~	
	○ 2026/27년도 후보사업 검토(사전타당성조사 등)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KSP·EIPP 협력국과 KSP·EIPP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부처,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
- (이해관계 집단) ODA 관련 정부부처·기관, ODA 국제기구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KSP 민간사업제안제 관련 관계기관·기업 간담회	'24.4월
현장방문	KSP 수원국과의 사전협의	'24.7월
회의	KSP 총괄기관 실무회의	수시

□ 기대효과

- EDCF·EDPF 등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수주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23	'24
KSP를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 강화(Ⅲ-3-일반재정⑤)		
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3234)	일반회계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301)		19,017 23,683
■ 경제혁신 파트너십 구축(303)		9,953 9,95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정책자문 제언항목 건수(건)	126 (KSP 123건) (EIPP 49건)	148 (KSP 154건) (EIPP 52건)	172 (EIPP 49건)	206 <실적 증가 추세 및 예산 증액을 반영한 목표 설정> ◦ '23년 실적 172건보다 20% 증가한 206건을 목표로 설정 - '24년 KSP-EIPP 예산이 증액 (23년 289.7억원→24년 336.4 억원 +16.1%)된 점을 고려 하여, 지난 2년간 실적증가 추이('21년→'22년: 17.5%, '22년→'23년: 16.2%)를 상회 하는 목표치 설정(172건 →206건, +20%) ◦ (KSP) 154건, +25.2% - 예산 증가를 고려하여 전년 실적 123건 대비 31건 상 향한 154건 목표 설정 ◦ (EIPP) 52건, +6.1% -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전년 실적 49건 대비 3건 상향 (16개 사업당 3~4건 제언)	협력국과의 공동연구컨설팅을 통한 정책제언 항목 건수	전수조사
정책채택 가능성(%)	신규 (KSP 평균 86.3) (EIPP 평균 83.5)	85.5 (KSP 평균 86.3) (EIPP 평균 83.5)	87	<전년 실적 대비 상향 목표 설정> ◦ 만점이 있는 설문조사의 특성 상 지속적 상향목표 설정 곤란 다만, 작년 점수(23년 85.5)를 능가하는 87점을 목표로 제시	협력국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정책채택 가능성 조사

-측정산식 : $\sum((정책반영 가능성(5점)-1)/(5-1))/(전체 사업수) \times 100\%$

(예시) 5점 응답시 채택가능성 점수: 5점 응답시 : 100% 4점 응답시 : 75% 3점 응답시 : 50%, 2점 응답시 : 25% 1점 응답시: 0%

- '23/'24 정책자문 완료 후 협력국 공무원 대상으로 실제 정책채택 가능성 조사

<질의문안>

Q. How likely is it for the policy recommendations to be implemented in your country?

1. Not at all 2. Very little 3. Somewhat 4. Quite a bit 5. A great deal

1. Not at all : 0% 2. Very little : 25% 3. Somewhat : 50% 4. Quite a bit : 75%
5. A great deal : 100%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① 【1단계】 분과위원회별 세부평가

- 자체평가 시행계획상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에 따라 각 실·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세부평가 수행
 - 위원회 개최 최소 1주일 전까지 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분과 위원에게 제공,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사전 검토시간 부여

② 【2단계】 전체위원회 최종평가

- 분과위원회 평가 자료를 토대로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평가 실시
- 실국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심의하여 평가점수 확정
 - * 분과위원회 1차 평가결과 실국 전달 → 실국 이의신청 접수(1주일) → 평가위원 재심의(1주일)
- 평가 결과는 변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7등급으로 상대평가

【 평가등급 분포 기준 】

순위 누적(%*)	등급	총 66개 과제
~상위 5%이내	A	1 ~ 3위
5%초과~20%이내	B	4 ~ 13위
20%초과~35%이내	C	14 ~ 23위
35%초과~65%이내	D	24 ~ 42위
65%초과~80%이내	E	43 ~ 52위
80%초과~95%이내	F	53 ~ 62위
95%초과~	G	63 ~ 66위

* 순위 누적 % = (순위/총 과제수) × 100%
단, 동 순위일 경우 정부업무평가 관련과제에 우선 순위 부여

③ 【3단계】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결과보고서 국무조정실 제출

④ 자체 평가일정 및 주요 논의사항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자체평가 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24.3.	혁신정책 담당관실	'24년도 자체평가시행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상반기 점검	'24.7.		성과관리시행계획上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	'24.8.		상반기 점검 결과시 평가위원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정
하반기 점검	'24.12.		성과관리시행계획上 년간 이행상황 점검
자체평가 실시	'25.1		계획수립, 시행과정, 정책성과, 정책영향 등 평가
자체평가 결과 확정	'25.2.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 의결
자체평가 결과 공개	'25.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및 홈페이지 게시

【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 구성

-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5개)* 구성·운영

* (분과위원회) 거시, 국제, 예산, 세제, 재정·공공 분야

② 위원회 운영

- 전체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 개최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평가결과 환류 체계

① 기본 원칙

- 자체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간접적으로 정책 완성도 제고에도 기여

② 평가결과 활용

- 실·국별로 자체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지적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시행
- 미흡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해 차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③ 개인 성과평가에 활용

- 평가결과를 내부성과평가(부서평가-정책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정책 추진 인센티브로 활용
- 국장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개인성과급 지급시 평가 결과 활용

※ 내부성과평가 체계 (2023년)

① 부 서 평 가			② 개 인 평 가			③ 가감점($\pm\alpha$)
계	1. 정책성과	2. 조직역량	계	3. 기여도	4. 교육훈련	개인
90%	75%	15%	10%	10%	0	(가점) 0.3~3점
~ 65%	~ 40%	~ 25%	~ 35%	~ 30%	~ 5%	(감점) 0.2~2점

* 상위직급일수록 정책성과 반영비중이 높은 구조

④ 우수사례 공유·확산

-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상·하반기 자체평가 실국 설명회 개최시 전파

⑤ 자체 평가결과 공개

- 자체 평가결과 최종 확정* 후 평가결과보고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및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평가 결과 최종 확정(국무조정실 '24.3월)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성과지표				정량지표	
		지표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5	4	1 (25%)	-	1 (25%)	2 (50%)	4 (100%)
성과목표	20	20	2 (10%)	- (%)	4 (20%)	14 (70%)	19 (95%)
관리과제	66	133	13 (10%)	2 (2%)	80 (60%)	38 (28%)	106 (80%)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실질 GDP 성장률	한국은행 발표	-	정량	결과	
	국가신용등급	신용평가사 발표	현등급 유지	정량	산출	
3.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국정과제 투자액	예산안 확인	5년간 ('24~'28) 209조	정량	투입	
4. 재정인프라 혁신	재정준칙 준수	재정준칙 관리기준 : 관리재정수지 $\geq \Delta 3\%$	재정준칙 관리기준 준수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1. 경제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	실질 GDP 성장률	IMF, 한은 발표	IMF 주요 선진국 평균 ±0.5%P	정량	결과	
2. 민간중심 경제기반 마련	비상경제관계장관 회의 등 개최횟수	개최횟수 측정	29회	정량	투입	
3. 경제체질 및 사회이동성 개선	15세 이상 고용률	월별 고용률의 연평균	62.7	정량	결과	
4. 공공기관 혁신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률	기관별 혁신계획 중 '24년까지 이행완료 예정인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분야의 이행률	90%	정량	결과	
5. 중장기 미래대비	중장기 전략 수립	분야별 중장기계획(전략) 발표건수	1	정량	결과	

II.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1.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자문회의 개최 건수	7	정량	결과	
2. 세제의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자문회의 개최 건수	7	정량	결과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개정세법 자문회의 개최 건수	자문회의 개최 건수	10	정량	결과	

III.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1. 건전재정기조 확립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25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	△3.0	정량	산출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고용부문·교육·문화·환경분야 투자규모	'25년 정부안 확인	66.7조원	정량	투입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R&D분야 총지출 증가율	'25년 예산안 R&D분야 총지출 증가율	증가	정량	산출	
4. 국민의 복지,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효율적 재정투자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25년 예산안 확인	3.0% 이상	정량	산출	
5. 공공·안전 및 국가적 협력투자 강화	체감형 공공질서·안전 사업군 투자비율 (민생범죄대응, 피해지원 및 재난정비)	'25년 예산안 확인	10.7%	정량	산출	

IV. 재정 인프라 혁신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 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만족도 점수	조세연 주관 공무원 및 재정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78.6	정량	결과	
2. 재정운용 관리강화	재정운용의 효율성 만족도(점)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79.9	정량	결과	
3. 국고운용 효율화	국고 제도개선 관련 정책고객 만족도(점)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87	정량	결과	
4.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설문기관 조사	76.3%	정성	결과	

V.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1. 국가 신인도 관리 및 금융 협력 강화	금융협력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평가	87.0	정량	결과	
2. 국익중심의 경제외교 후속 조치 및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변화 대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	FTA 체결국 교역액 / 총교역액	71.5%	정량	결과	
3.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제개발협력논의 참여에 대한 전문가 평가(점수)	국제개발협력 논의 관련 전문가 대상 만족도 조사	80점	정량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1. 경기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												
① 경제 활력 제고 ② 물가의 안정적 관리 ③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④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	① 경제 활력 제고	실질 GDP 성장률	IMF, 한국은행 발표	IMF 주요 선진국 평균 상회	정량	결과						
	② 물가의 안정적 관리	(공통)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청 발표	3.1 ^e	정량	결과						
	③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	BIS, 한은 발표	4.8%	정량	결과						
		부동산PF 개선 방안 마련	기재부, 금융위 발표	지침 개정, 법령 마련	정량	결과						
	④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	①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회의 실시 횟수	실시횟수	12	정량	산출						
		② 국제기구의 대외건전성 평가	국제기구의 대외건전성 발표	양호	정량	결과						
		③ 국제기구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	국제기구의 외환보유액 적정 발표	적정	정량	결과						
		④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정식 시행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시범운영 실시 횟수	10회	정량	산출						
			등록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RFI) 개수	20개	정량	산출						
2. 민간중심 경제 기반 마련												
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가동	관계부처 합동안건 수	안건 개수 측정 (서면안건 제외)	94	정량	산출							
	현장방문 후속조치 관련 대책 수	토론, 간담회 등 현장방문 관련 후속조치로 마련한 안건 개수 측정	8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중기 익스프레스 건의사항 해소건수	중기 익스프레스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의 애로해소 건수	15	정량	산출	
		유망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율(%)	월별 유망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율 평균	35.6%	정량	산출	
	③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	경제계 간담회 등 소통횟수	경제단체·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 소통횟수	20회	정량	투입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협회·기업· 전문가 등 현장방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협회·기업·전문가 등 현장방문 횟수	9회	정량	투입	

3 경제체질 개선

① 3대 구조개혁 및 사회이동성 개선		사회이동성 부문별 대책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정부대책 발표	대책 발표	정량	결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방안 마련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발표	3개	정량	산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개선방안 발표	정부대책 발표	대책 발표	정량	결과	
	②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월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연 평균	64.4	정량	산출	
		일자리 대책 마련	대책 수	3	정량	산출	
	③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미래세대 지원 강화	저소득층 자립지원 방안 마련	대책 발표	방안 마련	정량	결과	
		의료개혁 4대과제 추진	추진경과	제도 개선	정성	결과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과제 마련	정책 반영 건수	17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공공기관 혁신							
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②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 확립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①직무급 도입기관 수	직무급 도입기관 수	70	정량	산출	
		②'23년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억원)	재정건전화 이행금액(자산매각+사 업조정+경영효율화+수 익확대)	78,652	정량	산출	
	②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 확립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①경영공시 개편에 따른 알리오 연간 접속자 수(백만명)	알리오 시스템 접속자 수 월별 집계	17.2	정량	산출	
		②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 건수	개선과제 건수	20	정량	산출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①기술마켓 구매 실적(억원)	기술마켓 인증 제품(기술)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3,000	정량	산출	
		②수요기반 공공데이터 개방률(%)	공개결정건수 / 요청건수 x 100	54.5	정량	산출	
5. 중장기 미래대비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② 인구구조변화 대응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①중장기전략 수립 위한 의견수렴 노력(건)	중장기전략 관련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건수	55	정량	과정	
		②ESG 정책과제 마련(건)	기업 지원, 공시제도 정비 등 정책 마련 기여건수	3	정량	산출	
	② 인구구조변화 대응	①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한 대책 마련(건)	기획단 논의를 거쳐 저고위·비경 등을 통해 발표한 인구대책 횟수	4	정량	산출	
		①탄소중립 혁신과제 마련(건)	탄소중립 혁신과제 마련 횟수	6	정량	산출	
		②기후대응기금 내 비R&D 사업 '24년도 집행률 평균(%)	집행률 평균	9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1.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운영 ② 경제활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③ 금융세제 합리화 및 자산형성 지원 ④ 수출입 활성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세제도 선진화 ⑤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탄력관세 적극 운용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개최 여부	개최	정성	산출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개최 여부	개최	정성	산출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개최 여부	개최	정성	산출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현장의견 수렴 건수 (세발심전문가 이해관계자)	개최 여부	각 3회	정량	산출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기본관세율 대비 할당관세 조정폭	$[(\text{품목별 기본관세율} - \text{품목별 할당관세율})/\text{품목별 기본관세율}]$ 의 평균	80%	정량	산출	

2. 세제의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보완 ② 재산세제 과세 합리화 ③ 부가가치세제의 합리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개최 여부	개최	정성	산출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개최 여부	개최	정성	산출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개최 여부	개최	정성	산출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①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세수추계 오차율	10월까지 세수진도비 (최종예산 대비)와 최근 3년 평균 세수진도비 간 차이	5.0%	정량	산출	
----------------	----------	--	------	----	----	--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여부	개최	개최	정성	산출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③ 역외탈세 대응능력 강화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여부	개최	개최	정성	산출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마련	참석 여부	협정 마련	정성	산출		
④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대응	Pillar1 국제회의 참석	참석 여부	80%	정량	산출		
	Pillar2 간담회 개최여부	개최 여부	개최	개최	정성	산출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⑤ 국제조세협력 강화	조세조약 제·개정 협상 등	협상 개최실적	7	정량	산출		
	다자간 작업반회의, 양자 국제조세협의체	회의 참석·개최 실적	8	정량	산출		
	정보교환 이행규정 개정	법령 개정 여부	개정완료	정성	산출		
⑥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소비세제 개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여부	개최	개최	정성	산출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국회 통과 여부	국회통과	정성	산출		

III.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1. 건전재정기조 확립

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① 총지출 증가율	'25년 예산안 정부안 확인	5.4 이하	정량	산출	
	② 협업과제 수	'25년 예산안 정부안 확인	4개	정량	산출	
② 유사증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① 신규사업 유사증복 차단 건수	신규사업 중 유사증복 차단 건수(부처요구대비)	55개	정량	산출	
	② 국고보조사업 재량지출 증가율 관리	'25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보조금 재량지출 증가율 확인	3.5% 이내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효율성 제고		기금 총지출 대비 기본경비 비중(%)	기금기본경비/ 기금 총지출	0.371	정량	투입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수지차 보전기관 총지출* 대비 경상비 비율 *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의 합계	3.6	정량	투입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확충	① 일·가정양립 투자규모	'25년 예산안 편성 * '모성보호육아지원, '일기정양립 지원 단위사업 투자규모	3.15조원	정량	산출	
	② 청년일경험 참여인원 실적	'24년 일경험 참여인원 집계	4.1만명	정량	결과	
②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	①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25년 예산안 반영여부 확인	20만명 ('25년 예산)	정량	산출	
	② 글로컬 대학 선정 건수(누적)	'24년 선정결과 확인	20건 (누적 건수)	정량	산출	
③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	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상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2년 최초도입된 것으로서, 시행초기임을 감안, 전년대비 2%이상 높은 수준으로 목표 설정	300개	정량	결과	
	② 문화격차 해소 지원	소득·지역 등에 따른 문화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 전년대비 2만명 확대	274만명	정량	결과	

3.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① 수출 우상향· 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등 민간활력 견인	① 수출 우상향 관련 재정 지원규모	수출역량 강화 관련 예산 합계	6,150억원	정량	투입	
	② 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관련 재정 지원규모	창업지원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 합계	4,525억원	정량	투입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SOC 및 농어촌 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	② SOC 및 농어촌 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	① 교통격차 완화 및 교통 편의·안전 제고 투자 규모	교통 격차 완화 및 교통편의·안전제고 관련 예산 합계	4.45조원	정량	투입	
		② 농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규모	농어업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 합계	5,470 억원	정량	투입	
	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① 12대 국가 전략기술 R&D 투자규모	12대 국가 전략기술 R&D 예산 합계	5.3조원	정량	투입	
		②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규모	디지털 분야 (AI·SW 등) 인재양성 규모	2.55만명	정량	산출	

4. 국민의 복지,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효율적 재정투자

	① 두터운 약자복지 및 저출산 대응 강화	①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률	정부안 예산 규모 확인	6.09	정량	결과	
		②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가구 수	정부안 예산 규모 확인	12.6	정량	결과	
	② 의료개혁 4대과제 적극 뒷받침	① 필수의료 관련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횟수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면담 횟수	10	정량	투입	
		②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사업 예산 반영 현황	정부안 예산 규모 확인	7,772억원	정량	결과	
	③ 재난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① 재난안전투자 확대	안전예산 규모	24.1조원	정량	결과	
		② 소방 훈련·장비 투자 확대	관련 사업 규모	696억원	정량	결과	
		③ 해양 안전관리 투자 확대	관련 사업 규모	420억원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5. 공공·안전 및 국가적 협력 투자 강화							
① 민생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① 민생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① 미약스토킹보이스 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예산 확대 (%)	관련 분야 '24년 예산 대비 '25년 증가율	+5.6%	정량	투입	
		② 사회적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천건) * 범죄피해자, 장애인, 보호아동 등 대상	'24년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	16.3천건	정량	산출	
	② ODA 투자효과성 제고	① 기후대응보건디지털 ODA 투자비율(%)	'25년도 예산편성 규모	40%	정량	투입	
		② ODA 융합 프로그램 신규 발굴 개수(건)	융합 프로그램 건수 집계	78개	정량	산출	
	③ 국방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①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확대(억원)	'25년 예산 정부안 제출기준	63,210억원	정량	투입	
		② 군 복무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률(%)	'25년 예산안 반영액/ 목표액	95%	정량	과정	

IV. 재정인프라 혁신

① 중·장기적 재정총량 관리	'24~'28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평균치 하회(과거 10년 평균* 7.5%)	정량	결과	
	통계정비 및 신규지표 도입 검토 건수	건수	2건	정량	결과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마련	방안 마련 여부	방안 마련	정성	결과
	③ 재정지속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재정준칙관련 국회 설명·설득 횟수	의원실 등 방문설명 횟수	75	정량	결과
		재정교육 이수자수	재정교육 최종 이수자 수의 합	5,282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재정운용 관리강화							
① 재정집행 관리강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②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내실화 ③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부담금 관리	① 재정집행 관리강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①상반기 재정집행률(%)	(관리대상사업 상반기 집행액 / 예산액) × 100	65%	정량	산출	
		②민자사업 집행률(%)	투자집행 금액 / 투자집행 계획	97%	정량	산출	
	②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내실화	①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예타 조사 선정 이후 평균 조사기간(개월)	17.1개월	정량	산출	
		②예타제도 운영 개선	지침 개정 및 R&D 예타 개선방안(안) 마련 여부	지침개정	정성	결과	
	③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부담금 관리	①연중평균대상사업 중 사업정비(폐지, 감축 통폐합) 건수 비율(%)	(폐지,감축,통폐합 사업건수/평가대상 사업 건수) × 100	52.9%	정량	산출	
		②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 정비건수	국민부담 경감 부담금 정비건수	18건	정량	산출	
3. 국고운용 효율화							
① 효율적 자금관리 및 국채시장 선진화 ②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 ③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	① 효율적 자금관리 및 국채시장 선진화	국고금 통합계정 일일 평균잔고 (억원)	D-brain 이용해 통합계정 일일 평잔 측정	3,000	정량	산출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조원)	금융감독원 통계	237.2	정량	산출	
	②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	기재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 활용 전환 건수(필지)	'23년도 말 기준 보유재산 및 '24년 신규유입 재산 중 대부 등으로 활용전환된 필지수	18,908	정량	산출	
		일반회계 배당수입 예산달성을(%)	정부출자수입 본예산 대비 배당실적(일반회계)	104.8	정량	산출	
	③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	조달특례 성과관리 방안 마련	부처 개별법으로 산발적 도입·운영된 중인 조달특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체계 도입	대책 마련	정성	결과	
		국가계약제도 개선 이행건수	법 개정안 국회제출 시행령·예규 개정	43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① 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및 홍보 강화	복권기금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인지도(%)	설문기관 조사	63.5	정량	결과		
	② 복권사업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복권수익금 증가율(%)	복권수익금 실적	6.9	정량	산출		
		복권의 사행성 평가(%)	설문기관 조사	40.4	정량	결과		
V.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1. 국가신인도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① 한국 경제 홍보 및 대외 신인도 관리	① 한국경제 홍보활동 실시횟수	홍보활동 등 횟수 측정 및 홍보대상·수단별 가중치 반영	400	정량	산출		
	②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① 외환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대책 발표	대책 발표	정량	결과		
			국회 제출	법령 개정안 마련	정량	결과		
			시스템 구축·개시	시스템 구축	정량	결과		
	③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	② 신산업 관련 외환서비스 제도 개선 수	각 제도별 운영실적 합산(건수)	15	정량	산출		
		① G20·ASEAN+3 등 국제협의체 결과문서에 우리측 제안 반영	정상회의 아국 의견개진 : 회당 30점 장관회의 반영 : 회당 20점	310	정량	결과		
		② 양자회의 및 면담 개최	미·일·중 장관급 이상 회의·면담: 회당 20점 그 외 국가 장관급 이상 회의·면담: 회당 10점 미·일·중 차관급 이하 회의·면담: 회당 10점 그 외 국가 차관급 이하 회의·면담: 회당 5점	400	정량	산출		
2. 국익중심의 경제외교 후속조치 및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변화 대응								
	① 경제외교 후속조치 통한 국내경제 역동성 제고기여	애로사항 해소 컨설팅 대상 기관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관련 컨설팅을 받아 해소한 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평균적인 만족도를 측정	평균 3점 이상 (5점만점)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역량 제고		통상환경 변화 및 공급망 대응 관련 안건의 장관급 회의체 상정 건수	통상환경 변화 대응 관련 대경장 등 장관급 회의체에 상정한 안건 건수	2	정량	산출	
		FTA전문가 평가점수	전문가 pool을 대상으로 평가집계	92.5	정량	산출	
	③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및 FTA 활용촉진	FTA 특혜관세 활용제고 추진실적	FTA관세법령 개정건수, FTA 제도개선건수 등 합산	29건	정량	산출	

3.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MDB 신탁기금 사업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정성지표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정성	결과	
①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아국 영향력 제고 및 인력·기업 진출 지원 사례(단위: 건)	아국 영향력 제고 및 인력·기업 진출 지원 사례 조사	20	정량	결과	
		정상회담 연계 성과사업(MOU 등) 비율 (%)	(정상회담 연계 성과사업 수)/(정상회담 수)	15	정량	산출	
	②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1억불 이상 사업 승인 비중 (%)	1억불 이상 사업 승인액/ 전체 사업 승인액 (%)	90	정량	산출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아국 기업·기관의 국제 기후사업 진출 지원	기후사업 TF 등 회의 및 행사 개최 건수 등	18	정량	결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통한 아국 위상 강화	국제논의 참여 사례 등	12	정량	결과	
	① KSP,EIPP 를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 강화	①정책자문 제언 항목건수	정책자문 제언항목 건수(건)	215	정량	결과	
		②정책채택가능성	협력국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87	정량	결과	

불임1-2**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경제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		
1. 경기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① 경제 활력 제고		국정 19
② 물가의 안정적 관리		국정 19, 민생
③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국정 19
④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		국정 19
2. 민간중심 경제 기반 마련		
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 가동		국정 19, 업무 1-1-③, 연두 5
②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국정 3, 18, 21, 22, 23, 24, 25, 26, 28, 31, 32, 74, 75, 77, 78, 79, 117 연두 10, 16, 17, 18, 19, 민생
③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		국정 16, 업무 3-2-④
3. 경제체질 개선		
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국정 42, 49, 51
②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국정 50, 52
③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청년지원 강화		국정 45, 47, 53, 66, 67
4. 공공기관 혁신		
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국정 15
②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 확립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국정 15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국정 15
5. 중장기 미래대비		
① 미래사회변화 대응		업무 4(「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국정 17, 18, 86 업무 3-2-④, 4-2-⑤
② 인구구조변화 대응		국정 50 업무 3-3-①, 4-2
③ 탄소중립 기반 구축		국정 86, 87, 88, 89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I.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1.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운영 ② 경제활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③ 금융세제 합리화 및 자산형성 지원 ④ 수출입 활성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세제도 선진화 ⑤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탄력관세 적극 운용	국정 18	
	국정 18	
	국정 18, 36, 민생	
	자체 발굴	
	자체 발굴	
2. 세제의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보완 ② 재산세제 과세 합리화 ③ 부가가치세제의 합리화	국정 8, 43, 민생	
	국정 8, 18	
	국정 43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①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②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③ 역외탈세 대응능력 강화 등 국제조세제도 선진화 ④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대응 ⑤ 국제조세협력 강화 ⑥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소비세제 개편	자체 발굴	
	국정 19	
III.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핵심투자		
1. 건전재정 기조 확립		
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② 유사중복 통폐합 및 관행적 보조사업 구조조정 ③ 기금 및 정부출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	
	-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2. 미래대비·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국정 50, 51, 52, 53, 54, 55, 90)
	②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지원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등 (국정 81, 82, 83, 84, 85, 90)
	③ 미래대비 기후대응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지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 (국정 58, 61, 62, 86, 87, 88, 89)
3.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① 수출 우상향·중소벤처 생태계 혁신 등 민간활력 견인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국정 20) 중소기업 정책 재설계(국정 31), 민생
	② SOC 및 농어촌 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국정 39) 농산촌 지원 강화(국정 70)
	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국정 74) 디지털 혁신 가속화(국정 78) 등
4. 국민의 복지,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효율적 재정투자		
	① 두터운 약자복지 및 저출산 대응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 29)
	② 의료개혁 4대과제 적극 뒷받침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 66)
	③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정 65)
5. 공공·안전 및 국가적 협력 투자 강화		
	①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 63, 64, 69)
	② ODA 투자 효과성 제고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③ 국방분야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등 (국정 103, 104, 107, 108)
IV. 재정인프라 혁신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① 중·장기적 재정총량 관리	
	②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③ 재정지속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국정 5
2. 재정운용 관리강화		
	① 재정집행 관리강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국정19-2, 국정5-2
	②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내실화	국정5-6
	③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부담금 관리	국정5-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3. 국고운용 효율화		
	① 효율적 자금관리 및 국채시장 선진화	국정 19, '24년 경제정책방향 1-[1]-①, 1-[2]-①~③
	② 국유재산의 공익적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	국정 5, '24년 경제정책방향 1-[2]-①·2-[5]-① 및 4-[2]-③
	③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 혁신	국정 29, '24년 경제정책방향 1-[1]-① 및 2-[5]-①
4.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① 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 및 홍보강화	국정 48, 66
	② 복권사업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및 건전성 관리 강화	국정 48, 66
V.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		
1. 국가 신인도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① 한국 경제 홍보 및 대외 신인도 관리	국정과제 19
	② 외환거래 제도·인프라 선진화	국정과제 36
	③ 국제 정책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	국정과제 96
2. 국익중심의 경제외교 후속조치 및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변화 대응		
	① 경제외교 후속조치 통한 국내경제 역동성 제고기여	국정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민생
	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역량 제고	국정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③ 양자다자 통상협력 강화 및 FTA 활용 촉진	
3.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① 국제개발협력 분야 한국의 역할 강화	국정 99, '24년 경제정책방향 1-3-③
	② EDCF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정 99, '24년 경제정책방향 1-3-③
	③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강화	국정 61, 국정 99 '24년 경제정책방향 1-3-③
	④ KSP, EIPP를 통한 개도국 진출지원 강화	국정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